

DIPLOMATIC SERVICE EXAM · ESSAY

외교관후보자 2차 기출 완성

제2권 국제정치학

2016~2026년 제2차시험 기출 · 자습용 · 2026년 10월 판

차례

일러두기	3
제0장 시험 이해	4
0-1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형식	5
0-2 11개년 출제 지도	5
0-3 주제별 빈도	6
0-4 국제정치학 답안 쓰는 법	6
0-5 학습 계획	7
제1장 국제정치이론과 무정부 하의 협력	8
1-1 핵심 개념	9
1-2 기출 풀이	12
2018 제1문 무정부 하의 협력 — 월츠, 공격적 현실주의, 오이	12
2023 제1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 이론	14
제2장 세력균형 · 세력전이 · 패권	16
2-1 핵심 개념	17
2-2 기출 풀이	20
2019 제1문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안정 · 세력전이	20
2021 제1문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 세력균형 · 세력전이 · 이익균형	22
2022 제2문 패권안정이론과 2008년 이후 패권의 역할	24
2020 제1문 독일과 소련의 부상 — 신현실주의와 동맹의 신뢰성	26
제3장 안보 딜레마 · 동맹 · 핵억지	28
3-1 핵심 개념	29
3-2 기출 풀이	32
2021 제2문 공격-방어 이론과 사이버 안보 딜레마	32
2022 제1문 냉전과 탈냉전의 동맹, 한미동맹의 동맹 게임	34
2019 제2문 북한 핵문제 — 핵확산 낙관론·비관론과 안정-불안정 역설	36
2024 제2문 알츠의 합리적 억지론과 조직과정모델의 반론	38
제4장 외교정책결정이론	40
4-1 핵심 개념	41
4-2 기출 풀이	43
2016 제3문 집단사과의 문제점과 예방법	43
2020 제2문 양면게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45
2026 제3문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 전망이론과 양면게임	47
제5장 국제정치경제	49
5-1 핵심 개념	50
5-2 기출 풀이	53
2016 제1문 금본위제 — 영국의 패권과 국내정치에 의한 붕괴	53
2017 제2문 브레튼우즈 II의 특징과 지속가능성	55
2018 제2문 금융 세계화와 삼위불일체	57
2025 제1문 무역정책의 국내정치 — 요소·부문 모델, 집단행동, 선거제도	59
2025 제3문 AIIB — 신자유제도주의와 신현실주의	62
2026 제2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 무역과 기후의 논란	64
제6장 글로벌 거버넌스 · 인간안보 · 대외원조	66
6-1 핵심 개념	67
6-2 기출 풀이	69
2017 제3문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과 변화 — 힘 · 이익 · 정체성	69
2019 제3문 대외원조 — 모겐소 비판과 영국 국제개발부의 주장	71
2023 제2문 인간안보 — 분쟁과 저개발의 악순환, 난민 문제와 안보화	73
제7장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그 위기	75

7-1 핵심 개념	76
7-2 기출 풀이	78
2024 제1문 아이켄베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그 도전	78
2026 제1문 카의 『20년의 위기』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80
제8장 외교사 I — 유럽협조체제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82
8-1 핵심 개념	83
8-2 기출 풀이	86
2022 제3문 유럽협조체제와 100년의 평화 — 세 분석 수준	86
2024 제3문 유럽협조체제 이후의 세력균형과 강대국 협조의 계승	88
2016 제2문 러일전쟁 — 세력균형, 러일 화해, 동아시아	90
2020 제3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 한국 무장독립운동	92
2021 제3문 20세기 전반 미일관계 — 문호개방에서 삼국동맹까지	94
2023 제3문 뮌헨협정 이후와 중국의 대만 정책	96
제9장 외교사 II — 냉전기 동아시아와 미·중·소 삼각관계	98
9-1 핵심 개념	99
9-2 기출 풀이	101
2017 제1문 한국전쟁 — 소련의 동의, 중국의 참전, 봉쇄정책	101
2018 제3문 닉슨 독트린과 방기·연루	103
2025 제2문 중소분쟁과 미중 화해 — 신현실주의와 동맹딜레마	105
부록 참조 자료	107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108
부록 B 주제 색인	109
부록 C 이론가와 저서	110

일러두기

■ 이 권의 구성

이 책은 2016~202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국제정치학** 기출 33개 대문(11년 × 3문)을 주제별로 다시 묶은 자습서이다.

- **0장 시험 이해** —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배점 구조, 11개년 출제 지도, 주제별 빈도, 국제정치학 답안 쓰는 법, 4주 학습 계획.
- **1~9장 주제별 기출** — 장마다 ‘핵심 개념’(개념 카드 4~6개)과 ‘기출 풀이’로 나뉜다. 기출 풀이는 문항마다 원문 → 출제 포인트 → 답안 개요 표 → 예시답안 순서이다.
- **부록** — A 연도별 문항 일람, B 주제 색인(개념 → 기출 문항), C 이론가·저서 정리.

33개 대문은 모두 한 번씩, 가장 가까운 장에 실었다. 한 문항이 여러 장에 걸치는 경우(예: 2020 제1문은 세력 균형과 동맹)에는 개념 카드의 ‘쓰이는 기출’과 부록 B에서 서로 찾아갈 수 있게 했다.

■ 공부하는 법

1. 장 첫머리의 개념 카드를 읽고, 카드 아래 ‘답안 속 문장’을 자기 말로 다시 써 본다.
2. 기출 원문과 출제 포인트만 보고 개요를 먼저 짤다. 답안 개요 표와 비교해 빠진 논점을 확인한다.
3. 시간을 재고 답안을 쓴 뒤 예시답안과 소문별로 대조한다.
4. 같은 이론이 해를 바꾸어 반복 출제되므로(0장 참조), 장 단위로 묶어 복습한다.

■ 예시답안의 기준

- 분량은 배점에 비례해 점당 약 50~70자(공백 포함)로 맞추었다. 40점 대문이면 2,000~2,800자 안팎이다. 실제 시험의 답안지 분량과 시간은 매년 인사혁신처 공고로 확인한다.
- 문체는 평서문(~이다, ~한다)이고, 소문 번호 1), 2)를 그대로 따랐다.
-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이론·학자·저서의 귀속과 조약·사건의 연도는 확인된 것만 썼고, 확실하지 않은 날 짜는 ‘1930년대 후반’처럼 시기로 적었다.
- **2025~2026년 시사 문항**(트럼프 2기 관세, AIIB,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문제지에 주어진 사실만 전제로 썼다. 문제지 밖의 날짜·수치·발언은 만들어 넣지 않았다.
- 예시답안은 하나의 모범 경로일 뿐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같은 문항을 다른 이론이나 사례로 써도 논리가 정확하면 좋은 답안이다.

■ 표기 기준

- 외국 학자 이름은 문제지의 표기를 우선했다(예: 왈츠/월츠는 문제지마다 다르므로 해당 문항의 표기를 따름). 처음 나올 때 원어를 괄호에 적었다.
- 책은 『』, 논문·보고서·연설은 「」로 표시했다.
- 문제지 원문은 철자까지 그대로 옮겼다(예: 2018 제2문의 ‘Flemming’). 원문 대조 과정에서 2단 조판 문제지(2016~2023)는 페이지 이미지로 줄 순서를 확인했다.

■ 저작권 주의

기출 문항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공개된 문제지에서 옮겼다. 외부 배포·판매 전에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개념 정리와 예시답안은 이 책을 위해 새로 쓴 것이다.

제0장

시험 이해

2016~2026년 국제정치학 기출 33문항 | 출제 지도 · 주제별 빈도 · 답안 쓰는 법 · 학습 계획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0-1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형식	5
0-2 11개년 출제 지도	5
0-3 주제별 빈도	6
0-4 국제정치학 답안 쓰는 법	6
0-5 학습 계획	7

0-1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형식

국제정치학 문제지는 매년 **대문 3개(제1문~제3문)**로 이루어지고, 대문마다 소문 1)~3)이 딸린다. 배점은 문제지에 대문 총점과 소문 배점으로 명시된다. 시험 시간, 답안지 형식, 과목 편성 같은 사항은 문제지에 나오지 않으므로 **매년 인사혁신처 공고로 확인**한다.

연도	대문 배점(제1·2·3문)	특징
2016, 2017, 2025	50 · 30 · 20	제1문이 절반. 2016 제3문·2017 제3문은 소문 없는 단일 문항
2018~2024, 2026	40 · 30 · 30	가장 흔한 구성. 소문 배점은 10~24점

배점에서 읽는 것

대문 총점은 늘 100점이다. 50점짜리 제1문이 있는 해는 그 문항이 합격을 가른다. 소문 배점은 **분량의 지시**이기도 하다. 이 책의 예시답안은 점당 약 50~70자(공백 포함)로 썼다. 40점 대문이면 2,000~2,800자, 10점 소문이면 500~700자 정도다.

0-2 11개년 출제 지도

연도	제1문	제2문	제3문
2026	카『20년의 위기』·역외균형·지정학 (40, 7장)	EU 탄소국경조정제도 (30, 5장)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전망 이론·양면게임 (30, 4장)
2025	무역정책의 국내정치: 요소·부문 모델, 집단행동, 선거제도 (50, 5장)	중소분쟁·미중 화해: 신현실주의·동맹딜레마 (30, 9장)	AIIB: 신자유제도주의·신현실주의 (20, 5장)
2024	아이켄베리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도전 (40, 7장)	왈츠 합리적 억지론·조직과정모델 (30, 3장)	유럽협조체제 이후 세력균형·강대국 협조 (30, 8장)
2023	러-우 전쟁: 모겐소·월츠·제도주의·웬트 (40, 1장)	인간안보·난민 문제와 안보화 (30, 6장)	뮌헨협정과 중국의 대만 정책 (30, 8장)
2022	냉전·탈냉전 동맹, 한미동맹의 동맹 게임 (40, 3장)	패권안정이론과 2008년 이후 (30, 2장)	유럽협조체제와 100년의 평화 (30, 8장)
2021	미중 불확실성: 세력균형·세력전이·이익균형 (40, 2장)	공격-방어 이론과 사이버 안보 딜레마 (30, 3장)	20세기 전반 미일관계 (30, 8장)
2020	독일·소련의 부상: 신현실주의·동맹 신뢰성 (40, 2장)	양면게임과 한미 FTA (30, 4장)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과 한국 무장독립운동 (30, 8장)
2019	미국 우선주의: 패권안정·세력전이 비판 (40, 2장)	북핵: 핵확산 낙관·비관론, 안정-불안정 역설 (30, 3장)	모겐소 대외원조론 비판, 영국 국제개발부 (30, 6장)
2018	무정부 하의 협력: 월츠·공격적 현실주의·오이 (40, 1장)	금융 세계화와 삼위불일체 (30, 5장)	닉슨 독트린과 방기·연루 (30, 9장)
2017	한국전쟁: 책임전가·신고전현실주의·봉쇄 (50, 9장)	브레튼우즈 II의 지속가능성 (30, 5장)	글로벌 거버넌스: 함·이익·정체성 (20, 6장)
2016	금본위제: 영국의 패권과 국내정치 (50, 5장)	러일전쟁과 러일 화해 (30, 8장)	집단사고의 문제와 예방 (20, 4장)

0-3 주제별 빈도

33개 대문을 이 책의 아홉 장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막대는 문항 수다.

장	주제	문항	배점 합	분포
1	국제정치이론과 무정부 하의 협력	2	80	██████
2	세력균형 · 세력전이 · 패권	4	150	██████████
3	안보 딜레마 · 동맹 · 핵억지	4	130	██████████
4	외교정책결정이론	3	80	████████
5	국제정치경제	6	210	██████████████
6	글로벌 거버넌스 · 인간안보 · 대외원조	3	80	██████████
7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그 위기	2	80	██████
8	외교사 I (1815~1941)	6	180	██████████████
9	외교사 II (냉전기 동아시아)	3	110	██████████
	합계	33	1,100	

■ 출제 경향 다섯 가지

1. **외교사는 거의 매년 한 문항.** 2019년과 2026년을 빼면 매년 한 문항 이상 외교사가 나왔다(2017·2018·2025는 냉전기, 나머지는 1815~1941년). 연대와 조약 이름의 정확성이 점수를 가른다.
2. **국제정치경제는 큰 배점으로 나온다.** 11년 가운데 5년에 출제되었고, 2016·2025 제1문은 50점이었다. 통화(금본위·브레튼우즈·트릴레마)와 무역(국내정치·CBAM) 두 줄기를 모두 준비한다.
3. **같은 이론이 해를 바꾸어 다시 나온다.** 패권안정론(2016·2019·2022), 왈츠의 핵확산론(2019·2024), 양면게임(2020·2026), 방기와 연루(2018·2022·2025), 유럽협조체제(2022·2024), 미중 세력전이(2019·2021).
4. **시사는 이론의 재료다.** 트럼프 관세(2025), CBAM(2026), 이란 전쟁(2026), 러-우 전쟁(2023)은 모두 특정 이론으로 설명하라는 형식이다. 시사 지식보다 이론을 정확히 대입하는 능력을 본다.
5. **이론가 이름이 문제지에 직접 나온다.** 월츠, 오이, 모겐소, 웬트, 퍼트남, 슈월러, 스나이더, 아이켄베리, 앨리슨, 카. 학자-저서-핵심 명제를 짚지어 외운다(부록 C).

0-4 국제정치학 답안 쓰는 법

■ 개요 → 서론 한 줄 → 소문별 번호 → 결론

답안은 **소문 번호를 그대로** 따른다. 서론은 문제의 사건과 쓸 이론을 한두 문장으로 밝히고, 결론은 마지막 소문 끝에 두세 문장으로 붙인다. 채점자는 소문별로 점수를 매기므로 소문 사이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 이론 적용의 네 걸음

걸음	할 일	예(2018 제1문 2)
①	개념 정의 — 누가, 어디서	죄수의 딜레마와 사슴사냥의 선호 순서, 오이 편 『무정부 하의 협력』 (1986)
②	이론의 핵심 가정 2~3개	무정부·기만의 공포·상대적 이득(신현실주의) / 보수 구조·미래의 그림자·행위자 수(오이 등)
③	사례에 대입 — 문제지의 사실을 인용	반복 게임에서 맞대응, 쟁점 분할, 레짐의 감시 기능
④	평가·비교 — 설명력과 한계	경제 영역과 안보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의 차이

■ 지시어가 요구하는 것

지시어	요구하는 내용	기출 예
설명하시오	개념·인과 관계를 정확히 서술. 평가는 짧게	2024 제1문 1), 2021 제2문 1)
논하시오	주장 + 근거 + 반론·한계. 입장을 드러낸다	2017 제2문 2), 2026 제1문 2)
비판하시오	대상 이론 요약(짧게) → 비판 근거 여러 개	2019 제3문 1), 2026 제1문 1)
비교하시오	같은 기준으로 둘을 나란히. 공통점·차이점	2021 제1문 2), 2025 제1문 1)·3)
○○의 입장에서 / 시각으로	그 이론의 가정에서 출발해 결론까지. 다른 이론 섞지 않기	2018 제1문 1), 2025 제3문

자주 하는 실수

① 이론을 소개만 하고 문제의 사례에 대입하지 않는다. ② 학자와 저서를 틀리게 짝짓는다(예: 안정-불안 정 역설을 잭 스나이더로, 조직과정모델을 관료정치모델로). ③ 2025~2026년 시사 문항에서 문제지에 없는 날짜·수치를 지어낸다. ④ 소문이 '각각'을 요구하는데 하나로 뭉쳐 쓴다.

0-5 학습 계획

주차	범위	할 일
1주	0장, 1장, 2장	개념 카드의 '답안 속 문장'을 직접 써 보기. 2019·2021 제1문 개요를 표로 작성
2주	3장, 4장	저비스 2×2, 엘리슨 세 모델, 양면게임 원형을 백지에 그리기. 2019 제2문·2024 제2문 비교
3주	5장, 6장, 7장	통화 체제 연표와 트릴레마 표 암기. 2016·2025 제1문 (50점) 시간 재고 쓰기
4주	8장, 9장, 부록	연표 1·2와 냉전 연표를 빈칸 채우기로 복습. 부록 A로 연도별 실전 모의(3문항 한 세트)

실전 팁

예시답안을 읽기 전에 **답안 개요 표만 보고** 먼저 써 본다. 쓴 뒤에는 예시답안과 소문별로 대조해 빠진 개념·사례를 표시한다. 같은 이론이 반복 출제되므로, 한 번 쓴 답안의 문단은 다른 문항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부품'으로 정리해 둔다.

제1장

국제정치이론과 무정부 하의 협력

연결 기출: 2018 제1문 · 2023 제1문 | 함께 볼 장: 2장(세력전이), 6장(글로벌 거버넌스), 7장(카와 이상주의)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1 핵심 개념	9
1-2 기출 풀이	12
2018 제1문 무정부 하의 협력 — 월츠, 공격적 현실주의, 오이	12
2023 제1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 이론	14

1-1 핵심 개념

국제정치학 시험의 대문 하나는 거의 언제나 **이론 하나를 사례에 대 보는** 구조다. 이 장은 그 바탕이 되는 세 패러다임(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과 무정부 상태에서의 협력 논쟁을 정리한다. 이론을 쓸 때는 **누가, 어떤 책에서, 어떤 가정 위에** 세운 주장인지까지 정확히 적어야 점수가 난다.

고전적 현실주의 — 모겐소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1948)에서 국제정치를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보았다. 그 뿌리는 인간 본성에 있는 지배욕(animus dominandi)이다. 국가는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을 추구하며, 대외정책은 현상유지·제국주의·위신 정책으로 나뉜다. 그는 세력균형과 신중한 외교(prudence)를 평화의 조건으로 들었고, 정치적 현실주의의 여섯 원칙(제2판, 1954)을 제시했다.

대립 구도

인간 본성(제1이미지)에서 출발하는 고전적 현실주의 ↔ 체제 구조(제3이미지)에서 출발하는 신현실주의
쓰이는 기출 2023 제1문 1), 2019 제3문(대외원조론)

답안 속 문장

“모겐소에게 전쟁의 궁극적 원인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이고, 국가 행동의 차이는 그 본성을 다루는 지도자의 판단과 외교의 질에서 나온다.”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 — 월츠

월츠(Kenneth Waltz)는 『인간, 국가, 전쟁(Man, the State and War)』(1959)에서 전쟁 원인을 개인·국가·국제체제의 세 이미지로 나누고, 『국제정치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79)에서 체제 수준 이론을 세웠다. 구조는 ① 배열 원리(무정부), ② 단위의 기능 분화(무정부 하에서는 분화되지 않음), ③ 능력의 분포(극성)로 정의된다. 무정부 하의 국가는 **자조(self-help)**에 의존하고 생존을 위해 안보를 추구하므로 세력균형이 반복해서 형성된다. 국가는 상대적 이득에 민감하고 상대의 기만을 두려워하므로 협력이 어렵다.

대립 구도

방어적 현실주의(월츠: 국가는 적절한 안보를 추구) ↔ 공격적 현실주의(미어샤이머: 국가는 상대적 권력을 극대화)

쓰이는 기출 2018 제1문, 2023 제1문, 2020 제1문 1), 2025 제2문 1), 2025 제3문 2)

답안 속 문장

“월츠의 이론은 특정 전쟁이 왜 그때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무정부 체제에서 전쟁이 왜 반복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 미어샤이머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2001)에서 다섯 가정 — ① 무정부, ② 강대국은 공격 능력을 가짐, ③ 타국 의도의 불확실성, ④ 생존이 최우선 목표, ⑤ 합리적 행위자 — 으로부터 **강대국은 권력을 극대화하고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는 결론을 끌

어낸다. 그는 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고도 현상유지 편향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균형화가 비효율적일 때 국가는 책임전가(buck-passing)를 선호하고, 경쟁국을 소모시키는 미끼와 출혈(bait and bleed), 피흘리게하기(bloodletting) 전략도 쓴다.

쓰이는 기출 2018 제1문 1), 2017 제1문 1), 2026 제1문 2)(역외균형)

답안 속 문장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보면 월츠의 ‘적절한 안보’는 무정부 상태의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은 결론이다. 의도를 확인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는 가장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제도주의와 무정부 하의 협력

코헤인(Robert Keohane)은 『패권 이후(After Hegemony)』(1984)에서 국제제도(레짐)가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기만을 감시해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액셀로드(Robert Axelrod)는 『협력의 진화(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에서 반복 죄수의 딜레마에서 **맞대응(tit-for-tat)** 전략이 협력을 낳는다는 것을 보였다. 오이(Kenneth Oye)가 엮은 『무정부 하의 협력(Cooperation Under Anarchy)』(1986)은 협력을 좌우하는 세 변수로 ① 보수 구조, ② 미래의 그림자, ③ 행위자의 수를 제시했다.

대립 구도

절대적 이득·제도의 효과(신자유제도주의) ↔ 상대적 이득·기만의 공포(그리코 등 신현실주의)

쓰이는 기출 2018 제1문 2), 2023 제1문 2), 2025 제3문 1)

답안 속 문장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라는 전제를 공유한다. 갈라지는 지점은 국가가 상대적 이득과 절대적 이득 가운데 무엇에 더 민감한가, 그리고 제도가 그 민감성을 바꿀 수 있는가이다.”

죄수의 딜레마와 사슴사냥

죄수의 딜레마에서 각자의 선호 순서는 일방적 배반 > 상호 협력 > 상호 배반 > 일방적 협력이다. 배반이 지배전략이므로 일회 게임의 균형은 상호 배반이다. **사슴사냥**(루소의 비유)에서는 상호 협력 > 일방적 배반 > 상호 배반 > 일방적 협력이다. 상호 협력과 상호 배반이 모두 균형이므로, 문제는 이익의 대립이 아니라 **상대가 협력하리라는 확신(assurance)**의 부족이다.

대립 구도

이익 구조의 문제(죄수의 딜레마) ↔ 신뢰·정보의 문제(사슴사냥)

쓰이는 기출 2018 제1문 2), 2021 제2문(안보 딜레마)

답안 속 문장

“사슴사냥에서 협력이 깨지는 것은 상대가 배반을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배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호다.”

구성주의 — 웬트

웬트(Alexander Wendt)는 「무정부는 국가가 만들기 나름이다(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1992)와 『국제정치의 사회이론(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99)에서 무정부 자체는 자조를 낳지 않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은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공유된 관념의 구조에 따라 무정부 문화는 홉스적(적), 로크적(경쟁자), 칸트적(친구) 문화로 나뉜다.

대립 구도

물질적 구조(힘의 분포) ↔ 관념적 구조(공유된 지식·규범·정체성)

쓰이는 기출 2023 제1문 3), 2017 제3문(정체성)

답안 속 문장

“같은 핵무기라도 영국의 500기보다 북한의 5기가 미국에 더 위협적인 것은 물질이 아니라 두 나라가 공유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이다(웬트의 예).”

이론 답안의 네 걸음

① 개념 정의(누가, 어디서) → ② 이론의 핵심 가정 2~3개 → ③ 사례에 대입(문제지의 사실을 그대로 인용) → ④ 평가·비교(설명력과 한계). 소문이 “비판하시오”, “장단점”을 요구하면 ④에 분량의 3분의 1 이상을 쓴다.

1-2 기출 풀이

2018 제1문

무정부 하의 협력 — 월츠, 공격적 현실주의, 오이

총 40점 · 소문 2개 (20 · 20)

제1문.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 하에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제정치학의 핵심 논쟁 중 하나이다. 예컨대, 신현실주의자들이 보기에 ‘죄수의 딜레마’와 ‘사슴사냥’ 게임은 국가 간 협력의 어려움을 상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에 대한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의 견해를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20점)
- 2) ‘죄수의 딜레마’와 ‘사슴사냥’ 게임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견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케네스 오이(Kenneth Oye) 등이 ‘Cooperation Under Anarchy’에서 제시한 비판적 관점을 논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신현실주의 내부 논쟁(방어적 대 공격적)과 신현실주의-신자유제도주의 논쟁을 한 문항에 묶었다. 1)은 월츠를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논하는 문제다.

연결 개념 자조, 상대적 이득, 권력 극대화, 지역 패권, 반복 게임, 미래의 그림자, 레짐.

함정 1)에서 미어샤이머의 다섯 가정을 나열만 하고 월츠 비판으로 연결하지 않는 답안이 많다. 2)에서 오이 편저의 세 변수를 빠뜨리면 “비판적 관점”이 비게 된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월츠의 무정부: 배열 원리·자조·안보 추구 →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 불확실성 하에서는 권력 극대화가 합리적, 현상유지 편향	Waltz 1979, Mearsheimer 2001	약 1,200자
2)	죄수의 딜레마(지배전략 배반)·사슴사냥(확신 문제), 상대적 이득 → 오이 등: 보수 구조·미래의 그림자·행위자 수, 맞대응, 레짐	Grieco, Oye 1986, Axelrod 1984, Keohane 1984	약 1,200자

예시답안 — 2018 제1문

무정부 상태에서 협력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현실주의 내부에서도,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도 답이 갈린다. 아래에서는 월츠의 무정부관을 공격적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협력 게임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비판론과 오이 등의 비판을 차례로 논한다.

1) 월츠의 무정부관과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

월츠는 『국제정치이론』(1979)에서 국제정치의 구조를 배열 원리, 단위의 기능 분화, 능력의 분포로 정의했다. 국제체제의 배열 원리는 상위 권위가 없는 무정부이고, 그 안에서 국가들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므로 구조의 변화는 강대국 간 능력 분포의 변화로만 나타난다. 무정부 하에서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자조 체제에 놓이며, 그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다. 월츠는 국가가 권력이 아니라 **안보**를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지나친 팽창은 다른 국가들의 균형을 불러 오히려 안보를 해치므로, 합리적 국가는

적절한 수준의 권력에 만족하고 세력균형이 반복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월츠의 이론은 방어적 현실주의로 분류된다.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강대국의 공격 능력, 의도의 불확실성, 생존 목표, 합리성이라는 월츠와 거의 같은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다른 결론에 이른다. 첫째, 타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고 오늘 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권력이 ‘충분한’ 안보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생존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적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궁극적 목표는 지역 패권이다. 둘째, 월츠의 결론은 현상유지 편향을 지닌다. 무정부가 국가에게 공포를 심어 준다면 그 논리의 끝은 만족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을 늘리는 행동이다. 역사적으로도 강대국들은 균형을 지키기보다 팽창의 기회를 노렸다. 셋째, 월츠는 균형화가 신속히 일어난다고 보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비용을 피하려 책임전가를 선호하므로 균형화가 늦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그 틈에서 팽창이 성공하기도 한다고 본다. 요컨대 공격적 현실주의는 월츠의 무정부관이 옳다면 그 귀결은 ‘안보 추구’가 아니라 ‘권력 극대화’여야 한다고 비판한다. 다만 핵무기가 있는 세계에서 지역 패권 추구는 비용이 매우 크고, 과잉팽창이 균형을 부른 역사도 많다는 점에서 방어적 현실주의의 반론도 여전히 유효하다.

2) 협력 게임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견해와 오이 등의 비판

죄수의 딜레마에서 각국은 상대가 협력하든 배반하든 배반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 모두 나아짐에도 상호 배반이 균형이 된다. 사슴사냥에서는 상호 협력이 최선이지만, 상대가 토끼를 쫓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크면 각자 확실한 작은 이득을 택해 협력이 무너진다. 신현실주의자들은 이 두 게임을 무정부의 상징으로 본다. 상위 권위가 없어 약속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기만의 공포가 상존하고, 그리코(Joseph Grieco)가 지적했듯 국가는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에 민감하여 함께 이익을 얻더라도 상대가 더 많이 얻으면 협력을 거부한다. 따라서 협력은 일시적이고 힘의 분포에 종속된다.

오이가 엮은 『무정부 하의 협력』(1986)의 필자들은 무정부가 협력을 어렵게 하지만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으며, 협력의 성패는 세 변수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첫째, **보수 구조**다. 모든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는 아니다. 사슴사냥처럼 상호 협력이 최선인 상황에서는 정보 교환과 신호로 확신을 높이면 협력이 가능하고, 일방적·쌍무적 행동으로 배반의 이익을 줄이고 협력의 이익을 늘리면 게임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둘째, **미래의 그림자**다. 게임이 반복되고 미래의 보상이 충분히 중시되면, 액설로드가 보였듯 맞대응 전략이 배반을 처벌하고 협력에 보답하여 상호 협력이 유지된다. 큰 합의를 작은 단계로 나누는 분할(decomposition)과 쟁점 연계도 미래의 그림자를 길게 만든다. 셋째, **행위자의 수**다. 참여자가 많으면 배반의 식별과 처벌이 어려워지므로, 행위자 수를 줄이거나 레짐을 만들어 감시·정보 기능을 맡기면 협력이 쉬워진다. 액설로드와 코헤인은 같은 책에서 제도가 상호주의를 뒷받침하고 평판을 형성해 협력의 조건을 바꾼다고 논했다.

이 비판은 신현실주의가 게임의 구조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데 대한 반박이다. 협력의 어려움은 무정부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보수·반복·참여자 수라는 조건의 함수이며, 국가는 전략과 제도로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안보 영역에서는 배반 한 번의 대가가 생존에 이를 수 있어 미래의 그림자가 짧아지고 상대적 이득의 민감도가 커진다. 따라서 협력 가능성은 경제 영역에서 더 높고 안보 영역에서 더 낮다고 보는 것이 두 시각을 종합한 평가일 것이다.

40점 · 1)은 월츠 요약 →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 순서, 2)는 신현실주의 견해 → 오이 등의 세 변수와 전략 순서로 쓴다.

2023 제1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 이론

총 40점 · 소문 3개 (20 · 10 · 10)

제1문.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은 반복해서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전쟁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며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도 이어져 왔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이 존재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이론과 케네쓰 월츠(Kenneth Waltz)의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0점)
- 2) 국제제도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론과 비교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에 대한 1)에서의 설명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10점)
- 3)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의 이론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한 사건을 고전적 현실주의·신현실주의·신자유제도주의·구성주의로 차례로 설명하게 해 패러다임 비교 능력을 본다.

연결 개념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인간 본성, 세 이미지, 무정부·극성, 국제제도의 기능, 무정부의 세 문화.

합정 1)의 “차이점”을 ‘모겐소는 권력, 월츠는 안보’로만 쓰면 부족하다. 분석 수준(인간 본성 대 구조)과 이론의 대상(대외정책 대 국제정치)의 차이까지 써야 한다. 3)은 정체성 서사로 쓰되 문제지에 없는 세부 사실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공통점: 국가 중심·권력·세력균형·제도 회의 / 차이점: 분석 수준, 권력은 목적인가 수단인가, 대외정책 이론인가 국제정치 이론인가	Morgenthau 1948, Waltz 1959·1979	약 1,200자
2)	장점: 제도 실패·권력 정치의 귀환 설명 / 단점: 시점·지도자·국내 요인, 제도의 대응(제재·결속) 설명 못함	Keohane, Keohane-Martin	약 600자
3)	정체성·이익의 상호 구성, 서방-러시아 관계의 로크적→홉스적 문화 이행, 우크라이나 정체성의 이동	Wendt 1992·1999	약 600자

예시답안 — 2023 제1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이 무력으로 이웃 국가의 영토를 침공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이론의 시험대가 되었다. 아래에서는 모겐소와 월츠의 현실주의를 비교하고, 제도주의와 견주어 그 설명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웬트의 구성주의로 전쟁을 설명한다.

1) 모겐소와 월츠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이론은 현실주의의 전통을 공유한다. 첫째, 국가를 국제정치의 핵심 행위자로 보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권력의 관점에서 계산한다고 본다. 둘째,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며, 평

화는 도덕이나 법보다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셋째, 국제기구나 국제법이 강대국의 핵심 이익 앞에서 무력하다는 회의를 공유한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은 자국의 안보 이익이 걸렸다고 판단한 강대국이 힘으로 세력권을 지키려 한 행동이고, 이를 억제할 충분한 대항력이 사전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서 설명된다.

차이는 세 가지다. 첫째, **분석 수준**이다. 모겐소는 『국가 간의 정치』에서 전쟁의 뿌리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서 찾는다. 이에 따르면 이 전쟁은 러시아 지도부의 권력 의지와 제국적 팽창 정책, 그리고 이를 제어하지 못한 외교의 실패로 설명된다. 반면 월츠는 『인간, 국가, 전쟁』에서 인간 본성(제1이미지)과 국가의 성격(제2이미지)만으로는 전쟁의 반복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국가들 위에 전쟁을 막을 권위가 없다는 무정부(제3이미지)를 전쟁의 허용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국제정치이론』에서 이를 체제 구조의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이 시각에서 전쟁은 냉전 후 유럽의 힘의 분포가 서방에 유리하게 바뀌고 동맹의 경계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러시아가 느낀 상대적 안보 약화에 대한 구조적 반응으로 설명된다. 둘째, **권력의 지위**다. 모겐소에게 권력은 그 자체로 추구되는 목적에 가깝지만, 월츠에게 권력은 생존과 안보를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모겐소는 러시아의 행동을 위신과 팽창의 정책으로, 월츠는 안보 불안에 따른 방어적 대응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이론의 대상**이다. 모겐소의 이론은 정치가의 판단과 외교를 중시하는 대외정책 이론의 성격이 강한 반면, 월츠는 자신의 이론이 개별 국가의 특정 결정을 설명하는 대외정책 이론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월츠의 이론으로는 왜 2022년에, 왜 전면 침공이라는 방식이 선택되었는지를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

2) 제도주의와 비교한 장점과 단점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제도가 정보를 제공하고 약속을 감시해 협력과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이와 비교하면 현실주의 설명의 장점은 분명하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앞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동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의 안전에 관한 기존 합의와 휴전 합의가 침공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강대국의 핵심 이익 앞에서 제도가 무력하다는 현실주의의 예측과 맞는다. 상호의존이 전쟁 비용을 높여 평화를 지킨다는 기대가 무너진 점도 현실주의를 지지한다.

단점도 있다. 첫째, 구조만으로는 전쟁의 시점과 형태, 지도자의 오판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침공 이후 서방이 제재와 군사 지원을 조율하고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는 등 제도를 중심으로 결속한 현상은 제도가 힘의 대응을 조직하는 통로가 된다는 제도주의의 설명이 더 잘 포착한다. 셋째, 현실주의는 국내 정치체제와 정체성이 전쟁 결정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3) 웬트의 구성주의로 본 전쟁의 발생

웬트는 무정부 자체가 자조와 적대를 낳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하는 관념이 무정부의 성격을 정한다고 보았다. 같은 힘의 분포라도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면 흡스적 문화, 경쟁자로 인식하면 로크적 문화, 친구로 인식하면 칸트적 문화가 된다. 탈냉전 직후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는 협력 기구에 함께 참여하는 로크적 문화에 가까웠으나, 이후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담론이 강화되며 흡스적 문화로 이동했다. 동시에 러시아 지도부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하나의 역사적 민족으로 보는 정체성 서사를 내세운 반면, 우크라이나 사회는 유럽 지향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화했다. 이처럼 상충하는 정체성이 ‘우크라이나의 서방 편입’을 러시아에게 존재론적 위협으로 구성했고, 그 위협 인식이 무력 사용이라는 이익을 만들었다는 것이 구성주의의 설명이다. 이 설명은 전쟁이 구조의 필연이 아니라 관념의 변화로 막을 수도 있었다는 함의를 갖는다.

40점 · 1)은 공통점 → 차이점 세 축, 2)는 장점 → 단점, 3)은 정체성의 상호 구성으로 쓴다. 전쟁의 세부 경과는 문제지와 널리 알려진 사실만 쓴다.

제2장

세력균형 · 세력전이 · 패권

연결 기출: 2019 제1문 · 2020 제1문 · 2021 제1문 · 2022 제2문 | 함께 볼 장: 5장(패권과 국제통화), 8장(유럽협조체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2-1 핵심 개념	17
2-2 기출 풀이	20
2019 제1문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안정 · 세력전이	20
2021 제1문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 세력균형 · 세력전이 · 이익균형	22
2022 제2문 패권안정이론과 2008년 이후 패권의 역할	24
2020 제1문 독일과 소련의 부상 — 신현실주의와 동맹의 신뢰성	26

2-1 핵심 개념

강대국 사이의 힘의 분포가 바뀔 때 전쟁이 일어나는가, 평화가 유지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세력균형론은 **균형이 평화**라고, 세력전이론과 패권안정론은 **우위가 평화**라고 답한다. 미중 관계를 다룬 문항(2019·2021)은 거의 언제나 이 대립을 축으로 출제된다.

세력균형론

국가들은 한 국가나 동맹이 압도적 힘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균형화(balancing)**한다. 균형화에는 군비 증강 같은 내적 균형과 동맹 형성 같은 외적 균형이 있다. 월츠는 균형이 국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무정부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고,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양극 세계의 안정성』, 1964). 월트(Stephen Walt)는 『동맹의 기원(The Origins of Alliances)』(1987)에서 국가는 힘 자체가 아니라 **위협**(총체적 힘, 지리적 근접성, 공격 능력, 공격 의도)에 균형한다는 위협균형론으로 수정했다.

대립 구도

균형 = 상호 억제로 안정 ↔ 균형 = 승패 예측이 어려워 오판 위험

쓰이는 기출 2016 제2문 1), 2020 제1문, 2021 제1문 2), 2024 제3문 1)

답안 속 문장

“세력균형론에서 평화의 조건은 어느 쪽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승리가 불확실하면 전쟁의 기대 비용이 기대 이익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세력전이론 — 오겐스키

오겐스키(A. F. K. Organski)는 『세계정치(World Politics)』(1958)에서, 오겐스키와 쿠글러(Jacek Kugler)는 『전쟁 원장(The War Ledger)』(1980)에서 국제체제를 **위계**로 보았다. 정점의 지배국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서 이익을 얻는다. 국력의 원천은 산업화에 따른 내적 성장이며, 동맹은 부차적이다. 전쟁은 **불만족한 도전국**이 빠르게 성장해 지배국과 **세력 균등(parity)**에 근접할 때 가장 일어나기 쉽다. 우위가 뚜렷할 때는 도전할 능력이 없어 평화가 유지된다.

대립 구도

균등 = 위험, 우위 = 안정(세력전이) ↔ 균형 = 안정, 우위 = 위험(세력균형)

쓰이는 기출 2019 제1문 2), 2021 제1문 2)

답안 속 문장

“세력전이론에서 전쟁의 필요조건은 힘의 균등이고 충분조건에 가까운 것은 도전국의 불만족이다. 따라서 이 이론을 미중 관계에 적용하려면 국력 추세와 함께 중국의 현상 불만족을 입증해야 한다.”

패권안정론 — 킨들버거와 길핀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는 『대공황의 세계(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1973)에서 대공황이 깊고 길었던 이유를 **안정자(stabilizer)의 부재**로 설명했다. 영국은 능력이 없었고 미국은 의지가 없었다. 안정자는 공공재로서 ① 과잉 상품에 대한 개방 시장, ② 경기 역행적 장기 대부, ③ 안정적인 환율 체제, ④ 거시정책 조율, ⑤ 위기 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제공한다. 길핀(Robert Gilpin)은 『세

계정치의 전쟁과 변화(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1981)에서 패권국이 질서를 만들고, 국력의 불균등 성장과 패권 유지 비용의 증가로 쇠퇴하며, 그 이행이 패권전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크래스너(Stephen Krasner)는 개방 무역 체제와 패권의 관계를 분석했다(1976). ‘패권안정론’이라는 명칭은 코헤인이 1980년 논문에서 붙였다.

대립 구도

자비로운 패권(공공재 제공, 킨들버거) ↔ 강압적 패권(자국 이익을 위한 질서, 길핀·스나이덜의 비판)

쓰이는 기출 2016 제1문 1), 2019 제1문 1), 2022 제2문, 2025 제3문

답안 속 문장

“패권안정론에서 패권국은 질서의 비용을 감수하는 대가로 질서를 설계할 권한을 얻는다. 비용이 이익을 넘어설 때 패권국은 공공재 제공을 줄이고 동맹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게 된다.”

이익균형론 — 슈웰러

슈웰러(Randall Schweller)는 「이익을 위한 편승(Bandwagoning for Profit)」(1994)에서 국가가 위협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정렬한다고 보았다. 단위 수준에서는 국가가 현상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현상을 바꾸는 데 걸린 가치를 비교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사자(현상유지에 큰 비용도 감수), 양(약한 현상유지구), 자갈(제한적 수정주의, 기회주의적 편승), 늑대(무제한적 수정주의)로 나뉜다. 체제 수준에서는 **현상유지 세력과 수정주의 세력 사이의 힘의 분포**가 체제의 안정을 결정한다.

쓰이는 기출 2021 제1문 3)

답안 속 문장

“슈웰러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의 안정성은 힘의 격차만이 아니라 중국이 자갈인가 늑대인가, 그리고 현상 유지 진영이 수정주의 진영보다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다.”

극성과 동맹의 신뢰성 — 연쇄 결속과 책임전가

크리스텐슨(Thomas Christensen)과 스나이더(Jack Snyder)는 「연쇄 결속과 책임전가(Chain Gangs and Passed Bucks)」(1990)에서 다극 체제의 동맹 행태가 **공격-방어 균형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공격이 유리하다고 인식하면 동맹국의 패배가 곧 자국의 위기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묶여 함께 전쟁에 끌려든다(연쇄 결속, 1914년). 방어가 유리하다고 인식하면 다른 국가가 먼저 싸우기를 기다린다(책임전가, 1930년대). 양극 체제에서는 초강대국이 주로 자국 능력에 의존하므로(내적 균형) 동맹국에 대한 의존이 작고, 그만큼 동맹국에 끌려갈 위험도 작다.

쓰이는 기출 2020 제1문 2), 2017 제1문 1)

답안 속 문장

“다극 체제에서 동맹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신뢰성이 과도하면 연쇄 결속을, 부족하면 책임전가를 낳는다. 양극 체제에서는 비대칭 동맹 덕분에 이 두 극단이 완화된다.”

긴 평화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1945년 이후 미소 간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현상을 **긴 평화(The Long Peace)**라고 불렀다(1986년 논문, 1987년 단행본). 그는 그 원인으로 양극 구조의 단순성과 안정성, 핵 억지, 정찰 기술에 의한 투명성, 이념적 절제, 그리고 세력권 존중·핵무기 사용 자제 같은 암묵적 ‘게임의 규칙’을 들었다.

쓰이는 기출 2020 제1문

답안 속 문장

“냉전의 평화는 미소가 서로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양극 구조와 핵 억지가 오판의 여지를 좁혔기 때문에 유지되었다.”

2-2 기출 풀이

2019 제1문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안정 · 세력전이

총 40점 · 소문 2개 (20 · 20)

제1문. 미국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세우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무역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양국 관계의 갈등 양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40점)

- 1)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내용을 서술하고, ‘패권안정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하십시오. (20점)
- 2) 현재의 미중 관계를 ‘세력전이 이론’으로 설명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비판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시사(트럼프 1기의 대외정책, 미중 무역 분쟁)를 패권 이론으로 설명하게 한다. 1)은 ‘서술 + 이론 설명’의 두 과제, 2)는 이론의 한계를 묻는 비판 문제다.

연결 개념 공공재, 무임승차, 패권 쇠퇴와 비용 분담, 강압적 패권, 세력 균등·불만족·도전국.

합정 2)에서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전쟁 위험이 높다’는 설명으로 끝내면 질문을 놓친다. 묻는 것은 **적용했을 때의 비판**이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정책 내용(다자협정 이탈·관세·동맹 비용 분담) → 패권 쇠퇴기에 공공재 공급을 줄이고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행태	Kindleberger, Gilpin, Snidal	약 1,200자
2)	비판 다섯: 균등 미도달·측정, 만족도 모호, 핵 억지, 상호의존, 양자 중심·동맹 무시, 개시자 문제	Organski-Kugler, Levy, Allison	약 1,200자

예시답안 — 2019 제1문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은 패권국이 자신이 만든 질서의 비용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아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정리해 패권안정론으로 설명하고, 미중 관계를 세력전이론으로 설명할 때의 한계를 검토한다.

1)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과 패권안정론적 설명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대외 관계를 미국이 얻는 이익과 부담하는 비용의 양자적 계산으로 재편하려는 기조다. 통상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제한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 다자 질서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했다. 안보에서는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다.

패권안정론에 따르면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경제 질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패권국이 있을 때 유지된다. 킨들버거는 패권국이 개방 시장, 경기 역행적 대부, 안정적 통화 체제, 위기 시 최종 대부자라는 공공재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공공재는 비배제적이므로 다른 국가들은 비용을 덜 내고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의 유인을 가진다. 길핀은 국력이 불균등하게 성장하면서 패권국의 상대적 지위는 떨어지고 질서 유지 비용은 늘어나 패권국이 쇠퇴한다고 보았다.

이 틀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상대적 쇠퇴를 인식한 패권국의 비용 재조정으로 설명된다. 첫째, 미국은 개방 시장이라는 공공재가 경쟁국, 특히 중국의 성장을 돕고 자국 제조업의 쇠퇴를 낳았다고 판단해 시장 접근을 관세와 재협상의 지렛대로 바꾸었다. 둘째,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안보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를 줄이려는 시도다. 셋째, 다자 협정 이탈은 규칙의 제공자가 규칙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스나이덜(Duncan Snidal)이 구분했듯, 이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자비로운 패권에서 질서를 자국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강압적 패권으로의 이동이다. 다만 패권안정론이 예측하는 것은 패권 쇠퇴 이후의 불안정이므로, 패권국 스스로 질서를 흔드는 정책은 오히려 쇠퇴를 앞당기고 킨들버거가 경고한 ‘안정자 없는 세계’를 만들 위험이 있다.

2) 세력전이론으로 미중 관계를 설명할 때의 비판

오겐스키와 쿠글러에 따르면, 위계적 국제질서에서 불만족한 도전국이 빠른 내적 성장으로 지배국과 세력 균등에 이를 때 전쟁 위험이 가장 높다. 중국의 급성장과 무역 분쟁은 이 이론의 전형적 사례처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세력 균등에 도달했는가**의 문제다. 국내총생산 규모로는 격차가 줄었지만 군사력, 기술, 동맹망, 기축통화 지위를 합한 총체적 국력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여전하다는 반론이 많다. 이론의 핵심 변수인 국력의 측정 기준이 불분명해 예측이 자의적이 된다. 둘째, **불만족의 판단**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기존 질서에서 큰 이익을 얻었고, 기존 제도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발언권을 높이려 한다. 중국을 현상타파 세력으로 단정하면 이론이 결론을 전제하는 순환에 빠진다. 셋째, **핵 억지**다. 세력전이론은 핵무기 이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두 핵보유국 사이에서 패권 전쟁은 합리적 선택이 되기 어렵다. 넷째, **경제적 상호의존**이다. 공급망과 금융으로 깊이 얽힌 두 경제에서 전쟁의 비용은 과거 패권 이행기보다 훨씬 크고, 실제 갈등도 관세·기술 통제 같은 비군사적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이론의 구조적 한계**다. 세력전이론은 양자 관계와 내적 성장을 중시해 동맹을 부차적으로 보지만, 미중 경쟁은 동맹과 지역 국가들의 선택에 크게 좌우된다. 또 이론은 도전국이 전쟁을 시작한다고 보지만, 레비(Jack Levy) 등의 예방전쟁론은 쇠퇴하는 지배국이 기회 창이 닫히기 전에 먼저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평화적 패권 이행처럼 균등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세력전이론은 미중 관계의 위험 구조를 보여 주는 유용한 틀이지만, 국력 측정, 만족도, 핵과 상호의존이라는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된다.

40점 · 1)은 정책 서술과 이론 설명을 구분해 쓰고, 2)는 비판을 번호 없이 '첫째~다섯째'로 전개한다. 사실은 2019년 출제 시점까지의 것만 쓴다.

2021 제1문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 세력균형 · 세력전이 · 이익균형

총 40점 · 소문 3개 (10 · 20 · 10)

제1문.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오인과 오판을 유발하여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현재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관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예측과 양국간 공존 또는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병립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여 미국의 국력을 넘어선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현저히 우위인 시기, 양국의 격차가 줄어드는 시기, 중국이 미국을 현저히 능가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미중관계에서 불확실성의 정도를 비교하시오. (10점)
- 2) 각 시기별 미중관계에서 불확실성의 정도가 미중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20점)
- 3) 슈웰러(Randall L. Schweller)의 이익균형론 입장에서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가지를 언급하고, 각 요인에 기반하여 미중관계의 미래를 예측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이 같은 국력 변화를 정반대로 해석한다는 점을 ‘불확실성’이라는 매개 변수로 비교하게 한다. 3)은 슈웰러의 두 요인을 정확히 짚는지를 본다.

연결 개념 불확실성과 오판, 세력 균등, 상대적 우위, 현상유지 세력과 수정주의 세력, 이익균형.

함정 1)에서 세 시기를 단순히 ‘낮음-높음-낮음’으로만 쓰지 말고 왜 그런지(승패 예측 가능성, 힘의 측정·의도 판단)를 붙인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미국 우위기: 낮음 / 격차 축소기: 가장 높음 / 중국 우위기: 다시 낮아지나 질서 재편의 불확실성	Blainey의 오판론	약 600자
2)	세력균형: 균등기의 불확실성이 억지로 작용, 우위기가 위험 / 세력전이: 균등기의 불확실성이 도전을 부름, 우위기가 안정	Waltz, Organski-Kugler	약 1,200자
3)	요인 ① 국가의 이익(현상유지·수정주의 성향), ② 진영 간 힘의 분포 → 시나리오별 전망	Schweller 1994	약 600자

예시답안 — 2021 제1문

국력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가 낳는 불확실성이 오인과 오판을 통해 전쟁을 부른다는 시각이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불확실성을 비교하고, 그 영향을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으로 비교한 뒤, 슈웰러의 이익균형론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1) 시기별 불확실성의 비교

미국이 현저히 우위인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낮다. 양국 모두 무력 충돌의 결과가 미국에 유리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힘의 측정과 승패 예측에서 이견이 적다. 양국의 격차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가장 높다. 국력을 어떤 지표로 재느냐에 따라 우열 판단이 달라지고, 각국이 상대의 결의와 의도를 과소평

가하거나 자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쉽다. 블레이니(Geoffrey Blainey)가 말했듯 전쟁은 양측이 상대적 힘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때 일어나기 쉽다. 중국이 현재 능가한 시기에는 힘의 우열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시 낮아지지만, 새 지배국이 어떤 질서를 만들지, 기존 지배국이 그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도의 불확실성은 남는다.

2)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비교

두 이론은 같은 국력 변화를 정반대로 해석한다. 세력균형론에서 평화의 조건은 힘의 균형이다. 미국 우위기에는 우월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압박할 유혹을 받고 약한 국가는 균형을 서두르므로 갈등 가능성이 높다. 격차가 줄어드는 시기의 높은 불확실성은 오히려 억지로 작용한다. 어느 쪽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전쟁의 기대 비용이 커지고 신중해진다는 것이다. 월츠는 특히 양극 체제에서 두 강대국이 서로를 주된 경쟁자로 명확히 인식해 오판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보았다. 중국 우위기에는 다시 불균형이 생기므로, 미국과 주변국의 균형화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긴장이 높아진다. 요컨대 세력균형론에서 위험한 시기는 첫째와 셋째 시기이고, 둘째 시기의 불확실성은 안정 요인이다.

세력전이론은 그 반대다. 오겐스키에 따르면 위계적 질서에서 지배국의 우위가 뚜렷하면 도전국은 불만족하더라도 도전할 능력이 없으므로 평화가 유지된다. 따라서 미국 우위기와 중국 우위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격차가 줄어드는 시기이다. 불만족한 도전국은 승리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지배국은 지위 상실을 두려워한다. 이 시기의 높은 불확실성은 억지가 아니라 오판을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전국은 힘의 추월 시점을 앞당겨 계산하고, 지배국은 예방적 대응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추월의 속도가 빠를수록 양측이 새로운 힘의 관계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해 위험이 커진다.

정리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이 두 이론을 가른다. 세력균형론은 균등기의 불확실성이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낳는다고 보고, 세력전이론은 ‘이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낳는다고 본다. 미중 관계에 대한 비판적 예측은 세력전이론에, 공존 예측은 세력균형론과 핵 억지론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3) 이익균형론으로 본 미중 관계의 미래

슈웰러는 체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단위 수준의 이익**, 즉 각국이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가운데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는가이다. 둘째는 **체제 수준의 힘의 분포**, 즉 현상유지 세력과 수정주의 세력 사이의 힘의 균형이다.

첫째 요인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기존 질서의 일부 규칙과 지위만 바꾸려는 제한적 수정주의, 즉 자칼에 가깝다면 미국은 일정한 양보와 제도 개편으로 중국을 수용할 수 있고 관계는 경쟁 속 공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이 질서 전체를 바꾸려는 늑대에 가깝고 미국이 현상유지를 위해 큰 비용을 치를 의지를 가진 사자라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요인에 비추어 보면, 미국과 동맹국을 포함한 현상유지 진영이 수정주의 진영보다 충분히 강하면 중국의 도전은 억제되고 체제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현상유지 진영이 분열하고 주변 국가들이 이익을 좇아 중국에 편승하면 수정주의 진영의 힘이 커져 불안정이 심해진다. 따라서 미중 관계의 미래는 중국의 이익 성향과 동맹 네트워크의 결속이라는 두 변수에 달려 있다.

40점 · 1)의 세 시기를 2)에서 그대로 다시 쓰고, 3)은 두 요인을 먼저 명시한 뒤 시나리오로 예측한다.

2022 제2문

패권안정이론과 2008년 이후 패권의 역할

총 30점 · 소문 2개 (20 · 10)

제2문. 패권안정이론가들은 패권국의 존재 여부가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결정·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질서의 안정성과 패권국의 역할 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패권국의 존재에 따른 국제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패권안정이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패권국의 역할을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패권국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패권안정론의 기본 명제와 패권국의 두 역할을 정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근거로 들게 한다.

연결 개념 국제 공공재, 최종 대부자, 기축통화, 안보 공공재(해상 교통로·동맹·확장억지), 상대적 쇠퇴, G20.

합정 2)는 ‘근거 제시’이므로 사실을 정확히 써야 한다. 확인되지 않는 수치를 지어내지 않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기본 명제(패권 존재 ↔ 개방·안정) → 군사·안보 역할 / 경제 역할 → 한계 한 줄	Kindleberger, Gilpin, Krasner, Keohane	약 1,200자
2)	금융위기의 미국 기원·정당성 손상, G20으로 이동, 재정 제약·개입 축소, 다자 제도 공백, 중국 주도 기구	—	약 600자

예시답안 — 2022 제2문

패권안정이론은 국제질서의 안정이 하나의 압도적 강대국이 질서의 비용을 부담할 때 확보된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이론의 내용과 패권국의 두 가지 역할을 설명하고, 2008년 이후 패권국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1) 패권안정이론의 내용과 패권국의 역할

패권안정이론의 기본 명제는 압도적 국력을 가진 패권국이 존재할 때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가 형성·유지되며, 패권국이 쇠퇴하거나 부재하면 질서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킨들버거는 대공황이 깊고 길었던 이유를 영국은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었고 미국은 그럴 의지가 없었던 ‘안정자의 부재’에서 찾았다. 길핀은 패권국이 자국의 이익과 가치에 맞게 질서를 설계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국력의 불균등 성장으로 패권국이 쇠퇴하면 질서가 흔들리고 패권 이행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크래스너는 패권국의 존재와 개방적 무역 체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국제질서의 안정은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비배제적이어서 모두가 무임승차하려 하므로, 그 비용을 감당할 만큼 큰 이익과 능력을 가진 패권국만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의 논리이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패권국은 첫째, 압도적 군사력으로 도전 세력을 억지하고 지역 분쟁의 확산을 막는다. 둘째, 동맹 체제와 핵 확장억지를 통해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동맹국들이 독자적 군비 경쟁

이나 핵무장에 나설 유인을 줄인다. 셋째, 해양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 국제 교역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넷째, 집단안보 제도와 군비통제 규범을 주도해 무력 사용의 규칙을 세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과 동아시아에 구축한 동맹망이 그 예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패권국은 첫째, 자국 시장을 개방해 다른 국가의 상품을 흡수한다. 둘째, 자국 통화를 기축통화로 제공하고 안정적 환율 체제를 뒷받침한다. 셋째, 해외 투자와 원조로 자본을 공급하고, 위기 때 최종 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넷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같은 국제경제 제도를 설립하고 그 규칙을 주도한다. 다만 코헤인이 『패권 이후』에서 지적했듯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패권이 쇠퇴한 뒤에도 협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패권과 안정의 관계가 기계적이지는 않다.

2) 2008년 이후 패권국 역할 축소론의 근거

첫째, 금융위기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식 금융 자유화 모델의 정당성이 손상되었다. 위기 관리 과정에서도 미국 혼자가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핵심 협의체로 부상해, 위기 대응의 공동 관리 구조가 형성되었다. 둘째, 막대한 재정 지출로 미국의 재정 여력이 약해졌고, 2011년에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 강등되었다. 이는 대외 개입과 공공재 제공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떨어뜨렸다. 셋째, 안보 영역에서 미국은 대외 개입을 줄이고 동맹국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 협정 탈퇴와 동맹 비용 분담 요구를 강화했다. 넷째, 다자 경제 제도에서 미국의 주도력이 약해졌다. 국제통화기금 지분 개혁은 미국 의회의 승인 지연으로 수년간 표류했고,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미국의 위원 임명 거부로 기능이 정지되었다. 다섯째,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같은 새 제도를 주도하며 대안적 공공재 공급자로 나섰다. 다만 위기 때 달러 수요가 오히려 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스와프로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축소된 것은 미국의 능력보다 의지와 정당성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30점 · 1)은 기본 명제 → 두 측면의 역할, 2)는 근거를 영역별로 묶어 제시한다.

2020 제1문

독일과 소련의 부상 — 신현실주의와 동맹의 신뢰성

총 40점 · 소문 2개 (16 · 24)

제1문.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독일의 부상이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20세기 중반 소련의 부상은 강대국 간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세기 중후반 국제사회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을 겪기는 했지만 ‘긴 평화(long peace)’를 유지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40점)

- 1) 두 신흥강대국의 부상 사례가 신현실주의의 전쟁 예측에 부합하는 정도를 논하십시오. (16점)
- 2) 두 신흥강대국의 부상 사례가 상이한 결과로 이어진 현상을 군사동맹(alliance)의 신뢰성(credi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하십시오. 또한 그 논거로 제1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의 동맹 사례를 제시하고 그 차이를 비교 서술하십시오. (24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같은 ‘신흥강대국의 부상’이 왜 한 번은 세계대전, 한 번은 긴 평화로 끝났는지를 극성 이론과 동맹 이론으로 설명하게 한다.

연결 개념 다극 대 양극, 불균형 다극,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 연쇄 결속, 책임전가, 확장억지, 인계철선.

합정 2)는 요인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이름 붙이고, 제1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동맹 사례를 **비교**해야 한다. 사례 나열로 끝내지 않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다극 체제의 독일 → 전쟁 예측과 부합 / 양극 체제의 소련 → 안정 예측과 부합 / 한계: 시점·국내 요인·핵	Waltz 1964· 1979, Mearsheimer, Gaddis	약 900자
2)	요인 ① 동맹 상호의존의 대칭성(극성), ② 공약의 구속 장치·공격·방어 인식 → 1914년 연쇄 결속 대 냉전 북대서양조약기구	Christensen-Snyder 1990, Snyder 1984	약 1,400자

예시답안 — 2020 제1문

독일과 소련은 모두 기존 강대국 질서에 도전한 신흥강대국이었지만, 독일의 부상은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소련의 부상은 긴 평화로 귀결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차이를 신현실주의의 극성론과 동맹의 신뢰성 이론으로 설명한다.

1) 신현실주의의 전쟁 예측과의 부합 정도

월츠는 체제의 안정성이 강대국의 수, 즉 극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다극 체제에서는 위협의 대상이 분산되어 있어 누가 누구를 견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고, 동맹이 유동적이며, 강대국들이 동맹국에 의존하므로 계산 착오와 오판이 잦다. 양극 체제에서는 두 강대국이 서로를 유일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자국 능력에 의존한 내적 균형으로 대응하므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오판이 적다.

독일의 사례는 이 예측에 대체로 부합한다. 1871년 통일 이후 독일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등이 공존하는 다극 체제에서 부상했고, 동맹의 경직과 계산 착오 속에서 1914년 전쟁이 일어났다. 1930년대에도 다극 체제에서 독일의 팽창에 대한 균형이 지체되었다. 미어샤이머가 말한 것처럼 잠

재적 패권국이 있는 불균형 다극 체제는 가장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다. 소련의 사례 역시 부합한다. 1945년 이후 양극 체제에서 미소는 서로를 주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직접 충돌을 피했으며, 개디스가 말한 긴 평화가 유지되었다. 다만 신현실주의만으로는 독일 부상과 전쟁 사이에 수십 년의 간격이 있었던 이유, 지도자와 국내 정치의 역할, 그리고 핵무기라는 비구조적 요인이 냉전 평화에 기여한 정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동맹의 신뢰성과 상이한 결과

동맹의 신뢰성은 동맹국이 약속대로 행동하리라고 동맹국과 적국이 믿는 정도이다. 신뢰성이 너무 낮으면 적국을 억지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동맹국이 무모해져 강대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든다.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요인은 **동맹 상호의존의 대칭성**이다. 다극 체제에서 강대국들은 비슷한 힘을 가진 동맹국 없이는 균형을 이룰 수 없으므로 서로에게 깊이 의존한다. 이때 동맹국의 상실은 곧 자국 안보의 붕괴를 뜻하므로, 동맹국의 무모한 행동까지 지원하게 되어 신뢰성이 과도해진다. 양극 체제에서 초강대국은 동맹국보다 압도적으로 강해 동맹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므로, 동맹 공약은 자국의 판단에 따라 관리되며 동맹국에 끌려갈 위험이 작다.

둘째 요인은 **공약의 구속 장치와 군사 기술에 대한 인식**이다. 크리스텐슨과 스나이더는 다극 체제에서 공격이 유리하다고 인식되면 동맹국들이 서로에게 무조건 묶이는 연쇄 결속이, 방어가 유리하다고 인식되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책임전가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반면 공약을 제도화하고 병력을 전진 배치하면 신뢰성이 조절 가능한 형태로 확보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동맹은 두 요인 모두에서 불안정했다.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의 삼국동맹과 프랑스·러시아·영국의 삼국협상은 비슷한 힘을 가진 강대국 간의 대칭적 동맹이었다. 독일은 유일한 강대국 동맹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잃을 수 없었기에 1914년 7월 세르비아 문제에서 무조건적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와 프랑스도 서로를 지원했다. 당시 각국 군부는 공격이 유리하다고 믿어 신속한 동원과 선제 공격을 계획했으므로, 지역 위기가 연쇄 결속을 통해 세계대전으로 번졌다. 동맹 신뢰성이 과도하게 높아 억지가 아니라 확전의 통로가 된 것이다.

냉전기의 동맹은 달랐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아시아의 양자 동맹을 통해 동맹국을 보호했지만,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는 비대칭 동맹이었으므로 동맹국의 모험을 억제할 수 있었다. 동시에 미국은 유럽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소련이 공격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인계철선을 만들고, 통합 군사 지휘 체계와 핵 확장억지로 공약을 제도화했다. 소련의 바르샤바조약기구도 소련 중심의 비대칭 동맹이었다. 핵무기로 방어와 보복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진 환경에서 양 진영은 상대 진영을 공격할 유인이 작았다. 즉 냉전 동맹은 적국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아 억지를 확보하면서도, 동맹국에 대해서는 초강대국이 통제력을 가져 연쇄 결속을 피했다.

결국 두 사례의 차이는 동맹이 대칭적이고 공격 우위 인식에 지배되었는가, 비대칭적이고 제도화된 억지 구조였는가에서 나온다. 독일의 부상기에 동맹은 위기를 전쟁으로 확산시켰고, 소련의 부상기에 동맹은 억지와 통제를 동시에 수행해 긴 평화에 기여했다.

40점 · 2)는 요인 두 가지를 이름 붙여 제시하고, 1914년과 냉전의 동맹을 같은 두 축으로 비교한다.

제3장

안보 딜레마 · 동맹 · 핵억지

연결 기출: 2019 제2문 · 2021 제2문 · 2022 제1문 · 2024 제2문 | 함께 볼 장: 2장(동맹의 신뢰성), 4장(엘리슨 모델), 9장(닉슨 독트린·중소분쟁)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3-1 핵심 개념	29
3-2 기출 풀이	32
2021 제2문 공격-방어 이론과 사이버 안보 딜레마	32
2022 제1문 냉전과 탈냉전의 동맹, 한미동맹의 동맹 게임	34
2019 제2문 북한 핵문제 — 핵확산 낙관론·비관론과 안정-불안정 역설	36
2024 제2문 왈츠의 합리적 억지론과 조직과정모델의 반론	38

3-1 핵심 개념

안보 영역 문항은 **개념의 정확한 정의**가 점수의 절반이다. 안보 딜레마와 동맹 안보 딜레마, 공격-방어 '균형'과 '구분 가능성', 핵 '낙관론'과 '비관론'은 서로 헷갈리기 쉬우므로 이름과 주창자를 짚지어 외운다.

안보 딜레마와 공격-방어 이론 — 저비스

허츠(John Herz)가 처음 이름 붙인 안보 딜레마는, 한 국가가 안보를 높이려는 조치가 상대의 안보를 낮추어 대응을 부르고 결국 양쪽 모두 덜 안전해지는 현상이다. 저비스(Robert Jervis)는 「안보 딜레마 하의 협력(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1978)에서 두 변수를 제시했다. **공격-방어 균형**은 공격과 방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이고,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은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있는가이다. 두 변수의 조합으로 네 세계가 나온다.

대립 구도

공격 우위·구분 불가(이중으로 위험) ↔ 방어 우위·구분 가능(이중으로 안정)

쓰이는 기출 2021 제2문, 2020 제1문 2)

답안 속 문장

“방어가 유리하면 현상유지국은 적은 비용으로 안전을 확보하므로 군비 증강이 상대에게 덜 위협적이다. 방어용 무기를 구별할 수 있으면 현상유지국은 자신의 의도를 무기 선택으로 드러낼 수 있다.”

	공격 우위	방어 우위
구분 불가	① 이중으로 위험: 안보 딜레마가 가장 심각	② 안보 딜레마는 있으나 각국의 안보 요구가 양립 가능
구분 가능	③ 안보 딜레마는 없으나 공격적 국가가 식별되고 침략이 가능	④ 이중으로 안정: 현상유지국이 서로 안심

동맹 안보 딜레마 — 방기와 연루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는 「동맹 정치의 안보 딜레마(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1984)와 『동맹 정치(Alliance Politics)』(1997)에서 동맹국 사이의 **동맹 게임**과 동맹과 적국 사이의 **적대 게임**을 구분했다. 동맹 게임에서 국가는 **방기(abandonment)**, 즉 동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탈할 위험과, **연루(entrapment)**, 즉 동맹국의 이익 때문에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동맹국에 강하게 공약하면 방기 위험은 줄지만 연루 위험이 커지고, 공약을 약화하면 그 반대가 된다. 두 게임은 맞물려 있어 적국에 강경하면 동맹국의 방기 우려는 줄지만 연루 우려와 적국의 반발이 커진다.

쓰이는 기출 2018 제3문 2), 2022 제1문 2), 2025 제2문 2)

답안 속 문장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은 주로 방기를, 강대국은 주로 연루를 두려워한다. 닉슨 독트린 시기의 한국과 미국이 그 전형이다.”

동맹의 형성과 유지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안보 협력 약속이다. 월트는 국가가 힘이 아닌 **위협**에 균형한다고 보았고, 공동 위협이 사라지면 동맹이 약해진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냉전 후에도 존속하고 확대되었다. 이는 동맹의 **제도화**(통합 사령부·관료 조직), 공유 가치와 정체성, 새로운 위협(테러·지역 분쟁)으로의 임무 전환으로 설명된다. 비대칭 동맹에서는 약소국이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강대국으로부터 안보를 얻는 **자율성-안보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설명(모로우 James Morrow)도 있다.

쓰이는 기출 2022 제1문 1), 2020 제1문 2)

답안 속 문장

“냉전 동맹이 ‘공동의 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탈냉전 동맹은 ‘공동의 제도와 가치’로 유지되며 그만큼 임무의 범위가 넓어졌다.”

핵확산 낙관론과 비관론 — 월츠와 세이건

월츠는 「핵무기의 확산: 더 많을수록 더 나을 수 있다(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1981)에서 핵무기가 전쟁의 비용을 확실하고 막대하게 만들므로 핵보유국은 신중해지고, 점진적 확산은 안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세이건(Scott Sagan)은 조직이론에 기대어 이를 반박했다. 핵무기를 실제로 다루는 군 조직은 ① 예방전쟁을 선호하는 편향, ② 생존 가능한 2차 공격력 확보의 소홀, ③ 사고와 오경보를 막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두 사람의 논쟁은 『핵무기의 확산: 논쟁(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1995)으로 묶였다.

대립 구도

합리적 국가 + 억지의 확실성(월츠) ↔ 조직의 편향·사고 가능성(세이건)

쓰이는 기출 2019 제2문 1), 2024 제2문

답안 속 문장

“낙관론은 국가를 합리적인 단일 행위자로 가정하지만, 비관론은 핵무기가 국가가 아니라 조직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안정-불안정 역설

글렌 스나이더가 「세력균형과 공포의 균형(The Balance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error)」(1965)에서 정식화했다. 적대적인 두 국가 사이에 핵 차원의 상호 억지가 안정될수록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오히려 **재래식·하위 수준의 도발과 분쟁**이 일어나기 쉬워진다는 역설이다. 핵의 안정이 하위 수준의 불안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쓰이는 기출 2019 제2문 2)

답안 속 문장

“핵 억지가 확실할수록 상대는 ‘이 정도 도발로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산한다. 안정-불안정 역설의 핵심은 확전에 대한 자신감이 도발의 문턱을 낮춘다는 데 있다.”

억지의 조건

억지는 상대가 행동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해 행동을 단념시키는 전략이다. 성공 조건은 ① 능력(특히 생존 가능한 2차 공격력), ② 의지의 신뢰성, ③ 의사의 전달이다. 처벌에 의한 억지와 거부에 의한 억지로 나뉘고, 동맹국을 위한 억지를 **확장억지**라 한다.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을 **인계철선**이라 한다.

쓰이는 기출 2019 제2문, 2024 제2문 1), 2020 제1문 2)

답안 속 문장

“상호 확증 파괴의 조건은 상대의 1차 공격 뒤에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핵무기의 수가 아니라 그 생존 가능성이 억지를 만든다.”

3-2 기출 풀이

2021 제2문

공격-방어 이론과 사이버 안보 딜레마

총 30점 · 소문 2개 (10 · 20)

제2문.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지문〉

-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지만, 해당 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상대국의 대응 조치를 불러옴으로써 양국의 안보가 모두 저해되는 현상이 종종 관측된다.
-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자는 물리적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접속 장소를 바꾸면서 빠르게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 공격자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도발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공격 혹은 방어를 위해 동일한 기기와 기술이 동원되기도 한다.

- 1) 공격-방어 균형(offense-defense balance)과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offense-defense distinction)이 안보 딜레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 2) 1)의 분석에 기반하여,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이 사이버 안보 딜레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지문의 첫째 동그라미는 안보 딜레마의 정의, 둘째 동그라미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익명성·속도·다수 행위자·이중 용도)이다. 1)은 저비스의 2×2를, 2)는 그것을 사이버 공간에 대입하게 한다.

연결 개념 공격-방어 균형, 구분 가능성, 귀속(attribution) 문제, 이중 용도, 침투와 공격의 구별 불가.

합정 2)에서 지문의 특수성을 하나씩 두 변수에 연결해야 한다. “사이버는 위험하다”는 일반론으로 끝내지 않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안보 딜레마 정의 → 균형·구분 가능성의 효과 → 네 세계	Herz, Jervis 1978	약 600자
2)	익명성·속도·다수 행위자 → 공격 우위 / 이중 용도·침투의 모호성 → 구분 불가 → ‘이중으로 위험한 세계’ / 반론과 완화책	Jervis, Buchanan 2016	약 1,200자

예시답안 — 2021 제2문

지문의 첫째 현상은 안보 딜레마이고, 둘째 현상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이다. 저비스의 공격-방어 이론으로 안보 딜레마의 강도를 설명하고, 이를 사이버 공간에 적용한다.

1) 공격-방어 균형과 구분 가능성이 안보 딜레마에 미치는 영향

안보 딜레마는 무정부 하에서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늘리면 상대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 대응하고, 결국 양국 모두의 안보가 저해되는 현상이다. 저비스는 그 강도를 두 변수로 설명했다. 첫째, **공격-방어 균형**이다. 공격이 유리하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이기므로 선제공격의 유인이 크고, 상대의 작은 군비 증강도 치명적 위협이 되어 안보 딜레마가 심해진다. 방어가 유리하면 적은 비용으로 자국을 지킬 수 있어 상대의 군비 증강에 덜 민감해지고 딜레마가 완화된다. 둘째,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이다. 공격용과 방

어용 무기를 구분할 수 있으면 현상유지국은 방어용 무기만 갖춰 의도를 드러낼 수 있고, 상대도 이를 위협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구분할 수 없으면 방어적 조치도 공격 준비로 읽혀 딜레마가 심해진다. 두 변수를 결합하면 공격 우위이면서 구분이 불가능한 세계가 가장 위험하고, 방어 우위이면서 구분이 가능한 세계가 가장 안정적이다.

2)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사이버 안보 딜레마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은 두 변수 모두를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먼저 공격-방어 균형의 측면이다. 지문처럼 공격자는 물리적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접속 장소를 바꾸며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익명성과 속도는 공격자를 특정하고 보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하는 귀속(attribution) 문제를 낳는다. 보복의 위협이 불확실하면 처벌에 의한 억지가 약해지고, 공격의 기대 이익이 커진다. 또한 다수 공격자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도발할 수 있으므로 방어자는 모든 취약점을 막아야 하지만 공격자는 하나의 취약점만 찾으면 된다. 공격 수단의 개발 비용이 낮고 비국가 행위자도 참여할 수 있어 공격의 문턱이 낮다. 이 조건들은 사이버 공간을 공격 우위의 환경으로 만든다.

다음으로 구분 가능성의 측면이다. 지문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공격 혹은 방어를 위해 동일한 기기와 기술이 동원된다고 한다. 취약점을 찾는 기술은 방어에도 공격에도 쓰이고, 상대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행위는 방어를 위한 정보 수집일 수도 있고 공격의 사전 준비일 수도 있다. 뷰캐넌(Ben Buchanan)이 『사이버 안보 딜레마』(2016)에서 지적했듯, 방어를 위해 상대 네트워크에 들어간 침투를 발견한 국가는 그것이 공격 준비인지 판단할 수 없어 최악을 가정하게 된다. 게다가 사이버 능력은 비밀에 의존하므로 국가가 방어적 의도를 공개적으로 신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구분이 불가능한 세계에 가깝다.

두 측면을 종합하면 사이버 공간은 저비스의 분류에서 공격 우위와 구분 불가가 결합된 ‘이중으로 위험한 세계’에 가깝다. 그 결과 각국은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 능력을 앞다투어 확보하고, 침투를 발견하면 선제적 대응에 나서려는 유인을 가져 사이버 안보 딜레마가 심화된다. 다만 사이버 공격이 실제 물리적 파괴로 이어지기 어렵고 정교한 공격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든다는 점에서 공격 우위가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귀속 능력의 향상, 국가 간 사이버 규범과 신뢰 구축 조치, 핫라인 같은 위기 관리 장치는 구분 가능성을 높이고 공격의 이익을 낮춤으로써 딜레마를 완화하는 수단이 된다.

30점 · 2)는 지문의 특수성을 공격-방어 균형과 구분 가능성의 두 축에 하나씩 대응시킨다.

2022 제1문

냉전과 탈냉전의 동맹, 한미동맹의 동맹 게임

총 40점 · 소문 2개 (20 · 20)

제1문. 동맹은 국가 간 제도적 협력으로 타력 구제(other-help)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1945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동맹 관계가 나타났다. 양자 동맹 관계를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로 구분하여, ‘적(위협)의 공유’, ‘동맹의 유지’, ‘동맹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20점)
- 2)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는 동맹이 유지되는 동안 ‘동맹 게임’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는 동맹국 간 ‘내부 게임’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과 적대 세력 간 ‘외부 게임’이다. 한·미동맹에서 ‘내부 게임’의 대표적 현상과 ‘외부 게임’의 대표적 현상에 대해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1)은 세 기준으로 두 시기를 비교하는 표 형식 서술, 2)는 스나이더의 동맹 게임·적대 게임을 한미동맹 사례로 설명하게 한다.

연결 개념 위협균형, 동맹의 제도화, 포괄적 전략동맹, 방기·연루, 강경·유화.

합정 2)의 ‘외부 게임’은 동맹과 적대 세력 사이의 게임이다. 북한(또는 중국)을 상대로 한 동맹의 정책 선택과 그것이 내부 게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쓴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냉전: 명확한 공동 위협·위협이 결속을 유지·군사 중심 / 탈냉전: 위협의 다원화·제도와 가치로 유지·포괄적 동맹	Walt, 허브 앤 스포크	약 1,200자
2)	내부 게임: 주한미군 감축·방위비 분담·전시작 전통제권·전략적 유연성 / 외부 게임: 북핵 위기의 강경-유화 선택과 그 파급	Snyder 1984·1997	약 1,200자

예시답안 — 2022 제1문

동맹은 무정부 하의 자조 체제에서 타국의 힘을 빌려 안보를 확보하는 타력 구제의 제도이다. 아래에서는 1945년 이후 양자 동맹을 냉전과 탈냉전으로 나누어 세 기준으로 비교하고, 스나이더의 동맹 게임 이론으로 한미동맹의 내부 게임과 외부 게임을 설명한다.

1)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양자 동맹

냉전기 미국은 유럽에서는 다자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아시아에서는 한국·일본·필리핀 등과의 양자 동맹을 묶는 이른바 허브 앤 스포크 체제를 구축했다.

첫째, **적(위협)의 공유**에서 냉전기 양자 동맹은 소련·중국·북한 등 공산 진영이라는 명확하고 단일한 위협을 공유했다. 위협의 실체와 우선순위에 대한 동맹국 간 합의가 높았다. 탈냉전기에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거나 분산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부상, 테러, 사이버 위협처럼 위협이 다원화되었고, 동맹국마다 위협 인식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예컨대 한미 간에는 북한 위협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만 중국을 어느 정도 위협으로 규정할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둘째, **동맹의 유지**에서 냉전기 동맹은 공동 위협 자체가 결속의 동력이었다. 월트의 위협균형론처럼 위협이 클수록 동맹은 견고했고,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은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고 안보를 얻었다. 탈냉전기에는 위협균형론의 예측과 달리 상당수 동맹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그 동력은 오랜 기간 축적된 제도화(연합사령부·정례 협의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유 가치, 그리고 지역 안정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이해 공유였다. 동시에 위협이 약해진 만큼 비용 분담과 역할 조정을 둘러싼 협상이 동맹 유지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셋째, **동맹의 포괄성**에서 냉전기 동맹은 특정 적의 군사 공격에 공동 대응하는 군사 중심의 동맹이었다. 탈냉전기 동맹은 지역 안정, 대테러, 평화유지, 경제·기술 협력, 가치 연대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한미동맹이 2009년 공동비전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2022년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표방한 것이 그 예이다. 미일동맹도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협력으로 범위를 넓혔다.

2) 한미동맹의 내부 게임과 외부 게임

스나이어에 따르면 동맹국은 동맹 내부에서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겪고, 동맹 외부의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강경과 유화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며, 두 게임은 서로 맞물린다.

내부 게임의 대표적 현상은 한국의 **방기 우려**와 미국의 **연루 우려**이다. 첫째 사례는 주한미군 감축이다.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와 카터 행정부의 철군 계획은 한국에 강한 방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은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공약 재확인을 요구했다. 둘째 사례는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역할 조정이다.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때, 한국은 비용 증가와 함께 한반도 밖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대로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강경 대응할 경우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갈 것을 우려해 한국의 행동을 제약해 왔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도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을 다시 조정하는 내부 게임이다.

외부 게임의 대표적 현상은 북한에 대한 **강경과 유화의 선택**이다. 첫째 사례는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는 강경 기조를 보이자 한국은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우려했고, 이후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맺는 유화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협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방기 우려를 동시에 느꼈다. 둘째 사례는 2017~2018년의 변화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에 대해 미국이 최대 압박을 추진하자 한반도 전쟁 위기가 거론되었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유화 국면이 열리자 연합훈련 축소와 같은 결정이 동맹 내부에서 방기와 결속에 대한 우려를 다시 낳았다.

이처럼 외부 게임에서 동맹이 적에게 강경하면 방기 우려는 줄지만 연루 위험이 커지고, 유화하면 연루 위험은 줄지만 방기 우려가 커진다. 한미동맹의 과제는 두 게임의 연동을 관리하면서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데 있다.

40점 · 1)은 세 기준을 소재목처럼 쓰고 각 기준 안에서 냉전 → 탈냉전을 대비한다. 2)는 내부 게임 사례 둘, 외부 게임 사례 둘.

2019 제2문

북한 핵문제 — 핵확산 낙관론·비관론과 안정-불안정 역설

총 30점 · 소문 2개 (16 · 14)

제2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은 두 차례(2018년 6월과 2019년 2월)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30점)

- 1)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핵확산 이론의 낙관론과 비관론을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십시오. (16점)
- 2) 적대적 쌍방 간 핵전력 균형이 달성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의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을 북한과 파키스탄 사례에 적용하여 논하십시오. (14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월츠-세이건 논쟁을 북한에 적용하고, 스나이더의 역설을 북한과 파키스탄 사례로 비교하게 한다.

연결 개념 2차 공격력, 합리적 억지, 조직 편향, 사고, 확산의 연쇄, 하위 수준 도발.

합정 문제의 ‘글렌 스나이더’는 동맹 안보 딜레마의 그 학자다. 잭 스나이더(연쇄 결속)와 혼동하지 않는다. 사례 연도는 정확한 것만 쓴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낙관론: 정권 생존을 위한 합리적 억지, 전면전 억지 / 비관론: 조직 통제·초기 취약성·사고·확산 연쇄	Waltz 1981, Sagan 1995	약 950자
2)	역설의 정의 → 파키스탄(1998 핵실험 후 1999 카르길 분쟁, 테러 공격) → 북한(핵실험 이후 2010 천안함·연평도)	G. Snyder 1965	약 850자

예시답안 — 2019 제2문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 핵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커졌다. 아래에서는 핵확산 낙관론과 비관론을 북한에 적용하고,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을 북한과 파키스탄 사례에 적용한다.

1) 핵확산 낙관론과 비관론의 북한 적용

월츠로 대표되는 낙관론은 핵무기가 전쟁의 비용을 확실하고 막대하게 만들어 보유국을 신중하게 만든다고 본다. 국가는 생존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이므로 소규모 핵전력만으로도 상대의 공격을 억지할 수 있고, 핵보유국 간에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북한에 적용하면,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생존을 위한 억지 수단이며, 핵을 보유한 북한은 정권의 소멸을 부를 전면전이나 핵 사용을 스스로 회피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북한은 핵을 협상과 체제 보장의 지렛대로 쓰게 된다.

세이건으로 대표되는 비관론은 핵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합리적 국가가 아니라 편향과 한계를 가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북한에 적용하면 첫째, 문민 통제가 약하고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는 군의 공세적 편향이나 지도자의 오판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 둘째, 핵전력이 소규모이고 생존

성이 불확실한 개발 초기에는 상대의 선제 타격을 두려워해 먼저 사용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상대도 예방 타격을 고려하게 되어 위기가 불안정해진다. 셋째, 지휘통제와 안전 장치가 미비하면 사고와 오경보, 무단 사용의 위험이 커진다. 넷째, 북한의 핵 보유는 한국·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논의를 자극하고, 경제난 속에서 핵물질과 기술이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게 이전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비관론에 따르면 북한 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위험을 높인다.

2) 안정-불안정 역설과 북한·파키스탄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은 적대적인 두 국가 사이에 핵 차원의 상호 억지가 안정되면, 양측 모두 분쟁이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믿게 되어 오히려 재래식이나 하위 수준의 도발과 충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핵 차원의 안정이 하위 차원의 불안정을 허용하는 셈이다.

파키스탄은 이 역설의 대표 사례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잇따라 핵실험을 했다. 그 이듬해인 1999년 파키스탄 군과 무장 세력은 카슈미르의 카르길 지역에 침투했고 인도와의 제한전이 벌어졌다. 이후에도 인도 내에서 파키스탄 기반 무장 단체의 대규모 테러가 이어졌다. 핵 억지로 인도의 전면적 보복이 제약되리라는 계산이 하위 수준의 도발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한 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하위 수준의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핵 보유가 한미의 대규모 군사 보복을 억지하리라는 판단이 도발의 문턱을 낮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한쪽만 핵을 가진 비대칭 상황이거나 핵전력 균형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설의 전제와 차이가 있고, 도발에는 국내 정치적 동기도 작용했다. 이 역설은 핵 억지만으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함의를 준다. 하위 수준의 도발을 억지하려면 재래식 억지력과 신속한 비례 대응 능력, 확산 통제를 위한 위기 관리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30점 · 1)은 낙관론과 비관론을 같은 분량으로 쓰고, 2)는 정의 → 파키스탄 → 북한 → 함의 순서로 쓴다.

2024 제2문

왈츠의 합리적 억지론과 조직과정모델의 반론

총 30점 · 소문 2개 (14 · 16)

제2문. 왈츠(K. Waltz)는 핵확산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30점)

- 1) 왈츠가 주장하는 ‘합리적 억지론’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14점)
- 2) 엘리슨(G. Allison)이 주장하는 조직과정모델(Organization Process Model)의 관점에서 ‘핵확산 낙관론’에 대한 반론을 기술하십시오. (16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2019 제2문 1)을 이론 중심으로 다시 물었다. 2)는 엘리슨의 모델Ⅱ를 정확히 정의한 뒤 세이건의 논리를 연결하는지가 관건이다.

연결 개념 처벌에 의한 억지, 2차 공격력, 표준운영절차(SOP), 조직의 편협한 이해, 정상 사고.

합정 2)를 ‘관료정치모델(모델Ⅲ)’로 쓰면 감점이다. 조직과정모델은 조직의 **루틴과 표준운영절차**가 결과를 만든다는 모델이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합리적 행위자 가정, 비용의 확실성, 2차 공격력의 용이성, 소규모 핵전력의 충분성, 점진적 확산 → 안정	Waltz 1981·1995	약 800자
2)	모델Ⅱ 정의 → 반론 셋: 예방전쟁 편향, 생존성 소홀, 사고·오경보 / 쿠바 미사일 위기의 사례	Allison 1971, Sagan 1993·1995	약 950자

예시답안 — 2024 제2문

왈츠는 핵확산이 국제체제를 안정시킨다고 주장했고, 이는 핵무기를 합리적 국가가 운용한다는 전제 위에서 있다. 아래에서는 왈츠의 합리적 억지론을 설명하고, 엘리슨의 조직과정모델로 그 전제를 비판한다.

1) 왈츠의 합리적 억지론

왈츠는 국가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본다. 재래식 무기의 시대에는 전쟁의 결과가 불확실하여 지도자들이 승리를 낙관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핵무기는 전쟁의 비용을 확실하고 막대하게 만든다. 승패가 아니라 파괴의 규모가 문제가 되므로, 어떤 지도자도 자국의 소멸을 감수하면서 공격에 나서지 않는다. 억지에 필요한 것은 상대방보다 많은 핵무기가 아니라 상대의 1차 공격 이후에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는 2차 공격력이며, 이는 소규모 핵전력과 은닉·분산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핵보유국도 억지의 논리를 빠르게 학습하고, 핵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왈츠는 이 논리로 점진적 핵확산이 오히려 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냉전기 미소 간 직접 전쟁이 없었고, 핵을 가진 국가끼리 전면전을 벌인 사례가 없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2) 조직과정모델에 따른 반론

앨리슨은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1971)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세 모델로 분석했다. 그 가운데 조직과정모델(모델Ⅱ)은 정부를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여러 조직의 집합으로 본다. 정부의 행동은 최적의 선택이라기보다 각 조직이 미리 정해 둔 표준운영절차와 행동 목록이 산출한 결과이다. 조직은 자신의 임무와 이해를 중심으로 문제를 좁게 정의하고, 불확실성을 피하며, 상황이 변해도 절차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 세이건은 이 시각을 핵확산 논쟁에 적용해 세 가지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예방전쟁의 편향**이다. 군 조직은 공세적 교리와 결정적 승리를 선호하고 외교적 해결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문민 통제가 약한 신흥 핵보유국에서는 상대가 핵을 완성하기 전에 타격하자는 군의 주장이 정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생존성 확보의 소홀**이다. 2차 공격력은 합리적으로는 필수이지만, 조직은 기존 절차와 예산 관행에 따라 움직이므로 핵무기를 취약한 상태로 두거나 은닉·분산을 게을리할 수 있다.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 소련 부대가 본국의 절차대로 기지를 건설해 위장이 미흡했고, 이것이 미국 정찰에 발견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앨리슨의 분석은 조직의 루틴이 전략적 목적과 어긋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사고와 오경보**이다. 복잡하고 긴밀하게 결합된 체계에서는 사고가 피할 수 없이 일어난다. 쿠바 미사일 위기 중에도 미국 정찰기가 쿠바 상공에서 격추되고, 다른 정찰기가 경로를 잃고 소련 영공에 들어가는 등 지도자가 통제하지 못한 사건들이 위기를 확대시킬 뻔했다. 경험과 자원이 부족한 신흥 핵보유국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크다.

결국 조직과정모델은 억지가 합리적 국가라는 가정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핵무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이 편향되고 경직적이라면, 확산은 안정이 아니라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확산의 위험은 보유국 수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문민 통제와 지휘통제 체계의 질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30점 · 1)은 전제 → 논리 → 합의, 2)는 모델Ⅱ의 정의 → 반론 셋 → 사례 순서로 쓴다.

제4장

외교정책결정이론

연결 기출: 2016 제3문 · 2020 제2문 · 2026 제3문 | 함께 볼 장: 3장(조직과정모델과 핵확산), 5장(무역정책의 국내정치)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4-1 핵심 개념	41
4-2 기출 풀이	43
2016 제3문 집단사건의 문제점과 예방법	43
2020 제2문 양면게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45
2026 제3문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 전망이론과 양면게임	47

4-1 핵심 개념

체제 이론이 ‘어떤 국가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행동한다’고 본다면, 외교정책결정이론은 **누가, 어떤 절차와 심리 속에서** 결정했는가를 묻는다. 시험은 결정 단위(개인·소집단·조직·국내 정치)별 대표 이론을 하나씩 사례에 적용하게 한다.

결정 단위	대표 이론	핵심 주장	기출
개인	전망이론(카너먼·트버스키)	준거점 대비 손실 영역에서 위험 추구	2026-3
소집단	집단사고(재니스)	응집성·고립이 비판적 검토를 억압	2016-3
조직	조직과정모델(앨리스 모델Ⅱ)	표준운영절차가 결과를 산출	2024-2
관료·국내	관료정치모델(모델Ⅲ), 양면게임(퍼트남)	협상과 비준의 상호작용, 윈셋	2020-2, 2026-3

집단사고 — 재니스

재니스(Irving Janis)는 『집단사고의 희생자들(Victims of Groupthink)』(1972, 개정판 『Groupthink』 1982)에서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만장일치를 유지하려는 압력** 때문에 대안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고 양식을 집단사고라 불렀다. 선행 조건은 높은 응집성, 외부로부터의 고립, 공정한 리더십의 결여, 체계적 절차의 결여, 구성원의 동질성, 높은 외부 스트레스이다. 증상은 ① 무오류의 환상, ② 집단적 합리화, ③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맹신, ④ 외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⑤ 이견자에 대한 직접 압력, ⑥ 자기 검열, ⑦ 만장일치의 환상, ⑧ 자임한 ‘사고 감시자(mindguards)’이다.

대립 구도

피그만 침공(1961, 집단사고) ↔ 쿠바 미사일 위기(1962, 절차 개선으로 극복)

쓰이는 기출 2016 제3문

답안 속 문장

“집단사고의 문제는 구성원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나치게 믿어서 생긴다. 응집성이 높을수록 반대 의견은 배신처럼 느껴진다.”

양면게임 — 퍼트남

퍼트남(Robert Putnam)은 「외교와 국내정치: 양면게임의 논리(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1988)에서 국제협상을 **수준Ⅰ(협상가 사이의 협상)**과 **수준Ⅱ(국내 구성원의 비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임으로 보았다. 핵심 개념은 **윈셋(win-set)**, 즉 국내에서 비준될 수 있는 수준Ⅰ 합의의 집합이다. 윈셋이 클수록 합의 가능성은 높지만 협상력은 약해지고, 윈셋이 작을수록 합의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 반대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협상력은 커진다(셀링의 명제). 윈셋의 크기는 ① 수준Ⅱ 구성원의 선호와 연합(무합의 비용), ② 비준 제도, ③ 협상가의 전략(부수적 보상, 쟁점 연계, 반향)에 달려 있다.

대립 구도

자발적 배반(약속 파기) ↔ 비자발적 배반(비준 실패)

쓰이는 기출 2020 제2문, 2026 제3문 2)

답안 속 문장

“원셋이 작다는 사실은 협상의 약점이자 강점이다. 상대는 합의를 원할수록 작은 원셋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전망이론 — 카너먼과 트버스키

카너먼(Daniel Kahneman)과 트버스키(Amos Tversky)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1979)에서 사람들이 최종 상태가 아니라 **준거점(reference point)** 대비 이득과 손실로 결과를 평가한다고 보았다. 가치함수는 손실 쪽이 더 가파르다(**손실 회피**). 그 결과 사람들은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적,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추구적**으로 행동한다. 어떤 틀(framing)로 상황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이미 가진 것을 잃는 손실을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무겁게 느낀다(보유 효과). 국제정치에서는 레비(Jack Levy), 맥더모트(Rose McDermott) 등이 전쟁과 위기 결정에 적용했다.

대립 구도

기대효용이론(최종 상태·위험 중립) ↔ 전망이론(준거점·손실 영역의 위험 추구)

쓰이는 기출 2026 제3문 1)

답안 속 문장

“전망이론으로 보면 국가는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보다 이미 잃었다고 느끼는 것을 되찾거나 잃을 것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

앨리슨의 세 모델

앨리슨(Graham Allison)은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1971; 켈리코우와의 개정판 1999)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세 렌즈로 분석했다. **모델 I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를 목표를 극대화하는 단일 행위자로 본다. **모델 II 조직과정모델**은 결과를 조직의 표준운영절차와 루틴의 산물로 본다. **모델 III 관료(정부)정치모델**은 결과를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관료들 사이의 흥정의 산물로 보며, “어디에 서 있느냐가 무엇을 주장하느냐를 결정한다”는 명제로 요약된다.

쓰이는 기출 2024 제2문 2), 2016 제3문(비교)

답안 속 문장

“모델 I 이 ‘왜 그 선택이 합리적이었는가’를 묻는다면 모델 II는 ‘어떤 절차가 그 결과를 만들었는가’, 모델 III은 ‘누가 이겼는가’를 묻는다.”

4-2 기출 풀이

2016 제3문

집단사고의 문제점과 예방법

20점 · 소문 없음

제3문. ‘집단사고(groupthink)’ 개념은 1961년 미국의 ‘피그만(The Bay of Pigs) 사건’처럼 외교정책 실패나 비합리적 정책결정과정 사례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집단사고로 인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재니스의 집단사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 문제점(결함 있는 결정 절차)과 예방법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지 본다.

연결 개념 선행 조건, 여덟 증상, 결함 있는 결정의 징후, 악마의 대변인, 독립된 복수 집단, 재검토 회의.

합정 소문이 없는 20점 문항이라도 ‘정의 → 문제점 → 예방법 → 사례’ 순서를 갖춘다. 증상을 나열만 하지 말고 그것이 **결정 절차의 어떤 결함**으로 이어지는지 연결한다.

■ 답안 개요

단락	핵심 논점	쓸 이론·사례	분량
서론	정의와 피그만 사례	Janis 1972	약 200자
문제점	증상 → 결함 있는 결정(대안·목표 검토 부족, 위험 재평가 실패, 정보 선택 편향, 비상계획 부재)	Janis	약 550자
예방법	리더의 중립, 비판적 평가자·악마의 대변인, 외부 전문가, 복수 집단, 재검토 회의 / 쿠바 미사일 위기	Janis, ExComm	약 450자

예시답안 — 2016 제3문

집단사고는 재니스가 『집단사고의 희생자들』(1972)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응집력이 높은 의사결정 집단이 만장일치를 유지하려는 압력 때문에 대안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고 양식을 말한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가 쿠바 망명자 부대를 통한 피그만 상륙 작전을 승인했다가 실패한 사건은 재니스가 든 대표 사례이다. 유능한 참모들이 모였음에도 작전의 전제에 대한 의문이 제대로 제기되지 않았다.

집단사고로 인한 문제점

집단사고는 높은 응집성, 외부로부터의 고립, 공정한 리더십과 체계적 절차의 결여, 구성원의 동질성, 높은 스트레스라는 조건에서 발생한다. 이때 집단에는 자신들이 실패할 리 없다는 무오류의 환상, 경고 신호를 집단적으로 합리화하는 경향,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맹신, 상대를 약하거나 어리석다고 보는 고정관념이 나타난다. 이견을 가진 구성원에게는 직접적 압력이 가해지고, 구성원 스스로 의심을 말하지 않는 자기 검열이 일어나며, 그 결과 실제로는 없는 만장일치의 환상이 생긴다. 일부 구성원은 지도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사고 감시자 역할을 자임한다.

이러한 증상은 결정 절차의 결함으로 이어진다. 첫째, 고려하는 대안과 목표의 범위가 좁아진다. 둘째, 선호하는 대안의 위험을 재검토하지 않고, 처음에 기각된 대안을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셋째, 정보 탐색이 부족하고, 이미 내린 결론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넷째, 계획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피그만 사건에서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고 상륙하면 쿠바 내 봉기가 일어나리라는 낙관적 전제가 검증되지 않았고, 실패 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그 예이다.

예방 방법

재니스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제시했다. 첫째, 지도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선호를 밝히지 말고 중립을 지켜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구성원 모두에게 비판적 평가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회의마다 한 명 이상이 의도적으로 반대 논리를 펴는 악마의 대변인을 맡게 한다. 셋째,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구성원이 소속 조직의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논의하게 하여 고립을 깬다. 넷째, 같은 문제를 서로 독립된 복수의 집단이나 하위 집단이 검토하게 한다. 다섯째, 잠정 결론을 내린 뒤 ‘두 번째 기회’ 회의를 열어 남은 의문을 다시 검토한다. 여섯째, 상대의 의도와 반응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한다. 케네디 행정부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국가안보회의 집행위원회를 운영하며 대통령이 일부 회의에 불참하고 대안을 경쟁시킨 것은 피그만의 교훈을 반영한 절차 개선의 사례로 평가된다.

20점 · 소문이 없으므로 '정의 → 문제점 → 예방법' 세 단락에 사례를 녹인다.

2020 제2문

양면게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총 30점 · 소문 2개 (20 · 10)

제2문. 외교정책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나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 등 국제정치적 요인은 물론 국내정치 역학에 영향을 받는다.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국내외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협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양면게임(Two-Level Game)을 제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양면게임의 주요 개념과 주장을 기술하고, 양면게임 협상에서의 단기적 결과와 반복게임 협상에서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 2) 한미 양국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로비 또는 시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양면게임을 이용하여 논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퍼트남 모델의 개념(수준 I·II, 윈셋, 비준, 협상 전략)을 정리하고, ‘단기 결과 대 반복게임의 장기 결과’라는 응용을 요구한다. 2)는 한미 FTA에서 양국 이익집단이 윈셋을 바꾼 사례다.

연결 개념 윈셋, 셀링 명제, 손 묵기, 부수적 보상, 쟁점 연계, 반향, 비자발적 배반, 평판.

합정 2)에서 한국 측만 쓰면 반쪽이다. **한미 양국** 이익집단을 모두 쓰라는 문제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사례	분량
1)	개념 → 윈셋 결정 요인 → 단기: 작은 윈셋의 협상력 / 장기: 평판·학습으로 손 묵기 효과 감소, 비자발적 배반의 신뢰 비용, 반향과 초국가 연합	Putnam 1988, Axelrod	약 1,200자
2)	한국 농축산업(쌀 제외·쇠고기) → 윈셋 축소 / 미국 자동차 산업 → 2010년 추가 협상 / 양국 제조업의 수출 이익 → 윈셋 확대	한미 FTA	약 600자

예시답안 — 2020 제2문

외교정책은 국제 협상과 국내 정치가 맞물린 결과이다. 퍼트남의 양면게임은 이 연계를 협상가가 두 개의 판에서 동시에 게임을 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양면게임의 개념과 단기·장기 결과를 논하고, 이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용한다.

1) 양면게임의 개념과 단기·장기 결과

퍼트남은 국제협상을 협상가 사이의 협상인 수준 I 과, 그 합의를 국내 구성원이 비준하는 수준 II로 나누었다. 비준은 의회 표결 같은 공식 절차만이 아니라 이익집단, 여론, 관료 조직의 수용까지 포함한다. 핵심 개념은 윈셋, 즉 국내에서 비준될 수 있는 수준 I 합의의 집합이다. 두 나라의 윈셋이 겹쳐야 합의가 가능하므로, 윈셋이 클수록 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윈셋이 작을수록 협상가는 “이 이상 양보하면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 협상력이 커진다.

윈셋의 크기는 세 요인에 달려 있다. 첫째, 수준II 구성원의 선호와 연합이다. 합의 실패의 비용이 클수록, 합의를 지지하는 집단이 많을수록 윈셋은 커진다. 둘째, 비준 제도이다. 의회의 3분의 2 찬성처럼 비준 요건이 까다로울수록 윈셋은 작아진다. 셋째, 협상가의 전략이다. 협상가는 반대 집단에 부수적 보상

을 주거나, 쟁점을 연계해 지지 연합을 넓히거나, 상대국 국내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반향 전략으로 상대의 원샷을 넓힐 수 있다. 반대로 자국의 손을 의도적으로 묶어 원샷을 좁힐 수도 있다.

단기적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일회적 협상에서는 국내 제약이 큰 쪽이 유리하다. 작은 원샷은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가 되고, 상대는 합의를 원할수록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다만 원샷이 너무 작으면 겹치는 영역이 사라져 협상이 결렬되거나, 서명된 합의가 비준되지 못하는 비자발적 배반이 일어난다.

반복게임의 장기적 결과는 다르다. 첫째, 협상이 반복되면 상대는 국내 제약에 대한 주장을 검증하고 학습하므로, 국내 반대를 과장해 양보를 얻는 손 묶기 전략의 효과는 줄어든다. 허세가 드러나면 신뢰가 훼손되고 이후 협상의 비용이 커진다. 둘째, 비자발적 배반이 반복되면 그 국가는 합의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평판을 얻어, 상대가 협상 자체를 꺼리거나 더 큰 보장을 요구하게 된다. 셋째, 반대로 반복 협상은 액셀로드가 말한 미래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어 상호 양보를 쉽게 한다. 협상가들은 반향과 쟁점 연계를 통해 서로의 국내 지지 연합을 넓히고, 초국가적 이익 연합이 형성되면서 양국의 원샷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단기적 협상력보다 이행 능력과 신뢰가 결과를 좌우한다.

2)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양면게임

한국에서는 농축산업이 개방 피해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다. 농민 단체의 시위와 로비는 한국의 원샷을 좁혔고,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감 품목을 지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2008년의 대규모 촛불시위는 협정 비준을 둘러싼 국내 여론의 반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노조가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반대했고, 이는 미국의 원샷을 좁혀 비준을 지연시켰다. 그 결과 양국은 2010년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벌였고,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을 얻어 냈다. 이는 국내 제약을 지렛대로 쓴 미국의 협상력이 작동한 사례이다. 반면 양국의 수출 제조업, 한국의 전자·자동차 산업과 미국의 서비스·농산물 수출 업계는 협정을 지지해 원샷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결국 협정은 양국 국내 연합이 재조정된 뒤 비준되어 2012년 발효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익집단의 로비와 시위가 원샷의 크기를 바꾸고, 원샷의 비대칭이 협상 결과를 좌우한다는 양면게임의 논리를 잘 보여 준다.

30점 · 1)은 개념 → 원샷의 결정 요인 → 단기·장기 결과, 2)는 양국 이익집단이 원샷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로 쓴다.

2026 제3문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 전망이론과 양면게임

총 30점 · 소문 2개 (15 · 15)

제3문.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면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이란 측의 휴전안 교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헤즈볼라 진영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30점)

- 1)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기초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발발 원인을 설명하십시오. (15점)
- 2)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 게임(two-level game)에 기초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개인 수준(전망이론)과 국내-국제 연계 수준(양면게임)의 두 이론으로 한 전쟁의 발발과 종전 협상을 각각 설명하게 한다.

연결 개념 준거점, 손실 영역, 위험 추구, 손실 회피, 윈셋, 비준, 제3자(동맹국)의 행동, 반향.

합정 2026년 시사 문항이다. 이 책의 예시답안은 **문제지에 주어진 사실**(2026년 2월 선제 타격, 미국-이란 휴전안 교환,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 지속)만 전제로 쓰고, 나머지는 ‘이론이 예측하는 조건’의 형태로 서술한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날짜·발언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	분량
1)	전망이론의 명제 → 미국·이스라엘의 준거점과 손실 프레임 → 선제 타격이라는 위험 추구 / 이란의 손실 회피 → 한계	Kahneman-Tversky 1979, Levy	약 900자
2)	양측 윈셋의 축소 요인(국내 강경파·정당성·제도) →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윈셋을 좁힘 → 비자발적 배반의 우려	Putnam 1988	약 900자

예시답안 — 2026 제3문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타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안을 교환했음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헤즈볼라 공격이 지속되면서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아래에서는 전쟁의 발발을 전망이론으로, 종전 협상의 난항을 양면게임으로 설명한다.

1) 전망이론으로 본 전쟁의 발발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과를 최종 상태가 아니라 준거점 대비 이득과 손실로 평가하며, 같은 크기라도 손실을 이득보다 크게 느낀다. 그 결과 이득 영역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는 위험 회피 성향을, 손실 영역에서는 확실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불확실하지만 큰 도박을 택하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인다. 레비 등은 이 명제를 국가 지도자의 전쟁 결정에 적용해, 지도자가 현재 상황을 손실 프레임으로 인식할 때 위험한 군사 행동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를 적용하면 선제 타격은 기대효용의 냉정한 계산보다 손실 프레임에서의 위험 추구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준거점을 ‘이란이 위협적 능력을 갖추기 전의 안보 상태’에 두었다면, 이란의 능력 증대와 역내 대리세력의 활동이 지속되는 현상유지는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태로 인식된

다. 이 경우 현상유지라는 ‘확실한 손실’보다, 확전과 보복의 위험이 있더라도 손실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선제 타격이라는 도박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또한 손실 회피 때문에 지도자는 이미 투입한 비용과 확보했다고 믿는 안보 이익을 잃지 않으려 하므로, 일단 시작된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 어려워진다. 이스라엘이 휴전안 교환 이후에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 것도, 공격 중단을 ‘확보한 우위의 상실’로 인식했다면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란의 측면에서도 공격을 받은 이후의 상황은 명백한 손실 영역이다. 이란 지도부는 체제의 위신과 억지력의 상실을 되돌리기 위해 위험한 보복이나 강경한 협상 태도를 택할 유인이 커진다. 다만 전망이론은 준거점이 무엇인지를 사후적으로 정할 위험이 있고, 집단 결정에 개인 심리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도부의 공식 인식과 결정 과정에 대한 증거로 보완해야 한다.

2) 양면게임으로 본 종전 협상의 난항

퍼트남의 양면게임에서 국제 합의는 협상가 사이의 수준 I 협상과 국내 구성원의 비준인 수준Ⅱ가 동시에 충족될 때만 성립한다. 양측의 윈셋이 겹치지 않거나 그 폭이 좁으면 합의는 어렵다.

첫째, 양측의 윈셋이 모두 좁았다. 전쟁 중에는 국내 여론이 강경해지고, 양보는 패배나 굴복으로 해석되기 쉽다. 미국 지도부는 선제 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성과 없이 휴전하면 국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란 지도부는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양보하면 체제 내 강경파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제약은 휴전안 교환이 있었음에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의 범위를 좁혔다.

둘째, 협상의 구조가 사실상 다층적이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안을 교환했지만, 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그대로 묶여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자, 이란 국내에서는 휴전안이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져 이란의 윈셋이 더 좁아졌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국 이스라엘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에 서명해도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비자발적 배반의 위험을 안게 되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행동까지 구속하는지 의심하게 되어 합의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셋째, 협상가의 전략적 선택도 제약되었다. 부수적 보상이나 쟁점 연계로 상대의 국내 반대를 무마하려면 상대 사회와의 신뢰와 소통 채널이 필요하지만, 교전 중에는 반향 전략이 오히려 상대 국내 강경파를 자극할 수 있다. 결국 종전 협상의 난항은 양국 국내 정치의 강경화와 제3의 행위자인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겹쳐 윈셋의 교집합이 사라진 결과로 설명된다. 합의를 위해서는 동맹국까지 포함한 이행 보장 장치와 단계적 휴전처럼 각국이 국내에서 ‘패배가 아닌 합의’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30점 · 시사 문항이므로 문제지에 주어진 사실(2026년 2월 선제 타격, 휴전안 교환,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 지속)만 전제로 하고, 나머지는 이론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서술했다.

제5장

국제정치경제

연결 기출: 2016 제1문 · 2017 제2문 · 2018 제2문 · 2025 제1문 · 2025 제3문 · 2026 제2문 | 함께 볼 장: 2장(패권안정론), 7장(자유주의 국제질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5-1 핵심 개념	50
5-2 기출 풀이	53
2016 제1문 금본위제 — 영국의 패권과 국내정치에 의한 붕괴	53
2017 제2문 브레튼우즈 II의 특징과 지속가능성	55
2018 제2문 금융 세계화와 삼위불일체	57
2025 제1문 무역정책의 국내정치 — 요소·부문 모델, 집단행동, 선거제도	59
2025 제3문 AIIB — 신자유제도주의와 신현실주의	62
2026 제2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 무역과 기후의 논란	64

5-1 핵심 개념

11개년 33문항 가운데 6문항이 국제정치경제다. 출제는 **국제통화 체제의 역사**(금본위 → 브레튼우즈 → 변동환율과 금융 세계화)와 **무역의 정치경제**(국내 이익집단·제도, 새로운 통상 쟁점) 두 줄기로 나뉜다. 시기와 제도의 이름은 정확히 써야 한다.

체제	고정환율	자본 이동 자유	통화정책 자율성
고전적 금본위(1870년대~1914)	○	○	×
브레튼우즈 I (1944~1971/73)	○(조정 가능 고정)	×(자본 통제)	○
변동환율 체제(1973~)	×	○	○
유로존 회원국	○(단일 통화)	○	×

삼위불일체(트릴레마) — 먼델·플레밍

먼델(Robert Mundell)과 플레밍(J. Marcus Fleming)의 개방 거시경제 모형에서 도출된 명제로, 한 나라는 ① 고정환율, ② 자유로운 자본 이동, ③ 독자적 통화정책 가운데 **두 가지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환율을 고정하면 국내 금리를 해외 금리에 맞춰야 하므로 통화정책 자율성을 잃는다. 국제정치경제학자 코언(Benjamin Cohen)은 이를 ‘불경한 삼위일체(unholy trinity)’라고 불렀다. 레이(Hélène Rey)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면 변동환율이라고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노출되어 사실상 ‘트릴레마가 아니라 딜레마’라고 주장했다(2013).

쓰이는 기출 2018 제2문, 2016 제1문 2), 2017 제2문

답안 속 문장

“금본위제가 자본 이동과 고정환율을 위해 통화 자율성을 포기한 체제였다면, 브레튼우즈 체제는 자본 통제를 대가로 고정환율과 통화 자율성을 함께 얻은 체제였다.”

금본위제와 대중 정치 — 아이켄그린

고전적 금본위제는 각국 통화의 금 태환과 자유로운 금·자본 이동으로 유지되었다. 중앙은행은 국제수지 적자가 나면 금리를 올리고 디플레이션을 감수해 금 평가를 지켰다.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은 『황금 족쇄(Golden Fetters)』(1992)와 『자본의 세계화(Globalizing Capital)』에서 이 체제의 **신뢰성**이 중앙은행이 국내 정치의 압력에서 격리되어 있었다는 데 기초했다고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참정권 확대,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성장,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실업을 감수하는 디플레이션 조정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자 금 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

쓰이는 기출 2016 제1문 2)

답안 속 문장

“금본위제의 규칙은 실업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던 시대의 규칙이었다. 유권자가 실업을 심판하기 시작하자 금 평가는 더 이상 믿을 만한 약속이 아니게 되었다.”

브레튼우즈 I 과 트리핀 딜레마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로 출범한 체제는 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태환하고, 다른 통화는 달러에 고정 가능한 고정환율로 연동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단기 국제수지 지원을,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이 재건·개발 자금을 맡았고, 자본 통제가 허용되었다. 러기(John Ruggie)는 이를 국내 복지·완전고용과 국제적 개방을 결합한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라 불렀다. 트리핀(Robert Triffin)은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미국이 적자를 내야 하지만, 적자가 쌓일수록 달러의 금 태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딜레마를 지적했다(1960).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정지, 그해 12월 스미스소니언 협정을 거쳐 1973년 주요국이 변동환율로 이행했다.

쓰이는 기출 2017 제2문, 2016 제1문

답안 속 문장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국이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바로 그 행위가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구조적 모순이다.”

브레튼우즈 II

둘리(Michael Dooley), 폴커츠-란다우(David Folkerts-Landau), 가버(Peter Garber)가 2003년 「부활한 브레튼우즈 체제에 관한 소론(An Essay on the Revived Bretton Woods System)」에서 붙인 이름이다. 중심국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내며 주변국의 상품을 흡수하고, 주변국(특히 중국 등 동아시아)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연동하거나 저평가 상태로 관리해 수출 주도 성장을 이루며,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 등으로 보유해 미국의 적자를 금융한다. 1950~60년대 유럽·일본이 하던 역할을 동아시아가 맡았다는 비유이다.

대립 구도

지속 가능(상호 이익의 균형) ↔ 지속 불가능(글로벌 불균형·신뢰 위기)

쓰이는 기출 2017 제2문

답안 속 문장

“브레튼우즈 II는 주변국의 고용과 중심국의 소비를 교환하는 암묵적 거래이다. 그 거래의 지속 여부는 경제 논리보다 양측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무역정책 선호의 두 모델

스톨퍼-새뮤얼슨 정리에 따르면 무역 개방은 그 나라에 풍부한 생산요소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희소한 생산요소의 실질 소득을 낮춘다. 생산요소가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가정하므로 무역 선호는 **계급(요소) 단위**로 갈린다. 로고스키(Ronald Rogowski)는 『통상과 연합(Commerce and Coalitions)』(1989)에서 이를 이용해 국내 정치 균열을 설명했다. **리카도-바이너(특정 요소) 모델**은 요소가 산업 간에 이동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므로 소득이 **산업 부문**에 따라 갈린다. 수출 부문의 자본가와 노동자는 함께 자유무역을, 수입 경쟁 부문의 자본가와 노동자는 함께 보호무역을 원한다. 히스콕스(Michael Hiscox)는 요소 이동성의 정도가 계급 균열과 산업 균열 가운데 어느 쪽이 나타날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2002).

쓰이는 기출 2025 제1문 1)

답안 속 문장

“두 모델의 차이는 가정 하나에서 나온다. 생산요소가 산업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느냐이다.”

집단행동의 논리와 보호무역

올슨(Mancur Olson)은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1965)에서 큰 집단은 무임승차 때문에 공동 이익을 위해 조직하기 어렵고, 작고 이익이 집중된 집단이 조직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무역에서 보호의 이익은 소수 생산자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은 다수 소비자에게 분산되므로 생산자가 정치적으로 우위에 선다. 샤프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한 『정치, 압력, 관세』(1935)에서 이 현상을 보여 주었다.

쓰이는 기출 2025 제1문 2)

답안 속 문장

“관세 1달러의 이익은 한 공장이 고스란히 받지만, 그 비용은 수백만 소비자가 몇 원씩 나누어 낸다. 정치 는 고스란히 받는 쪽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배출권거래제(EU ETS, 2005년 도입)는 역내 사업장의 배출 총량을 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총량제한·거래(cap-and-trade)** 제도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외에서 수입되는 특정 탄소 집약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내재된 배출량만큼 수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게 하여, 역내 탄소 가격을 국경에서 맞추는 제도이다. 목적은 **탄소 누출**(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생산이 이전되는 현상)을 막는 것이다. 2023년 10월부터 보고 의무만 있는 전환기를 거쳤고, 문제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었다.

쓰이는 기출 2026 제2문

답안 속 문장

“배출권거래제가 ‘역내에서 누가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가’를 정한다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외 생산자가 그 비용을 피해 갈 수 있는가’를 막는다.”

5-2 기출 풀이

2016 제1문

금본위제 — 영국의 패권과 국내정치에 의한 붕괴

총 50점 · 소문 2개 (20 · 30)

제1문. 19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금본위제도는 고정환율제,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고도로 통합된 국제통화금융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붕괴된 금본위제도를 복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50점)

- 1) 금본위제도가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 국제통화금융체제를 주도했던 영국의 역할을 패권안정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0점)
-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참정권이 확대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변화는 금본위제도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1)은 패권안정론으로 금본위제기 영국의 역할을, 2)는 대중 민주주의의 등장인 금본위 규칙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메커니즘을 묻는다. 배점이 큰 2)가 승부처다.

연결 개념 공공재, 최종 대부자, 런던의 자본 수출, 신뢰성, 디플레이션 조정, 임금 경직성, 삼위불일체, 국제 협력의 실패.

합정 2)에서 '참정권 확대 → 붕괴'를 한 줄로 끝내지 않는다. **왜** 참정권이 조정 메커니즘을 막고, **어떻게** 투기적 자본 이동을 불러 붕괴로 이어졌는지 인과 사슬을 단계별로 쓴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패권안정론의 명제 → 영국의 역할: 개방 시장, 자본 수출, 파운드·런던 금융, 잉글랜드은행의 지휘 / 한계(협력 의존)	Kindleberger, Gilpin, Eichengreen	약 1,200자
2)	금본위 규칙과 신뢰성의 정치적 조건 → 참정권·노조·임금 경직성 → 디플레이션 조정 불가 → 신뢰 상실·투기 → 협력 실패 → 붕괴(영국 1931, 미국 1933)	Eichengreen 1992, Polanyi, 트릴레마	약 1,800자

예시답안 — 2016 제1문

고전적 금본위제는 고정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통합된 국제금융을 결합한 체제였다. 이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었고 전간기에 왜 복구되지 못했는지는 국제 수준의 패권과 국내 수준의 정치 변화를 함께 보아야 설명된다.

1) 패권안정론으로 본 영국의 역할

패권안정론은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경제 질서가 공공재이며, 그 비용을 감당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패권국이 있을 때 유지된다고 본다. 킨들버거는 안정자의 역할로 과잉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 경기 역행

적 장기 대부, 안정적 환율 체제의 유지, 위기 시 최종 대부자 기능을 들었다. 길핀은 패권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질서를 설계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19세기 후반 영국은 이 역할을 수행했다.

첫째, 영국은 곡물법 폐지 이후 자유무역을 유지하며 자국 시장을 세계에 개방했다. 다른 나라는 영국 시장에 상품을 팔아 파운드를 벌 수 있었고, 이는 국제수지 조정을 쉽게 했다. 둘째, 영국은 세계 최대의 자본 수출국으로서 런던 금융시장을 통해 신대륙과 식민지에 장기 자본을 공급했다. 영국의 해외 대부는 주변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고 성장을 뒷받침해, 금본위 규칙에 따른 조정이 지나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게 했다. 셋째, 파운드는 금과 함께 사실상의 국제 준비통화였고, 런던은 무역 금융과 결제의 중심이었다. 각국은 금 대신 파운드 표시 자산을 보유해 금 부족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었다. 넷째, 잉글랜드은행은 금리 조정으로 국제 자본 흐름을 움직여 체제 전체의 조정을 이끌었다. 케인스가 잉글랜드은행을 ‘국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한 것은 이 역할을 가리킨다. 영국의 금 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확고했기에,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자본이 런던으로 들어와 위기가 진정되었다.

다만 아이켄그린이 지적했듯 영국 혼자 체제를 지탱한 것은 아니다. 위기 때 프랑스은행 등 다른 중앙은행이 잉글랜드은행에金を 빌려주는 국제 협력이 있었다. 따라서 영국의 패권은 협력을 조정하는 중심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2) 참정권 확대와 금본위제의 붕괴

금본위제는 규칙 자체보다 그 규칙이 지켜지리라 하는 신뢰로 유지되었다. 국제수지 적자로 금이 유출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긴축한다. 그 결과 물가와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이 늘어나는 고통을 거쳐 수출 경쟁력이 회복된다. 금본위제가 고정환율과 자본 이동을 보장하는 대가로 각국은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했다. 삼위불일체로 말하면, 고정환율과 자본 이동을 택하고 국내 경기 안정을 포기한 체제였다. 이 선택이 신뢰받으려면 정부가 금 평가 유지를 다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하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19세기에는 이 확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조건이 있었다. 선거권이 재산 소유자 등에 제한되어 실업의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노동조합은 약했고, 임금은 비교적 유연하게 떨어져 디플레이션 조정의 비용이 짊어졌다. 중앙은행은 국내 정치로부터 격리되어 금 평가 방어에 전념할 수 있었고, 시장은 일시적 금 유출을 투기 기회가 아니라 곧 복구될 일시적 현상으로 보았다. 자본은 위기 때 오히려 안정화 방향으로 움직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조건이 무너졌다. 첫째, 참정권이 노동자와 여성에게로 확대되면서 실업과 디플레이션의 고통을 겪는 다수가 유권자가 되었다. 노동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성장했고, 정부는 금 평가 방어와 완전고용·사회복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둘째,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단체교섭으로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 되었다. 같은 긴축으로 물가와 임금이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 조정은 더 긴 실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은행의 정책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그 독립성이 의심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기대를 바꾸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높은 실업을 감수하면서까지 금 평가를 지킬지 의심하게 되었다. 금 유출이 시작되면 그것은 곧 평가 절하의 신호로 해석되었고, 자본은 안정화가 아니라 투기적으로 빠져나갔다. 신뢰가 사라지자 중앙은행은 더 높은 금리로 방어해야 했고, 이는 다시 국내 정치의 반발을 키우는 악순환을 낳았다. 영국은 1925년 전쟁 이전의 평가로 금본위제에 복귀했지만 과대평가된 파운드로 실업과 노동 쟁의를 겪었고, 1931년 금융위기 속에서 금본위제를 이탈했다. 미국도 1933년 금 태환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내 정치의 변화는 국제 협력도 어렵게 했다. 각국 정부가 자국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해야 했으므로,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자국 통화를 긴축하거나 금을 빌려주는 협력은 정치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웠다. 전쟁 부채와 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협력을 막았다. 킨들버거의 말대로 영국은 체제를 지탱할 능력을 잃었

고, 미국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 결국 국내적으로는 신뢰성의 정치적 기반이, 국제적으로는 패권과 협력이 함께 무너지면서 금본위제는 복구되지 못했다. 이 경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가 자본 통제를 허용해 국내 고용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한 이유가 되었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말했듯, 자기조정적 시장의 규칙을 사회가 끝까지 감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50점 · 1)은 이론 → 영국의 역할 네 가지 → 한계, 2)는 '신뢰성의 정치적 조건 → 조건의 붕괴 → 시장의 반응 → 협력 실패'의 인과 사슬로 쓴다.

2017 제2문

브레튼우즈 II의 특징과 지속가능성

총 30점 · 소문 2개 (10 · 20)

- 제2문.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는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의 국제통화 질서는 '브레튼우즈 II(Bretton Woods II)' 질서로 불려진다. 이 질서 하에서, 미국은 막대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하고, 기축통화와 정부채권 발행을 통하여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브레튼우즈 II' 질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10점)
 - 2)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던 '브레튼우즈 I'과 비교하여, '브레튼우즈 II' 질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브레튼우즈 II 가설의 내용을 알고, 브레튼우즈 I 과의 구조적 유사성·차이를 근거로 지속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지 본다.

연결 개념 중심-주변, 수출 주도 성장, 외환보유액, 트리핀 딜레마, 글로벌 불균형, 금 태환 정치.

합정 '지속 가능/불가능' 가운데 한쪽 입장을 분명히 하되, 반대 논거를 함께 다룬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중심국 적자·주변국 연동 환율·외환 보유·국채 매입의 순환 / 명칭의 유래	Dooley 외 2003	약 600자
2)	유사점(중심국 적자에 의존, 트리핀형 신뢰 문제) / 차이점(금 닷 부재, 자본 이동, 주변국의 이질성) → 지속 조건과 위험 → 입장	Triffin, Eichengreen	약 1,200자

예시답안 — 2017 제2문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동아시아의 흑자가 공존하는 국제통화 질서가 과연 안정적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아래에서는 브레튼우즈 II 질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브레튼우즈 I 과 비교해 그 지속가능성을 논한다.

1) 브레튼우즈 II 질서의 특징

브레튼우즈 II는 돌리, 폴커츠-란다우, 가버가 2003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오늘날의 국제통화 질서가 1950~6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중심-주변 구조를 재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중심국 미국은 무

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하며 주변국의 상품을 흡수한다. 주변국,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연동하거나 저평가 상태로 관리해 수출 주도 성장을 추구한다. 주변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보유액으로 쌓아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 이렇게 환류된 자본이 미국의 적자를 낮은 금리로 금융하므로 미국은 기축통화와 국채 발행을 통해 적자를 지속할 수 있다. 주변국은 고용과 성장을, 중심국은 소비와 저금리 자금을 얻는 상호 의존적 거래가 이 질서의 핵심이다.

2) 브레튼우즈 I 과 비교한 지속가능성

두 체제의 유사점은 중심국의 적자가 체제 운영의 전제라는 점이다. 브레튼우즈 I 에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고, 유럽과 일본은 저평가된 고정환율로 수출 주도 성장을 이루며 달러를 보유했다. 이 구조는 트리핀이 지적한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미국이 적자를 내야 유동성이 공급되지만, 적자가 쌓일수록 미국의 금 보유에 비해 해외 달러 부채가 커져 달러의 금 태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결국 1971년 미국은 금 태환을 정지했고 1973년 주요국은 변동환율로 이행했다. 브레튼우즈 II 도 미국의 대외 부채가 누적될수록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트리핀형 문제를 공유한다.

차이점도 크다. 첫째, 브레튼우즈 II 에는 금이라는 닻이 없다. 달러는 태환 의무가 없는 명목화폐이므로 ‘금 창구’에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형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공식 협정이 아니라 각국의 자발적 정책 선택이 만든 암묵적 질서이므로, 참여국이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 셋째,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금융시장이 거대해져 민간 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공식 부문의 결정을 압도할 수 있다. 넷째, 브레튼우즈 I 의 주변국이던 서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오늘날 핵심 주변국인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국가이다.

이 차이를 감안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지속 가능하다는 견해는 양측 모두 질서를 유지할 이해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변국은 수출 산업의 고용이 필요하고, 막대한 달러 자산을 보유한 만큼 달러 가치 급락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낮은 비용으로 소비와 재정을 금융할 수 있다. 상호 의존이 이른바 ‘금융 공포의 균형’으로 서로의 이탈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지속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첫째, 미국의 대외 부채 누적이 언젠가 달러 신뢰의 위기를 부를 수 있고, 둘째, 주변국도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불태화 비용, 물가 상승, 달러 자산의 평가손실 위험을 무한히 감당할 수 없으며, 셋째, 글로벌 불균형이 미국의 과잉 유동성과 자산 거품을 낳아 2008년 위기의 배경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아이켄그린 등은 주변국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어서 집단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레튼우즈 I 과의 유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종합하면 브레튼우즈 II 는 단기적으로는 참여국의 이해가 맞물려 지속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균형의 누적과 미중 간 전략 경쟁이라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과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이 질서의 조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질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서는 흑자국과 적자국이 함께 불균형을 줄이는 국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30점 · 2)는 유사점 → 차이점 → 지속 조건과 위험 → 입장의 순서. 결론에서 '조건부 지속 가능'처럼 입장을 분명히 한다.

2018 제2문

금융 세계화와 삼위불일체

총 30점 · 소문 2개 (20 · 10)

제2문. 각국 정부의 탈규제정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막대한 돈이 국경을 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단기 투기자본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의 세계화로 인해 현 단계 국제통화체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각국 정부의 금융통화 안정화정책 또한 점차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현 단계 국제통화체제가 불안정한 이유를 먼델(Mundell)과 플레밍(Flemming)의 '삼위불일체'(unholy trinity) 모델로 설명하시오. (20점)
- 2)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IMF 개혁, 기축통화체제의 개혁,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국가 간 협력체제 강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삼위불일체로 현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을 설명하고, 2)의 네 영역별 국제 노력을 정리하게 한다.

연결 개념 트릴레마, 중간 환율제도의 취약성, 투기적 공격, 자기실현적 위기, 국제통화기금 지분 개혁, 특별인출권, 토빈세, G20·금융안정위원회·통화스와프.

합정 문제의 철자 'Flemming'은 원문대로 옮겼다. 답안에서는 플레밍으로 쓰면 된다. 2)는 10점이므로 영역당 두세 문장이면 충분하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트릴레마 → 역사적 선택 → 자본 이동 자유가 주어진 오늘날의 불안정: 중간 제도의 투기적 공격, 변동환율의 변동성, 정책 자율성 약화(레이)	Mundell-Fleming, Cohen, Rey	약 1,200자
2)	IMF 개혁 / 기축통화 / 금융거래세 / 국가 간 협력 — 영역별 2~3문장	—	약 600자

예시답안 — 2018 제2문

금융의 세계화로 단기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각국의 통화 안정 정책은 점점 효과를 잃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를 삼위불일체 모델로 설명하고, 국제금융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네 영역으로 정리한다.

1) 삼위불일체 모델로 본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

먼델과 플레밍의 개방 거시경제 모형에서 도출된 삼위불일체는 한 나라가 고정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자적 통화정책의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고 둘만 선택할 수 있다는 명제이다.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환율을 고정하면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와 달라질 때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입하므로, 중앙은행은 환율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해외 수준에 맞춰야 하고 통화정책 자율성을 잃는다.

역사적으로 각 체제는 서로 다른 조합을 택했다. 금본위제는 고정환율과 자본 이동을 택하고 통화 자율성을 포기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자본 통제를 허용해 고정환율과 통화 자율성을 함께 확보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진행되어, 각국은 고정환율과 통화 자율성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 단계의 불안정은 이 제약에서 비롯된다. 첫째, 탈규제와 정보통신기술로 자본 이동이 사실상 주어진 조건이 되었으므로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둘째, 고정환율이나 관리변동처럼 환율 안정과 통화 자율성을 함께 추구하는 중간적 제도는 투기적 공격에 취약하다. 시장이 중앙은행의 방어 의지와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대규모 투기가 일어나고, 이는 자기실현적 위기가 된다. 1992년 유럽 환율조정장치 위기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고정적 환율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충돌한 사례이다. 셋째, 변동환율을 택해도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단기 투기자본의 흐름이 환율을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크게 움직이고, 국내 금리 정책은 자본 유출입에 의해 효과가 상쇄된다. 레이가 지적했듯 중심국의 통화정책과 투자자의 위험 선호가 만드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이 각국의 신용과 자산 가격을 함께 움직이므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면 변동환율 국가도 통화 자율성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결국 금융 세계화는 삼위불일체의 선택지를 좁히고, 어떤 선택을 하든 위기와 변동성의 비용을 높여 현 국제통화체제를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2) 국제금융체제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첫째, **IMF 개혁**이다. 신흥국의 비중을 반영하도록 지분과 투표권을 조정하는 개혁이 추진되었고, 2008년 위기 이후 사전 예방적 신용공여 제도를 도입해 위기 전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감시 기능도 개별 국가에서 국가 간 파급 효과로 확대되었다.

둘째, **기축통화체제의 개혁**이다. 달러 중심 체제의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특별인출권(SDR)의 역할을 확대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2009년 대규모 SDR 배분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위안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어 준비통화의 다변화가 진행되었다.

셋째,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이다. 단기 투기 거래에 낮은 세율의 세금을 매겨 투자를 억제하자는 토빈세 구상이 대표적이며, EU에서도 금융거래세 도입이 논의되었다. 다만 국제적 합의 없이는 자본이 과세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므로 실현에 한계가 있다.

넷째, **국가 간 협력체제 강화**이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위기 대응의 중심 협의체가 되었고, 금융안정 위원회와 바젤위원회를 통해 은행 자본 규제가 강화되었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같은 지역 금융 안전망도 확충되었다.

30점 · 1)은 모델 → 역사적 선택 → 현 단계의 불안정 세 갈래, 2)는 문제지가 정한 네 영역을 그대로 소제목처럼 쓴다.

2025 제1문

무역정책의 국내정치 — 요소·부문 모델, 집단행동, 선거제도

총 50점 · 소문 3개 (20 · 15 · 15)

제1문.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수입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보호무역의 원인과 정치경제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무역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사회 중심적 접근법(society-centered approach)은 국가 내 다양한 이해관계(interests)와 제도(institutions)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 1) 국내 이익집단의 무역정책 선호를 설명하는 톨로서 생산요소 모델(Stolper-Samuelson model)과 산업 부문 모델(Ricardo-Viner model)을 비교 분석하고, 각 모델의 결과로서 예상되는 국내정치적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 2)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생산자 우위, 보호무역주의 우위로 귀결되는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 3) 무역정책은 선거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선거제도 중 다수대표제는 지역구 내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고, 한 국가를 단위로 하는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인 이익을 비례적으로 대표한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사회 중심적 접근의 세 층위 — 선호(이익), 조직(집단행동), 제도(선거제도) — 를 차례로 묻는다.

연결 개념 스톨퍼-새뮤얼슨, 리카도-바이너, 요소 이동성, 계급 균열과 산업 균열, 집중된 이익과 분산된 비용,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함정 2)의 ‘생산자 우위’와 ‘보호무역주의 우위’는 서로 다른 두 현상이다. 생산자 대 소비자, 수입 경쟁 생산자 대 수출 생산자로 나누어 **각각** 쓴다. 트럼프 관세에 관해서는 문제지의 서술 이상을 단정하지 않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가정(요소 이동성)·선호의 단위·균열 → 정치 현상: 계급 정당·계급 연합 대 산업 로비·계급 횡단 연합·지역 집중	Stolper-Samuelson, Rogowski 1989, Hiscox 2002	약 1,200자
2)	생산자 우위: 집중된 이익과 분산된 비용 / 보호 무역 우위: 손실의 확실성·가시성, 수출 이익의 불확실성 → 상호주의로 보완	Olson 1965, Schattschneider 1935	약 900자
3)	다수대표제: 지역 집중 산업이 의원을 포획 → 보호 / 비례대표제: 전국 단위 확산 이익·정당 규율 → 개방 / 단서	Rogowski 1987, McGillivray 2004	약 900자

예시답안 — 2025 제1문

보호무역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무역이 국내의 어떤 집단에 이익과 손실을 주는지, 그 집단이 얼마나 잘 조직되는지, 그리고 정치 제도가 어떤 이익을 증폭하는지를 차례로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사회 중심적 접근에 따라 선호, 집단행동, 선거제도의 세 차원에서 무역정책 결정을 설명한다.

1) 생산요소 모델과 산업부문 모델

두 모델은 무역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로부터 이익집단의 선호를 도출하지만, 생산요소의 이동성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생산요소 모델은 스톨퍼-새뮤얼슨 정리에 기초한다. 생산요소가 산업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무역 개방은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희소한 생산요소의 실질 소득을 낮춘다. 따라서 무역 선호는 어느 산업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산요소를 소유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자본과 숙련 노동이 풍부한 선진국에서는 자본가와 숙련 노동자가 자유무역을, 비숙련 노동자가 보호무역을 지지한다.

산업부문 모델은 리카도-바이너의 특정 요소 모형에 기초한다. 단기적으로 자본 설비와 숙련이 특정 산업에 묶여 있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무역의 효과는 요소가 아니라 산업에 따라 갈린다. 수출 산업에 속한 자본가와 노동자는 함께 이익을 보고, 수입 경쟁 산업의 자본가와 노동자는 함께 손실을 본다. 따라서 선호는 산업 부문 단위로 형성된다.

이 차이는 서로 다른 국내정치적 현상을 낳는다. 생산요소 모델에서는 **계급 균열**이 나타난다.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노동 대 자본, 혹은 토지 대 자본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정당 체계도 계급을 따라 조직된다. 로고스키는 『통상과 연합』에서 무역 노출의 변화가 각국의 요소 부존에 따라 계급 간 연합과 균열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는 비숙련 노동자가 보호주의 정당이나 운동의 지지 기반이 되는 현상이 이 모델로 설명된다. 산업부문 모델에서는 **산업 균열**이 나타난다. 같은 산업의 경영자와 노조가 계급을 넘어 함께 로비하고, 수출 산업 연합과 수입 경쟁 산업 연합이 대립한다. 특정 산업이 지리적으로 집중된 경우에는 지역 정치인과 결합한 지역 단위의 보호 요구로 나타난다. 철강이나 자동차처럼 쇠퇴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보호무역 요구가 강해지는 현상이 그 예이다. 히스콕스는 생산요소의 산업 간 이동성이 높은 시기와 국가에서는 계급 균열이, 낮은 시기와 국가에서는 산업 균열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2) 집단행동문제와 생산자 우위·보호무역 우위

울슨의 집단행동 논리에 따르면 구성원이 많고 개인의 몫이 작은 집단은 무임승차 때문에 공동 이익을 위해 조직되기 어렵고, 소수이면서 이익이 큰 집단은 조직되기 쉽다.

첫째, **생산자 우위**이다. 무역정책의 이해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이다. 보호무역의 이익은 소수의 생산자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은 높은 가격의 형태로 다수 소비자에게 조금씩 분산된다. 생산자는 정책의 이익이 크고 구성원이 적으며 기존 업종 단체를 통해 조직되어 있으므로 로비와 정치 자금 제공에 적극적이다. 반면 소비자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작고 수가 많아 조직될 유인이 약하다. 그 결과 정책 결정에서 생산자의 목소리가 소비자보다 과대 대표된다. 샤프슈나이더가 분석한 1930년 미국 스무트-홀리 관세법 입법에서 수많은 생산자 집단이 각자의 관세 인상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우위**이다. 생산자 내부에서도 수입 경쟁 생산자는 수출 생산자보다 조직에 유리하다. 개방에 따른 수입 경쟁 산업의 손실은 확실하고 가시적이며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된다. 반면 개방에 따른 수출 산업의 이익은 미래에 발생하고 불확실하며 여러 산업에 분산된다.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수출 기회 수혜자는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 조직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므로, 이미 가진 일자리와 이윤을 지키려는 동기가 새로운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보다 강하다. 이 비대칭 때문에 정치 과정은 보호무역 쪽으로 기운다. 이를 교정하는 방법은 상호주의 협상이다. 상대국 시장의 개방을 자국 시장의 개방과 연계하면 수출 산업이 개방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조직되어 보호주의 세력에 맞서게 된다. 미국이 1934년 호혜통상협정으로 의회에서 행정부로 관세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도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한 사례이다.

3)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영향

선거제도는 어떤 범위의 이익이 정치인에게 중요한지를 결정한다. 다수대표제에서 의원은 소선거구의 다수 득표로 선출되므로 지역구 유권자의 이익에 민감하다. 특정 산업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산

업의 노동자와 기업은 지역구 의원을 사실상 대표로 삼아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의원들은 서로의 지역 산업 보호를 맞교환하는 투표 거래를 하기 쉬워, 개별 산업을 위한 관세와 보조금이 늘어난다. 맥길리브레이는 다수대표제에서는 특히 경합 지역에 집중된 산업이 정책적 특혜를 받는다고 분석했다.

비례대표제, 특히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제도에서는 정당이 전국 득표율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보다 전국적으로 분산된 소비자와 수출 산업의 이익에 더 민감하다. 의원은 지역보다 정당에 책임을 지고 정당 규율이 강해 개별 산업의 로비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 로고스키는 선거구가 크고 비례성이 높은 제도일수록 정책 결정자가 좁은 이익으로부터 격리되어 자유무역 정책을 유지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비교는 경향에 관한 것이다. 비례대표제에서도 전국적으로 조직된 큰 산업이나 농업 단체가 연립 정부의 협상력을 통해 보호를 얻을 수 있고, 다수대표제에서도 수출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개방 지지가 나타난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산업의 지리적 분포와 결합될 때 무역정책에 대한 영향이 분명해진다.

50점 · 1)은 가정 → 선호 → 정치 현상을 두 모델에 같은 순서로 적용한다. 2)는 두 현상을 '각각', 3)은 두 제도를 '비교'하는 형식을 지킨다.

2025 제3문

AIIB — 신자유제도주의와 신현실주의

총 20점 · 소문 2개 (10 · 10)

제3문.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의 설립을 주도했고, 2016년부터 AIIB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AIIB 설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 AIIB 설립에 불참하라고 권유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중국이 AIIB 설립을 주도한 이유를 신자유제도주의 시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 2) 미국이 AIIB 설립에 반대하고 우방국의 불참을 권유한 현상을 신현실주의 시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같은 사건을 두 이론으로 대비시키는 짧은 문항이다. 이론의 핵심 명제를 정확히 대입하는 것이 전부다.

연결 개념 거래비용, 정보, 신뢰성, 정당성, 자기 구속 / 상대적 이득, 영향력, 세력권, 동맹 결속.

합정 1)을 ‘중국의 국익 추구’로만 쓰면 현실주의의 답안이 된다. 신자유제도주의는 **왜 양자 원조가 아니라 다자 제도를 택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	분량
1)	제도의 기능(거래비용·정보·신뢰) → 다자 제도로 자원 동원·정당성 확보·자기 구속에 의한 안심 / 기존 기구 지배구조 불만	Keohane 1984	약 600자
2)	상대적 이득 →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기존 기구의 위상 약화 우려 → 동맹국 불참 권유는 균형·결속 유지	Waltz, Grieco	약 600자

예시답안 — 2025 제3문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같은 사건이 이론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 신자유제도주의로 본 중국의 AIIB 설립 주도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 하에서도 국제제도가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약속의 신뢰성을 높여 국가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이 시각에서 중국이 양자 원조가 아니라 다자 개발은행이라는 제도를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다자 제도는 여러 회원국의 자본을 결합하고 사업 심사와 위험 분담의 규칙을 마련해 협력의 거래비용을 줄인다. 둘째, 중국이 단독으로 자금을 제공하면 주변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지만, 공통의 규칙과 의사결정 절차를 가진 다자 기구를 통하면 중국은 스스로를 제도에 구속해 주변국을 안심시키고 협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기존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의 발언권 확대가 지연되자, 중국은 기존 체제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보완적인 새 제도를 만들어 자국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 했다. 이는 제도가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협력을 안정시키는 장치라는 신자유제도주의의 논리와 부합한다.

2) 신현실주의로 본 미국의 반대와 불참 권유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하의 국가가 생존을 위해 상대적 힘의 분포에 민감하다고 본다. 그리코가 강조했듯 국가는 협력에서 모두가 이익을 얻더라도 상대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면 협력을 꺼린다. 미국의 시각에서 AIIB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라는 공동 이익보다 중국이 얻는 상대적 이득이 더 큰 제도였다. 중국은 AIIB를 통해 자본과 사업을 매개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온 기존 개발금융 질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 힘의 분포를 중국에 유리하게 바꾸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미국은 AIIB 설립에 반대하고, 우방국들이 참여해 중국 주도 제도의 정당성과 자원을 높여 주는 것을 막으려 했다. 우방국에 대한 불참 권유는 동맹 진영의 결속을 유지해 부상하는 경쟁국에 대한 균형을 이루려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신현실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제도는 강대국 간 힘의 경쟁이 벌어지는 또 하나의 무대인 셈이다.

20점 · 각 소문을 '이론의 명제 → 사례 대입' 두 단락으로 짧게 쓴다.

2026 제2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 무역과 기후의 논란

총 30점 · 소문 2개 (15 · 15)

제2문.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질서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환경보호 목표와 자유무역 원칙 간의 조율이 국제정치경제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6년 1월 1일 EU가 본격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주목받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기존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2)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무역정책과 탄소배출 절감의 차원에서 설명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기후 규제와 통상 질서의 충돌이라는 새 쟁점을 제도 비교와 논쟁 정리로 묻는다.

연결 개념 총량제한·거래, 탄소 누출, 무상할당, 내재 배출량,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일반적 예외,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기후 클럽.

합정 시행 일정은 문제지(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에 맞추고, 그 이후의 세부 운영이나 수치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제도·이론	분량
1)	대상(역내 사업장 대 수입품)·방식(총량·거래 대 가격 연동 인증서)·목적(감축 대 누출 방지)·관계(무상할당 축소와 병행)	EU ETS, CBAM	약 900자
2)	무역: 위장된 보호주의·WTO 규범 합치성·개도국 부담 / 탄소: 누출 방지·탄소 가격 확산 대 효과의 한계·우회	GATT 제1·3·20조, CBDR, Nordhaus	약 900자

예시답안 — 2026 제2문

환경규제가 통상 질서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기후 목표와 자유무역 원칙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국제정치경제의 과제가 되었다. 문제지에 따르면 EU는 2026년 1월 1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아래에서는 이를 기존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비교하고, 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다.

1)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비교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일정 기간의 배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할당하거나 경매한 뒤,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팔게 하는 총량제한·거래 제도이다. EU는 2005년부터 역내 발전소와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이를 운영해 왔다.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은 배출을 줄여 남은 배출권을 팔고, 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사므로 사회 전체의 감축 비용이 최소화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와 다음 점에서 다르다. 첫째, 대상이 다르다. 배출권거래제는 역내 사업장의 배출을 규율하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외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같은 탄소 집약 품목에 내재된 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방식이 다르다.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을 정하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수량 규제이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자가 내재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입하게 하고 그 가격을 역내 배출권 가격에 연동하는 가격 조정 장치이다.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은 차감된다. 셋째, 목적이 다르다. 배출권거래제의 일차 목적은 국내 배출 감축이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목적은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을 막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탄소 비용을 같게 맞추는 것이다.

두 제도는 보완 관계에 있다. 그동안 EU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일부 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 왔는데, 이는 국내 기업의 감축 유인을 약하게 만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경에서 누출을 막는 대신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둘러싼 논란

무역정책의 차원에서 비판론은 첫째, 이 제도가 환경을 명분으로 한 위장된 보호주의라고 본다. 수입품에만 추가 비용을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이 논란이 된다. 수입품을 차별하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려면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나 고갈 자원 보존을 위한 일반적 예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탄소 감축 능력과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 수출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기후 협상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다. 배출량 측정과 보고에 드는 행정 비용도 중소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해 옹호론은 이 제도가 국내의 기업에 같은 탄소 비용을 적용해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수입품만이 아니라 국내 생산에도 같은 가격이 부과되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탄소배출 절감의 차원에서 옹호론은 첫째, 탄소 누출을 막아 EU의 감축이 다른 지역의 배출 증가로 상쇄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본다. 둘째, EU 시장에 수출하려는 국가와 기업이 자국에서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거나 생산 공정을 저탄소로 전환할 유인을 갖게 되어, 탄소 가격이 세계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가 제안한 기후 클럽처럼 무임승차 국가에 비용을 부과해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장치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비판론은 대상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전체 배출 감축 효과가 작고, 기업이 저탄소 제품은 EU로, 고탄소 제품은 다른 시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우회하면 세계 전체의 배출은 줄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방적 조치가 무역 보복과 기후 협상의 분열을 불러 오히려 다자 협력을 해칠 수 있다.

결국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정당성은 이 제도가 기후 목표에 비례하는 수단인지,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과 국제적 탄소 가격 협의 같은 다자적 보완책과 결합되는지에 달려 있다.

30점 · 1)은 비교 기준을 먼저 세우고, 2)는 무역정책 차원과 탄소배출 절감 차원을 찬반 논거로 나누어 쓴다. 시행 시점은 문제지에 따른다.

제6장

글로벌 거버넌스 · 인간안보 · 대외원조

연결 기출: 2017 제3문 · 2019 제3문 · 2023 제2문 | 함께 볼 장: 1장(세 패러다임), 7장(자유주의 국제질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6-1 핵심 개념	67
6-2 기출 풀이	69
2017 제3문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과 변화 — 힘 · 이익 · 정체성	69
2019 제3문 대외원조 — 모겐소 비판과 영국 국제개발부의 주장	71
2023 제2문 인간안보 — 분쟁과 저개발의 악순환, 난민 문제와 안보화	73

6-1 핵심 개념

탈냉전 이후 ‘안보’와 ‘통치’의 개념은 국가 밖으로 넓어졌다. 이 장의 문항은 새 개념(글로벌 거버넌스, 인간안보, 안보화)을 정확히 정의하고 **세 패러다임 가운데 어느 시각으로** 설명하는지를 분명히 할 때 점수가 난다.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정부 없이 국가·국제기구·비정부기구·기업·전문가 네트워크 등이 공식·비공식 규칙과 메커니즘을 통해 초국가적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로즈노(James Rosenau)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를 강조했고, 1995년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의 보고서 『우리의 지구 이웃(Our Global Neighbourhood)』과 같은 해 창간된 학술지 『글로벌 거버넌스』가 논의를 확산시켰다. 문제지의 정의 — “세계의 다양한 수준에 존재하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행동, 규칙, 메커니즘의 집합” — 를 그대로 출발점으로 삼으면 된다.

대립 구도

힘(현실주의: 강대국의 이익 반영) ↔ 이익(자유주의: 상호의존의 기능적 필요) ↔ 정체성(구성주의: 규범과 공유된 관념)

쓰이는 기출 2017 제3문

답안 속 문장

“글로벌 거버넌스가 누구의 규칙인가를 물으면 현실주의가, 왜 규칙이 필요한가를 물으면 자유주의가, 규칙이 어떻게 당연한 것이 되었는가를 물으면 구성주의가 답한다.”

모겐소의 대외원조론

모겐소는 「대외원조의 정치이론(A Political Theory of Foreign Aid)」(1962)에서 대외원조를 인도적 원조, 생존 원조, 군사 원조, 뇌물(bribery) 원조, 위신 원조, 경제개발 원조의 여섯 유형으로 나누고, 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모든 원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고 보았다. 원조는 군사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위한 비군사적 외교 수단이며, 원조의 성공은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공여국이 의도한 정치적 효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립 구도

원조 = 국익을 위한 외교 수단(현실주의) ↔ 원조 = 상호이익·빈곤 감소·국제 협력(자유주의)

쓰이는 기출 2019 제3문

답안 속 문장

“모겐소에게 원조는 무기를 쓰지 않는 외교였다. 자유주의는 그 원조가 낳는 번영과 협력이 결국 무기의 필요 자체를 줄인다고 본다.”

인간안보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994)가 정식화했다. 안보의 대상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기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포괄한다. 보고서는 경제·식량·보건·환경·개인·공동체·정치 안보의 일곱 영역을 제시했다. 오가타 사다코와 아마르티아 센이 공동의장을 맡은 인간안보위원회 보고서 『지금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 Now)』(2003)는 **보호(protection)**와 **역량 강화**

(empowerment)를 두 축으로 제시했다. 2012년 유엔총회 결의 66/290은 인간안보에 관한 공통 이해를 채택했다.

대립 구도

국가안보(영토·주권, 군사적 위협) ↔ 인간안보(개인의 생존·생계·존엄, 비군사적 위협 포함)

쓰이는 기출 2023 제2문 1), 2019 제3문 2)

답안 속 문장

“분쟁은 개발의 성과를 파괴하고, 저개발은 분쟁의 불씨를 키운다. 인간안보는 이 두 문제를 하나의 고리로 본다.”

분쟁의 딛과 평화구축

세계은행 보고서 『Breaking the Conflict Trap』(2003)과 콜리어(Paul Collier)의 『The Bottom Billion』(2007)은 저소득·저성장·1차 산품 의존 국가가 내전에 빠지기 쉽고, 내전이 다시 빈곤을 심화시켜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분쟁의 딛**으로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보호책임(R2P)을 확인하고 평화구축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연계하는 접근(인도-개발-평화 연계)을 발전시켜 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의 목표 16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와 제도를 개발 목표에 포함시켰다.

쓰이는 기출 2023 제2문 1)

답안 속 문장

“평화 없이 개발 없고 개발 없이 평화 없다. 선순환의 출발점은 보호와 개발을 따로 하지 않고 같은 현장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다.”

안보화 — 코펜하겐 학파

부잔(Barry Buzan), 웨버(Ole Wæver), 드 와일드(Jaap de Wilde)의 『안보: 분석의 새 틀(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1998)이 정식화했다. 어떤 쟁점이 안보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위협 때문이 아니라 **안보화 행위자**가 특정 **지시 대상**(국가, 민족 정체성, 사회 등)이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선언하는 **화행(speech act)**을 하고, **청중**이 이를 수용할 때이다. 안보화되면 정상적 정치 절차를 벗어난 **비상 조치**가 정당화된다. 웨버는 쟁점을 정상 정치로 되돌리는 **탈안보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았다. 군사·정치·경제·사회·환경의 다섯 부문 가운데 이주·난민은 주로 **사회 안보**(집단 정체성)의 문제로 안보화된다.

쓰이는 기출 2023 제2문 2)

답안 속 문장

“난민이 ‘보호해야 할 사람’에서 ‘막아야 할 위협’으로 말해지는 순간, 정책의 목표는 해결에서 차단으로 바뀐다.”

6-2 기출 풀이

2017 제3문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과 변화 — 힘 · 이익 · 정체성

20점 · 소문 없음

제3문.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의 다양한 수준에 존재하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행동, 규칙, 메카니즘의 집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과 변화를 힘(power), 이익(interests), 정체성(identity) 개념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힘·이익·정체성은 각각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의 핵심 변수다. 세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과 변화를 함께 설명하게 한다.

연결 개념 패권과 제도, 상호의존과 기능적 필요, 비국가 행위자, 규범의 확산, 탈냉전과 세계화, 신흥국의 부상.

합정 ‘등장’만 쓰고 ‘변화’를 빠뜨리기 쉽다. 각 개념마다 ‘1990년대 등장의 이유’와 ‘이후의 변화’를 짝지어 쓴다.

■ 답안 개요

단락	핵심 논점	이론	분량
힘	등장: 미국 단극과 자유주의 제도의 확장 / 변화: 신흥국 부상과 G20, 경쟁적 제도	현실주의·패권안정론	약 400자
이익	등장: 세계화·상호의존의 기능적 필요 / 변화: 쟁점 확대와 비국가 행위자, 분화된 레짐	신자유제도주의	약 400자
정체성	등장: 인권·환경 규범과 세계시민 정체성 / 변화: 규범 경합과 정체성 정치의 반발	구성주의	약 400자

예시답안 — 2017 제3문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기업 등이 공식·비공식 규칙과 메커니즘을 통해 초국가적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 이후 그 등장과 변화는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힘,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이익,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정체성의 개념으로 각각 설명할 수 있다.

힘의 관점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제 규칙과 제도는 강대국의 힘의 분포를 반영한다. 냉전 종식으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 되자, 미국과 서방은 자신들이 주도해 온 시장경제와 다자 제도를 세계로 확장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확대는 이러한 단극 질서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패권안정론의 시각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패권국이 제공하는 질서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후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하면서 힘의 분포가 바뀌자 거버넌스도 변화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20개국 회의가 핵심 협의체로 부상했고, 신흥국은 기존 기구의 지분 확대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힘의 분산은 거버넌스의 대표성을 높였지만 합의를 어렵게 하고 경쟁적 제도의 병존을 낳았다.

이익의 관점 자유주의는 세계화와 상호의존의 심화가 국가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적 필요가 거버넌스를 낳았다고 본다. 금융위기, 기후변화, 감염병, 테러처럼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자, 국가들은 정보 교환과 정책 조율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제 레짐과 제도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만이 아니라 비정부기구, 기업, 전문가 네트워크가 정보와 전문성을

제공하며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했다. 쟁점이 늘어나면서 거버넌스는 분야별로 분화된 레짐의 복합체로 변화했고, 레짐 사이의 중복과 충돌을 조정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정체성의 관점 구성주의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공유된 규범이 무엇을 ‘공동의 문제’로 정의하는지를 결정한다고 본다. 냉전의 이념 대립이 끝나면서 인권, 민주주의, 환경 보호, 인간안보 같은 규범이 확산되었고, 국가들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정체화했다. 초국가적 시민사회와 규범 기획자들은 대인지뢰 금지처럼 새로운 규범을 의제로 만들어 거버넌스의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이후 서구 중심 규범에 대한 비서구 국가의 반발과 각국 내 민족주의·정체성 정치의 부상으로 규범의 보편성이 도전받으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공유된 정체성보다 경합하는 정체성 사이의 조정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 관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힘이 규칙의 틀을 정하고, 이익이 협력의 동기를 제공하며, 정체성이 무엇이 정당한 규칙인지를 규정하는 복합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점 · 세 개념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 안에서 '등장 → 변화'를 쓴다.

2019 제3문

대외원조 — 모겐소 비판과 영국 국제개발부의 주장

총 30점 · 소문 2개 (20 · 10)

제3문.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대외원조를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없는 목표를 위한 비군사적 외교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2015년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평화, 안보,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저개발국의 빈곤을 타파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30점)

- 1) 대외원조에 관한 한스 모겐소의 주장을 자유주의 시각에서 비판하십시오. (20점)
- 2) 영국 국제개발부의 주장을 참고하여 저개발국의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왜 공여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십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현실주의 원조론을 자유주의 시각에서 비판하고, ‘빈곤 해소가 왜 공여국의 국익인가’를 인간안보·상호의존의 논리로 설명하게 한다.

연결 개념 모겐소의 여섯 유형, 절대적 이득, 상호의존, 다자 원조, 민주적 평화, 원조 효과성, 취약국, 초국가적 위협.

합정 1)의 ‘비판’은 모겐소를 요약한 뒤 자유주의의 **반론 근거**를 여럿 대야 한다. 2)는 문제지에 적힌 영국 국제개발부의 주장(평화·안보·거버넌스 강화와 빈곤 타파가 국익)을 그대로 출발점으로 삼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모겐소 요약 → 비판: 협소한 국익관, 절대적 이득·상호의존, 다자 원조와 규범, 원조의 장기 효과(개발·민주화), 비국가 행위자	Morgenthau 1962, Keohane-Nye, 민주적 평화	약 1,200자
2)	취약국의 위협 전이(분쟁·테러·난민·감염병), 시장과 번영, 글로벌 공공재, 연성권력	인간안보, Nye	약 600자

예시답안 — 2019 제3문

대외원조는 공여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인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인가. 현실주의자 모겐소와 2015년 영국 국제개발부 보고서는 이 물음에 대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보인다. 아래에서는 모겐소의 원조론을 자유주의 시각에서 비판하고, 저개발국의 빈곤 해소가 공여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1) 모겐소의 원조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모겐소는 「대외원조의 정치이론」에서 원조를 인도적, 생존, 군사, 뇌물, 위신, 경제개발 원조로 나누고, 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원조는 모두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외교 수단이라고 보았다. 원조는 군사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 예컨대 수원국 정부의 우호적 태도를 얻기 위한 비군사적 수단이며, 그 성패는 수원국의 경제 발전이 아니라 공여국이 의도한 정치적 효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각에서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된다. 첫째, 국익을 지나치게 협소하고 단기적으로 정의한다. 자유주의는 국가 간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지 않으며, 원조를 통해 수원국이 성장하면 공여국도 교역

과 투자의 기회를 얻는 절대적 이익이 생긴다고 본다. 원조를 정치적 영향력의 매수로만 보면, 원조가 수원국의 성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만드는 장기적 효과를 놓친다.

둘째, 국가 간 상호의존을 경시한다. 코헤인과 나이가 강조한 복합적 상호의존의 세계에서는 빈곤, 감염병, 환경 파괴, 난민 같은 문제가 국경을 넘어 공여국에 영향을 미친다. 원조는 이러한 초국가적 문제를 관리하는 국제 협력의 일부이다.

셋째, 국제제도와 규범의 역할을 무시한다. 오늘날 원조의 상당 부분은 세계은행, 유엔 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같은 다자 제도와 규범을 통해 이루어진다.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처럼 국제사회가 함께 정한 목표,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 합의는 원조가 개별 국가의 정치적 거래를 넘어 공동의 규범에 따라 운영됨을 보여 준다. 일부 연구는 많은 공여국의 원조 규모가 인도주의적 신념과 국내 복지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 원조를 국익 계산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넷째, 원조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자유주의는 경제 발전이 중산층과 시민사회를 키워 민주화를 촉진하고, 민주적 평화론에 따르면 민주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드물므로, 개발 원조가 장기적으로 평화로운 국제질서에 기여한다고 본다. 모겐소처럼 원조를 수원국 정부의 단기적 정치 매수로 쓰면, 오히려 부패한 정권을 지탱하고 원조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2) 빈곤 해소가 공여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유

영국 국제개발부는 글로벌 평화와 안보, 거버넌스의 강화와 저개발국의 빈곤 타파가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의 측면이다. 극심한 빈곤과 취약한 국가 제도는 내전, 테러 조직의 성장, 대규모 난민과 이주를 낳고, 그 영향은 공여국에까지 미친다. 빈곤을 줄이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위협이 발생하는 근원을 줄이는 예방적 안보 정책이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 체계 지원도 공여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둘째, 번영의 측면이다. 저개발국이 성장하면 공여국 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가 생기고, 안정적인 무역 상대가 늘어난다. 셋째, 국제적 영향력의 측면이다. 빈곤 해소에 기여하는 공여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정당성을 얻고,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공공재 협상에서 지지를 얻는 연성권력을 확보한다. 따라서 빈곤 해소는 이타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여국의 장기적 안보와 번영, 영향력을 높이는 투자이다.

30점 · 1)은 모겐소 요약 한 단락 + 자유주의 비판 네 가지, 2)는 국익의 경로 세 가지로 쓴다.

2023 제2문

인간안보 — 분쟁과 저개발의 악순환, 난민 문제와 안보화

총 30점 · 소문 2개 (16 · 14)

제2문. 냉전 종식을 전후로 전통적인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다양하고 포괄적인 안보 개념과 의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안보 개념의 확대와 관련해서 인간안보 개념은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 분야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인간안보 측면에서 ‘분쟁과 저개발의 악순환’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와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예를 기술하시오. (16점)
- 2) 최근 ‘난민 문제’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인도적 의제로 부상되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난민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유를 코펜하겐 학파(Copenhagen School)의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을 통해 설명하시오. (14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1)은 인간안보의 핵심 고리(분쟁 ↔ 저개발)와 이를 끊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2)는 안보화 이론으로 난민 문제의 장기화를 설명하게 한다.

연결 개념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분쟁의 뒷, 보호책임, 평화구축위원회, 인도-개발-평화 연계, 화행, 청중, 비상 조치, 사회 안보.

합정 2)에서 ‘안보화되면 관심이 커져 해결된다’고 오해하지 않는다. 안보화는 난민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협**으로 만들어 지속적 해법을 막는다는 것이 출제 의도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인간안보 정의 → 악순환의 경로(분쟁 → 개발 파괴 → 빈곤·불평등 → 분쟁 재발) → 선순환의 예: R2P, 평화구축위원회, 인도-개발-평화 연계, SDG 16	UNDP 1994, 인간안보위원회 2003, Collier	약 950자
2)	안보화의 요소 → 난민의 사회 안보 위협화 → 비상 조치(국경 봉쇄·억제 정책·역외 처리) → 지속적 해법의 봉쇄·부담 전가 → 탈안보화의 필요	Buzan-Wæver-de Wilde 1998	약 850자

예시답안 — 2023 제2문

인간안보는 안보의 대상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겨,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함께 추구하는 개념이다. 아래에서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분쟁과 저개발의 악순환과 이를 끊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설명하고, 난민 문제의 장기화를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으로 설명한다.

1) 분쟁과 저개발의 악순환과 보호와 발전의 선순환

유엔개발계획의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는 경제, 식량, 보건,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안보를 포괄하는 인간안보 개념을 제시했다. 이 관점에서 분쟁과 저개발은 서로를 강화한다. 빈곤과 높은 실업, 집단 간 불평등, 취약한 국가 제도는 무장 집단이 사람을 모으고 자원을 장악하기 쉽게 만들어 분쟁의 위험을 높인다. 분쟁이 일어나면 사회 기반시설과 학교, 의료 체계가 파괴되고, 투자와 생산이 중단되며, 인적 자본이 유출된다. 그 결과 빈곤과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국가의 통치 능력은 더 약해져 분쟁이 재발할 위험이

높아진다. 세계은행과 콜리어가 ‘분쟁의 덫’이라 부른 이 악순환 속에서 개인은 생명과 생계를 동시에 위협받는다.

인간안보위원회의 2003년 보고서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보호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를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구현하려는 국제사회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세계정상회의는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지고,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책임을 진다는 보호책임을 확인했다. 둘째, 같은 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와 평화구축기금은 분쟁 종식 이후 재건과 제도 구축을 지원해 분쟁 재발을 막는다. 셋째,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평화 활동을 분리하지 않고 연계하는 인도-개발-평화 연계 접근은 긴급 구호 단계부터 장기 개발을 함께 계획한다. 넷째,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와 효과적인 제도를 목표 16으로 포함시켜 평화와 개발을 하나의 의제로 묶었다.

2) 안보화 이론으로 본 난민 문제의 장기화

코펜하겐 학파에 따르면 어떤 쟁점이 안보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위협 때문이 아니라 안보화 행위자가 특정 지시 대상이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선언하고, 청중이 이를 수용하는 화행의 결과이다. 안보화가 성공하면 정상적인 정치 절차를 벗어난 비상 조치가 정당화된다.

난민 문제에 이를 적용하면, 일부 국가의 정치 지도자와 정당, 언론은 난민을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 일자리와 복지, 치안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해 왔다. 이 경우 지시 대상은 국민의 집단 정체성, 즉 사회 안보이고, 난민은 보호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막아야 할 위협이 된다. 테러나 범죄와 난민을 연결하는 담론이 청중에게 수용되면, 국경 봉쇄와 장벽 설치, 해상 차단, 구금, 제3국으로의 역외 처리 같은 비상 조치가 정당화된다.

이렇게 안보화된 난민 문제는 장기화된다. 첫째, 정책의 목표가 난민의 보호와 문제 해결에서 유입 차단으로 바뀌므로, 귀환, 현지 통합, 제3국 재정착이라는 지속적 해법이 추진되지 않는다. 둘째, 각국이 난민을 자국의 위협으로 보고 부담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려 하므로 국제적 책임 분담이 어려워지고, 난민은 주로 분쟁 지역 인접국의 수용 시설에 수년 이상 머물게 된다. 셋째, 안보화된 쟁점은 공포와 정체성의 정치로 다루어져 합리적 토론과 타협이 어렵고, 정치인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유인이 생긴다. 넷째, 안보화는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인 분쟁과 박해의 해결보다 국경 관리에 자원을 집중시킨다.

웨버가 강조했듯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 난민 문제를 다시 정상적인 정치와 인도적 의제로 되돌리는 탈안보화가 필요하다. 난민을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보호와 역량 강화의 대상으로 보고, 국제적 책임 분담과 근본 원인 해결에 나서는 것이 장기화를 막는 길이다.

30점 · 1)는 악순환의 경로를 단계별로, 선순환의 예는 제도 이름과 함께 쓴다. 2)는 안보화의 네 요소를 난민 문제에 하나씩 대응시킨다.

제7장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그 위기

연결 기출: 2024 제1문 · 2026 제1문 | 함께 볼 장: 1장(현실주의와 이상주의), 2장(패권안정론), 5장(국제정치경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7-1 핵심 개념 76

7-2 기출 풀이 78

 2024 제1문 아이젠베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그 도전 78

 2026 제1문 카의 『20년의 위기』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80

7-1 핵심 개념

2024년과 2026년 연속으로 제1문(40점)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를 다루었다. 2024년은 아이켄베리의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2026년은 카·역외균형론자·지정학자의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같은 위기를 묻는다. 두 문항을 짝지어 공부하면 한 주제를 양쪽에서 쓰는 연습이 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 아이켄베리

아이켄베리(G. John Ikenberry)는 『승리 이후(After Victory)』(2001), 『자유주의 리바이어던(Liberal Leviathan)』(2011),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한 세계(A World Safe for Democracy)』(2020)에서 1945년 이후, 그리고 탈냉전기에 확장된 미국 주도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규정했다. 핵심 원칙은 ① 개방적 시장과 무역, ② 다자주의 제도와 규칙에 기반한 운영, ③ 동맹과 협력 안보, ④ 민주주의·인권과 법의 지배의 가치 공동체, ⑤ 진보적 변화에 대한 믿음이다. 미국은 **전략적 자제**와 제도에의 자기 구속을 약속하고, 다른 국가들은 그 대가로 미국의 지도력을 수용하는 **헌정적 거래**가 질서를 정당화했다.

대립 구도

자유주의 패권(미국 주도)의 위기 ↔ 자유주의 국제주의(개방·규칙 기반 협력) 자체의 위기

쓰이는 기출 2024 제1문, 2026 제1문 2)

답안 속 문장

“아이켄베리에게 오늘의 위기는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위기라기보다 그것을 떠받쳐 온 미국 패권의 권위와 정당성의 위기이다.”

내장된 자유주의 — 러기

러기(John Ruggie)는 1982년 논문에서 브레튼우즈 질서를 국제적 개방과 국내의 사회적 보호(완전고용·복지)를 결합한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의 타협으로 설명했다. 개방은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줄 때 국내적 지지를 얻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이 보상 장치를 약화시키자 개방에 대한 국내적 반발이 커졌다는 설명이 국내적 도전론의 핵심이다.

쓰이는 기출 2024 제1문 2), 2016 제1문(대비)

답안 속 문장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국경 밖으로는 개방을, 국경 안으로는 보호를 약속했다. 국내적 위기는 이 두 번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

카의 『20년의 위기』와 이익의 조화

카(E. H. Carr)는 『20년의 위기, 1919-1939(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1939)에서 전간기 국제정치학을 지배한 **유토피아니즘**(이상주의)을 비판했다. 이상주의의 핵심 전제는 **이익의 조화**이다. 각자가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면 공동의 이익이 실현된다는 자유방임 경제학(애덤 스미스 이래)의 원리를 국제정치에 옮겨, 평화는 모든 국가의 공통 이익이므로 여론과 이성, 국제연맹과 집단안보로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카는 이익의 조화가 **현상에 만족하는 국가(가진 자)**의 이익을 보편적 이익으로 포장한 이데올로기이며, 19세기 영국 패권과 팽창하는 경제라는 조건에서만 성립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순수한 현실주의도 메마르다고 보고 유토피아와 현실의 결합을 주장했다.

대립 구도

이익의 조화(이상주의) ↔ 이익의 충돌, 가진 국가와 못 가진 국가(카의 현실주의)

쓰이는 기출 2026 제1문 1)

답안 속 문장

“카가 보기에 ‘평화는 모두의 이익’이라는 말은 현상을 바꿀 이유가 없는 국가에게만 참이었다. 현상에 불만인 국가에게 평화는 불리한 질서의 고착이었다.”

역외균형 — 미어샤이머·월트, 레인

레인(Christopher Layne)이 1990년대 후반부터 체계화했고, 미어샤이머와 월트(Stephen Walt)가 「역외균형론(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2016)에서 대중화했다. 미국의 핵심 이익은 유럽, 동북아시아, 페르시아만 세 지역에서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막는 것이다. 평소에는 지역 국가들이 스스로 균형을 이루게 맡기고(책임 전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만 미국이 ‘바다 건너에서’ 개입한다. 민주주의 확산과 국가 건설 같은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버리고, 해외 주둔과 개입을 줄이며,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대편에는 해외 주둔과 동맹을 유지하는 **깊숙한 개입(deep engagement)**론(브룩스·아이켄베리·윌포스)이 있다.

대립 구도

역외균형(절제·책임 전가) ↔ 자유주의 패권·깊숙한 개입(동맹·주둔·제도 유지)

쓰이는 기출 2026 제1문 2)

답안 속 문장

“역외균형은 고립주의가 아니다. 개입의 문턱을 ‘지역 패권국의 출현’으로 높이고, 그 이하의 문제는 지역 국가에 맡기는 선택적 개입 전략이다.”

고전 지정학 — 머한, 매킨더, 스파이크먼

머한(Alfred T. Mahan)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 1660-1783(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1890)에서 해군력과 해상 교통로 통제가 강대국의 조건이라고 보았다. 매킨더(Halford Mackinder)는 「역사의 지리적 회전축(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1904)에서 유라시아 내륙의 **심장지대(Heartland)**를 장악한 육상 세력이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고, 『민주적 이상과 현실』(1919)에서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대를 지배하고, 심장지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도를 지배하며, 세계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정식화했다. 스파이크먼(Nicholas Spykman)은 『세계정치 속의 미국 전략』(1942)과 『평화의 지리학』(1944)에서 유라시아 주변부의 **주변지대(Rimland)**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은 주변지대에 단일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쓰이는 기출 2026 제1문 3)

답안 속 문장

“지정학의 귀환은 지리가 운명이라는 결정론의 부활이 아니라, 힘의 경쟁이 다시 특정 공간 — 동유럽, 해상 교통로, 유라시아 주변부 — 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7-2 기출 풀이

2024 제1문

아이켄베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그 도전

총 40점 · 소문 3개 (12 · 14 · 14)

제1문. 아이켄베리(J. Ikenberry)는 탈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로 규정하고, 21세기 들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여러 차원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아이켄베리가 주장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적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2점)
- 2)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국내적 도전 요인과 위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14점)
- 3)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도전 요인과 위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14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아이켄베리 이론의 핵심 원칙을 정리한 뒤, 위기를 국내적·국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게 한다.

연결 개념 개방, 다자주의, 협력 안보, 민주적 연대, 헌정적 거래, 내장된 자유주의, 포퓰리즘, 수정주의 강대국, 권위주의 대안.

합정 2)와 3)을 섞지 않는다. 2)는 **자유주의 국가들 내부**(특히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요인, 3)은 **국가 간** 힘의 분포와 대안 질서의 문제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다섯 원칙 + 헌정적 거래(전략적 자제·자기 구속)	Ikenberry 2001·2011	약 700자
2)	불평등·탈산업화 → 내장된 자유주의의 약화 → 포퓰리즘·민족주의, 양극화, 민주주의 후퇴 → 지도국의 의지와 정당성 상실	Ruggie 1982	약 850자
3)	힘의 분포 변화와 수정주의(중국·러시아), 권위주의 대안 제도, 질서의 과잉 확장과 응집력 약화, 초국가적 위협 대응 실패	Ikenberry, Mearsheimer 2019(대비)	약 850자

예시답안 — 2024 제1문

아이켄베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에서 형성되고 탈냉전기에 세계로 확장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규정했다. 그는 이 질서가 21세기 들어 국내와 국제의 양 차원에서 도전에 직면했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그 핵심 원칙과 두 차원의 도전 요인을 설명한다.

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원칙

첫째, **개방성**이다.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방적 시장경제가 질서의 경제적 기반이다. 둘째, **규칙 기반의 다자주의**이다. 국가 간 관계는 힘의 일방적 행사가 아니라 국제연합,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같은 다자 제도와 합의된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셋째, **협력 안보**이다.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회원국의 안보를 함께 보장하고, 강대국 간 경쟁을 제도 안에서 관리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의 공동체**이다.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질서의 핵심을 이루며,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질서의 목적이기도 하다. 다섯째, **진보적 변화**에 대한 믿음이다. 상호의존과 제도, 민주주의의 확산이 점진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낳한다고 본다.

아이켄베리는 이 원칙들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헌정적 거래로 뒷받침되었다고 본다. 미국은 압도적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제도로 구속하고 전략적으로 자제하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국가들은 그 대가로 미국의 지도력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했다. 이 때문에 질서는 단순한 패권이 아니라 합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리바이어던’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2) 국내적 도전 요인과 위기

국내적 도전은 질서를 이끌어 온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 내부에서 나온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과 탈산업화이다. 세계화의 이익은 금융과 고숙련 부문에 집중된 반면, 제조업 노동자와 쇠퇴 지역은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다. 러기가 말한 내장된 자유주의, 즉 개방의 피해를 국가가 사회 정책으로 보상하던 타협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약해지면서 개방에 대한 국내적 지지가 무너졌다. 둘째, 그 반발이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로 나타났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는 다자 제도와 자유무역을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했다. 셋째,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제도의 약화이다. 극심한 양극화는 대외 공약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협정 탈퇴와 재가입이 반복되면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 넷째, 이민과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자유주의 가치 자체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흔들렸다.

이러한 국내적 도전의 결과, 질서를 지탱할 지도국의 의지와 정당성이 약해졌다. 아이켄베리는 이를 자유주의 국제주의 자체의 실패라기보다 그 사회적 기반을 돌보지 못한 데서 온 위기로 보며, 국내의 사회적 보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질서 회복의 전제라고 본다.

3) 국제적 도전 요인과 위기

국제적 도전은 국가 간 힘의 분포와 질서의 구조에서 나온다. 첫째, 힘의 분포 변화와 수정주의 강대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 안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같은 대안적 제도를 만들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 금지라는 핵심 규범에 도전했다. 둘째, 권위주의 체제가 경제 성장과 정치적 통제를 결합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의 결합이 보편적 발전 경로라는 자유주의의 전제가 흔들렸다. 셋째, 질서의 과잉 확장이다. 탈냉전기에 질서가 가치와 이해를 달리하는 국가들까지 포괄하며 세계로 확대되자, 회원국 간 공유된 목적이 약해지고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정체와 분쟁 해결 기능의 마비는 그 예이다. 넷째, 기후변화와 감염병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질서가 효과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제도의 정당성이 약해졌다.

다만 아이켄베리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도 개방적 세계경제에서 이익을 얻었으므로 질서를 전복하기보다 그 안에서 지위를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크고, 자유주의 국가들이 결속하면 질서는 형태를 바꾸어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미어샤이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었다고 비판한다. 이 대립은 위기의 본질이 미국 패권의 쇠퇴인지, 자유주의 원칙 자체의 한계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40점 · 1)은 원칙을 열거하되 '헌정적 거래'로 묶어 주고, 2)·3)은 도전 요인 → 위기의 양상 순서로 쓴다.

2026 제1문

카의 『20년의 위기』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총 40점 · 소문 3개 (10 · 15 · 15)

제1문. 역사학자 카(E. H. Carr)가 ‘20년의 위기’라고 명명한 전간기의 특징을 최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비교·분석하는 논의가 있다. 양차 대전 사이 전간기의 특징은 패권의 이행, 자유방임경제의 붕괴, 그리고 파시즘의 부상으로 볼 수 있다. 카의 주장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카는 전간기를 ‘이익의 조화에서 이익의 충돌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말했다. 여기서 ‘이익의 조화’란 무엇인지 이상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이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10점)
-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는 미국 개입주의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이때,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에 대해 논하시오. (15점)
- 3)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최근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지정학적 분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인 이론가의 주장을 활용하여 지정학적 분석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전간기와 오늘을 겹쳐 읽게 하는 문항이다. 1)은 카의 고전적 비판, 2)는 현실주의의 대전략 처방, 3)은 지정학 이론의 핵심을 묻는다.

연결 개념 이익의 조화, 자유방임, 가진 국가와 못 가진 국가, 유토피아와 현실, 역외균형, 책임 전가, 심장지대, 주변지대, 해양력.

합정 2)는 역외균형을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논하시오’에 맞게 장점과 한계까지 쓴다. 3)은 ‘구체적인 이론가’를 요구하므로 학자 이름과 핵심 명제를 정확히 짚지어 쓴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문헌	분량
1)	이익의 조화(자유방임 → 국제정치, 여론·연맹·집단안보) → 카의 비판: 가진 국가의 이데올로기, 조건부 조화, 힘의 무시	Carr 1939	약 650자
2)	개입주의 실패 진단 → 역외균형의 목표·방법 → 장점(비용·반발 감소, 무임승차 억제) / 한계(신뢰성·확산·아시아의 예외)	Layne, Mearsheimer-Walt 2016	약 950자
3)	지정학의 정의 → 머헨·매킨더·스파이크먼 → 오늘날의 적용(동유럽, 해양, 유라시아 주변부)	Mahan 1890, Mackinder 1904·1919, Spykman 1942·1944	약 950자

예시답안 — 2026 제1문

카가 ‘20년의 위기’라 부른 전간기의 패권 이행, 자유방임경제의 붕괴, 파시즘의 부상은 오늘날 미국 패권의 약화, 세계화에 대한 반발, 권위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상과 자주 비교된다.

1) 이익의 조화와 그 현실주의적 비판

이익의 조화는 각 개인이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는 자유방임 경제학의 원리를 국제정치에 옮긴 이상주의의 핵심 전제이다. 이상주의자들은 평화가 모든 국가의 공통 이익이므로 이성과 계몽된 여론이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보고, 국제연맹과 집단안보, 국제법과 군축으로 이 조화를 제도화하려 했다.

카는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했다. 첫째, 이익의 조화는 현상에 만족한 국가, 곧 ‘가진 국가’의 이익을 보편적 이익으로 포장한 이데올로기이다. 평화와 현상유지가 모두의 이익이라는 주장은 기존 질서에서 혜택을 받는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참이지만, 그 질서에 불만인 ‘못 가진 국가’에게는 불리한 현실의 고착을 의미했다. 둘째, 19세기에 조화처럼 보였던 것은 영국의 패권과 끊임없이 팽창하는 세계 경제라는 특수한 조건의 산물이었다. 팽창이 멈추고 패권이 약해진 전간기에는 이익의 충돌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이상주의는 국제정치에서 힘의 역할을 무시해, 도덕과 여론만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다. 다만 카는 순수한 현실주의도 변화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고, 힘과 도덕을 함께 고려한 평화적 변화를 강조했다.

2) 역외균형전략

역외균형론자들은 탈냉전기 미국이 추구한 자유주의 패권 전략, 곧 해외 군사 주둔과 개입, 민주주의 확산과 국가 건설이 막대한 비용과 반발을 낳고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레인이 체계화하고 미어샤이머와 윌트가 2016년에 대중화한 역외균형전략은 그 대안이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핵심 이익을 서반구의 패권 유지와, 유럽·동북아시아·페르시아만에서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막는 것으로 좁힌다. 둘째, 평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스스로 잠재적 패권국에 균형하도록 맡기고, 미국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바탕으로 역외에 머문다. 셋째, 지역 국가들이 균형에 실패해 패권국이 등장할 위험이 있을 때에만 미국이 개입해 균형을 회복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철수한다. 넷째, 민주주의 확산과 국가 건설 같은 사회 개조형 개입을 피한다.

이 전략의 장점은 첫째, 개입과 주둔의 비용을 줄이고, 둘째, 미국의 존재 자체가 낳는 반미 감정과 테러의 동기를 줄이며, 셋째,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스스로 방위 부담을 지게 한다는 데 있다. 한계도 있다. 첫째, 미국이 물러나면 동맹국은 방기를 우려해 독자 핵무장이나 상대 진영으로의 편승을 택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균형이 무너진 뒤 다시 개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억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클 수 있다. 셋째,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이 스스로 균형하기 어려울 만큼 강하므로, 미어샤이머 자신도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직접 균형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역외균형은 개입의 범위를 줄이는 절제의 원칙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전략이다.

3) 지정학적 분석의 핵심

지정학적 분석은 대륙과 해양의 배치, 영토의 위치, 교통로 같은 지리적 조건이 국가의 전략과 강대국 경쟁을 규정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머헨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서 해군력과 해상 교통로의 통제가 강대국 지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매킨더는 1904년 논문 「역사의 지리적 회전축」에서 철도 시대에 유라시아 내륙의 심장지대를 장악한 육상 세력이 해양 세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후 1919년 저서에서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대를, 심장지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도를, 세계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정식화했다. 스파이크먼은 심장지대보다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 곧 서유럽과 중동,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연안을 잇는 주변지대가 인구와 산업, 해양 접근성을 가진 핵심 지역이라고 보고, 미국은 주변지대가 단일 세력에 통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과 완충지대를 둘러싼 매킨더식 경쟁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 진출은 머헨식 해양력 경쟁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협력망을 강화하는 것은 주변지대에서 단일 세력의 지배를 막으려는 스파이크먼식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정학적 분석의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약화될수록 국제정치가 공간과 힘의 경쟁으로 회귀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있다. 다만 지리 결정론에 빠지면 기술과 제도, 국가의 선택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40점 · 1)은 '설명 → 비판'의 두 단락, 2)는 '진단 → 내용 → 평가', 3)은 '정의 → 이론가 셋 → 오늘의 적용'으로 쓴다.

제8장

외교사 I — 유럽협조체제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연결 기출: 2016 제2문 · 2020 제3문 · 2021 제3문 · 2022 제3문 · 2023 제3문 · 2024 제3문 | 함께 볼 장: 2장(세력균형·동맹), 9장(냉전 외교사)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8-1 핵심 개념	83
8-2 기출 풀이	86
2022 제3문 유럽협조체제와 100년의 평화 — 세 분석 수준	86
2024 제3문 유럽협조체제 이후의 세력균형과 강대국 협조의 계승	88
2016 제2문 러일전쟁 — 세력균형, 러일 화해, 동아시아	90
2020 제3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 한국 무장독립운동	92
2021 제3문 20세기 전반 미일관계 — 문호개방에서 삼국동맹까지	94
2023 제3문 뮌헨협정 이후와 중국의 대만 정책	96

8-1 핵심 개념

외교사 문항은 매년 한 문항꼴로 나온다. 채점의 핵심은 **연대와 조약 이름의 정확성**, 그리고 사건을 **이론의 언어** (세력균형, 동맹, 분석 수준)로 설명하는 능력이다. 아래 연표의 연도는 모두 확인된 것만 실었다. 답안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날짜는 '1930년대 후반'처럼 시기로 쓴다.

■ 연표 1 유럽협조체제와 세력균형의 변동(1814~1914)

연도	사건
1814~1815	빈 회의. 1815년 신성동맹(러·오·프로이센), 사국동맹(영·러·오·프로이센)
1818	엑스라샤펠 회의 — 프랑스가 협조체제에 합류(오국 체제)
1820~1822	트로파우·라이바흐·베로나 회의 — 혁명 개입 문제로 영국 이탈 조짐
1830~1839	벨기에 독립 문제 런던 회의, 1839년 런던 조약으로 벨기에 영세중립
1853~1856	크림 전쟁, 파리 조약 — 러·오 균열, 협조체제의 약화
1859~1871	이탈리아 통일 전쟁,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66),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71), 1871년 독일 제국 선포
1873~1890	비스마르크 체제: 삼제동맹(1873, 1881), 독오동맹(1879), 삼국동맹(1882), 재보장조약(1887), 베를린 회의(1878)
1890	비스마르크 퇴진, 재보장조약 갱신 거부
1894	러불동맹(군사협약 비준)
1902·1904·1907	영일동맹·영불협상·영러협상 → 삼국협상
1905·1911	모로코 위기
1912~1913	발칸 전쟁
1914	사라예보 사건, 7월 위기, 제1차 세계대전

■ 연표 2 동아시아와 전간기(1895~1941)

연도	사건
1895	시모노세키 조약, 러·독·불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랴오둥 반도 반환
1898	러시아의 뤄순·다렌 조차
1899·1900	미국 헤이 국무장관의 문호개방 통첩
1900	의화단 사건, 러시아의 만주 점령
1902	영일동맹
1904~1905	러일전쟁,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포츠머스 조약(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중재)
1907·1910·1912·1916	러일협약(만주의 세력권 분할에서 동맹으로)
1908·1917	루트-다카히라 협정·랜싱-이시이 협정
1918	3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연합국의 러시아 내전 간섭과 시베리아 출병
1921~1922	워싱턴 회의: 4개국 조약(영일동맹 종료), 5개국 해군 조약, 9개국 조약(문호개방 확인)
1931·1932·1933	만주사변·스팀슨 독트린·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통고
1937	7월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중일전쟁 확대
1938	3월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 9월 뮌헨 협정, 11월 고노에 내각의 '동아 신질서' 성명

연도	사건
1939	3월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영국의 폴란드 보장 / 7월 미국의 미일통상항해 조약 폐기 통고 / 8월 독소 불가침조약 / 9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0	9월 일본의 북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진주, 독일·이탈리아·일본 삼국동맹
1941	4월 일소중립조약 / 6월 독일의 소련 침공 / 7월 남부 인도차이나 진주, 미국의 일본 자산 동결 / 8월 대일 석유 금수 / 12월 진주만 공격

유럽협조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 강대국들이 정기적 회의와 협의를 통해 유럽의 현상과 세력균형을 공동으로 관리한 체제이다. 빈 회의의 영토 조정과 **정통성 원칙**, 사국동맹(1815)과 회의 체제가 그 틀이었고, 1818년 엑스라샤펠 회의에서 패전국 프랑스를 받아들여 **오대 강국 체제**가 되었다. 강대국들은 일방적 행동을 자제하고 영토 변경을 공동 승인으로 처리했으며, 완충국 설치와 중립화(스위스, 벨기에), 보상 원칙을 활용했다. 혁명에 대한 개입 문제로 영국이 이탈하면서 회의 체제는 1820년대에 약해졌지만, 위기 때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의 관행은 19세기 내내 남았다.

쓰이는 기출 2022 제3문 1), 2024 제3문

답안 속 문장

“유럽협조체제의 혁신은 승전국이 패전국 프랑스를 처벌로 배제하지 않고 관리의 주체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이다. 배제된 강대국은 질서의 수정주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100년의 평화 — 폴라니

폴라니(Karl Polanyi)는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1944)에서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 강대국 사이에 전면전이 없었던 시기를 **100년의 평화**라 불렀다. 그는 19세기 문명이 ① 세력균형 체제, ② 국제 금본위제, ③ 자기조정적 시장, ④ 자유주의 국가라는 네 제도 위에서 있었다고 보았고, 국제 금융 세력(haute finance)이 평화에 이해를 가진 세력으로서 전면전을 억제했다고 보았다. 크림 전쟁과 독일·이탈리아 통일 전쟁 같은 국지전은 있었으나 일반 전쟁은 없었다는 의미이다.

쓰이는 기출 2022 제3문, 2016 제1문(금본위)

답안 속 문장

“100년의 평화는 전쟁이 없던 시기가 아니라 국지전이 일반 전쟁으로 번지지 않던 시기였다.”

비스마르크 동맹 체제

1871년 통일 이후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만족한(포화된) 국가**로 규정하고, 프랑스의 복수를 막기 위해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동맹망을 만들었다. 삼제동맹(독·오·러), 독오동맹, 삼국동맹(독·오·이),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으로 독일은 늘 다수 편에 서려 했고, 1878년 베를린 회의에서는 ‘정직한 중재자’를 자임했다. 1890년 비스마르크 퇴진과 재보장조약 갱신 거부 이후 러시아가 프랑스와 손잡으면서 유럽은 두 진영으로 경직되었다.

쓰이는 기출 2022 제3문 2), 2024 제3문 1), 2020 제1문

답안 속 문장

“비스마르크 체제의 안정은 구조만이 아니라 한 정치가의 절제에 기대고 있었다. 그가 물러나자 같은 독일의 국력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유화정책과 뮌헨의 교훈

1938년 9월 29~30일 뮌헨 회담에서 영국(체임벌린)·프랑스(달라디에)·독일·이탈리아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테텐 지방을 독일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당사국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은 회담에서 배제되었다. 1939년 3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 보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이후 ‘뮌헨’은 수정주의 국가에 대한 양보가 침략을 부른다는 **역사적 유추**로 쓰였다. 쿵(Yuen Foong Khong)은 『전쟁 속의 유추(Analogies at War)』(1992)에서 이러한 유추가 정책 결정자의 판단을 어떻게 이끌고 왜곡하는지를 분석했다.

쓰이는 기출 2023 제3문

답안 속 문장

“뮌헨의 교훈은 ‘양보하지 말라’가 아니라 ‘상대의 목표가 제한적인지 무제한적인지를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다. 그 판단을 건너뛴 유추는 또 다른 오판을 낳는다.”

8-2 기출 풀이

2022 제3문

유럽협조체제와 100년의 평화 — 세 분석 수준

총 30점 · 소문 2개 (10 · 20)

제3문. 나폴레옹 전쟁 이후 19세기 초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20세기 초반까지의 유럽 상황을 ‘100년의 평화’ 시기라고 일컫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협조체제의 형성 의의와 당시 유럽 강대국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1871년 독일 통일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100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을 국제체제, 국가, 개인의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설명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1)은 협조체제의 의의와 평화 유지 수단, 2)는 1871년 이후에도 평화가 유지된 원인을 월츠의 세 이미지(체제·국가·개인)로 나누어 설명하게 한다.

연결 개념 정통성, 회의 외교, 보상·완충·중립화, 비스마르크 체제, 영국의 해양 패권과 금본위, 만족 국가, 정치가의 절제.

합정 2)는 ‘1871년 이후’의 평화를 묻는다. 빈 체제 설명을 반복하지 말고 비스마르크 시기와 그 이후를 중심으로 쓴다. 세 수준을 명시적으로 나눈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사실	분량
1)	의의: 강대국 공동 관리·패전국 편입·제도화된 협의 / 방안: 회의, 정통성, 세력균형·보상, 완충·중립화, 혁명 개입	빈 회의, 1818	약 600자
2)	체제: 비스마르크 동맹망, 영국의 해양 패권과 균형자, 식민지 팽창의 배출구, 금본위·상호의존 / 국가: 독일의 만족 국가 정책, 보수 군주국의 공통 이해, 금융 세력 / 개인: 비스마르크의 절제 → 1890년 이후의 대비	Waltz 세 이미지, Polanyi	약 1,200자

예시답안 — 2022 제3문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제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은 국지전은 겪었지만 강대국 전체가 휘말리는 일반 전쟁은 피했다. 폴라니가 ‘100년의 평화’라 부른 이 시기의 출발점인 유럽협조체제의 의의와 평화 유지 방안을 설명하고, 1871년 독일 통일이라는 충격에도 평화가 유지된 원인을 세 분석 수준에서 설명한다.

1) 유럽협조체제의 형성 의의와 평화 유지 방안

빈 회의 이후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1815년 사국동맹을 맺고 정기 회의를 통해 전후 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며, 1818년 엑스라샤펠 회의에서 프랑스를 받아들였다. 그 의의는 첫째, 강대국들이 유럽의 평화를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이를 정기 협의라는 제도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둘째, 패전국 프랑스를 처벌하여 배제하지 않고 질서의 관리자로 편입해 수정주

의 세력의 등장을 막았다. 셋째, 혁명과 전쟁의 경험을 공유한 강대국들이 현상 유지와 정통성이라는 공통의 원칙을 세웠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강대국들은 다음 방안을 활용했다. 첫째, 위기가 생기면 회의를 열어 협의하고, 영토 변경은 강대국의 공동 승인을 거치게 했다. 둘째, 어느 한 나라도 지배적 지위를 갖지 않도록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쪽에 보상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셋째, 강대국 사이에 완충국을 두거나 스위스와 벨기에처럼 중립화해 충돌 지점을 줄였다. 넷째, 정통 군주의 지위를 존중하는 정통성 원칙을 내세우고, 신성동맹 국가들은 질서를 위협하는 혁명에 공동으로 개입했다.

2) 1871년 이후 100년의 평화가 유지된 원인

국제체제 수준 첫째, 비스마르크가 만든 동맹망이 세력균형을 관리했다. 독일은 삼제동맹, 독오동맹, 삼국동맹,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으로 주요 강대국과 연결되어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동맹국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1878년 베를린 회의처럼 위기를 회의로 처리하는 협조의 관행도 남아 있었다. 둘째, 영국은 해양 패권을 바탕으로 대륙의 동맹에 얽매이지 않고 세력균형을 지켜보는 위치에 있었다. 셋째, 아프리카와 아시아로의 식민지 팽창은 강대국 간 경쟁의 배출구 역할을 했고, 1884~85년 베를린 회의처럼 분할 규칙도 협의로 정해졌다. 넷째, 금본위제와 자유무역, 런던 중심의 국제금융이 유럽 경제를 긴밀하게 묶어 전쟁의 비용을 높였다.

국가 수준 첫째, 통일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를 영토적으로 만족한 국가로 규정하고 추가 팽창을 자제했다. 둘째,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보수적 군주정은 혁명과 사회주의를 막는다는 공통의 국내적 이해를 가졌고, 이것이 삼제동맹의 기반이 되었다. 셋째, 폴라니가 강조했듯 국제적 금융 세력은 일반 전쟁이 자신들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평화를 지지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넷째, 영국의 자유주의 국가는 교역과 금융의 안정에 이해를 가져 대륙 전쟁에 끌려들기를 원하지 않았다.

개인 수준 비스마르크라는 정치가의 역할이 컸다. 그는 독일이 두 전선에서 적을 맞는 ‘연합의 악몽’을 두려워해, 프랑스와 러시아가 손잡지 못하도록 복잡한 동맹을 직접 관리했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발칸 경쟁을 중재했다. 그의 절제와 외교 역량은 1890년 이후와 대비할 때 분명해진다. 빌헬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퇴진시키고 재보장조약 갱신을 거부하자 러시아는 1894년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고, 독일의 해군 증강과 ‘세계정책’은 영국을 프랑스와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했다. 같은 국력의 독일이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균형의 관리자에서 위협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1871년 이후의 평화는 체제 수준의 동맹망과 영국의 균형자 역할, 국가 수준의 자제와 공통 이해, 개인 수준의 비스마르크 외교가 맞물린 결과였다. 이 조건들이 1890년 이후 하나씩 무너지면서 유럽은 경직된 두 진영으로 나뉘었고 평화도 끝났다.

30점 · 2)는 '국제체제 → 국가 → 개인' 세 수준을 소제목처럼 나누고, 마지막에 1890년 이후와 대비해 개인 수준의 비중을 보여준다.

2024 제3문

유럽협조체제 이후의 세력균형과 강대국 협조의 계승

총 30점 · 소문 2개 (14 · 16)

제3문. 유럽협조체제는 패전국이던 프랑스를 강대국의 일원으로 합류시킨 결정이었다. 국제정치적 상황은 달라졌지만, 강대국 간 협조를 통해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1815년 유럽협조체제 성립 이후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력균형의 구조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시오. (14점)
-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협조체제와 같은 강대국 간 협력 시도의 두 가지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16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1)은 1815~1914년 세력균형 구조가 ‘유연한 다극 → 경직된 양 진영’으로 바뀐 과정을, 2)는 협조체제의 정신을 이은 20세기의 강대국 협력 사례를 묻는다.

연결 개념 오대 강국, 크림 전쟁, 통일 전쟁, 비스마르크 체제, 러불동맹, 삼국협상, 국제연맹 이사회, 로카르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함정 2)의 ‘그 이유’를 빠뜨리지 않는다. 사례마다 **왜 강대국 협조라는 형식을 택했는가**를 쓴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사실	분량
1)	네 단계: ① 1815~1848 오대 강국의 협조 ② 1848~1871 크림 전쟁과 통일 전쟁 ③ 1871~1890 독일 중심의 비스마르크 체제 ④ 1890~1914 양 진영의 경직화	연표 1	약 850자
2)	사례 ① 국제연맹 이사회와 로카르노(독일의 편입) ②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 → 이유: 전쟁 재발 방지, 강대국의 책임과 특권, 패전국 편입, 정당성	국제연맹, 로카르노, 유엔 헌장	약 950자

예시답안 — 2024 제3문

유럽협조체제는 패전국 프랑스를 강대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강대국 간 협조로 질서를 관리한 체제였다. 아래에서는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세력균형의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계승한 강대국 협력의 사례와 그 이유를 설명한다.

1) 1815~1914년 세력균형의 구조적 변화

첫째 단계는 1815년부터 1848년까지의 **협조적 다극 체제**이다.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프랑스의 오대 강국이 대체로 대등한 힘을 가졌고, 회의를 통해 세력균형을 공동으로 관리했다. 영국은 혁명 개입에 반대하며 회의 체제에서 멀어졌지만, 위기 때 협회하는 관행은 유지되었다.

둘째 단계는 1848년 혁명 이후 1871년까지의 **균형의 동요기**이다. 1853~56년 크림 전쟁은 영국·프랑스와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한 전쟁이었고, 오스트리아의 태도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협력이 깨지면서 협

조체제의 기반이 약해졌다. 이어 이탈리아 통일 전쟁,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1870~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거쳐 중부 유럽에 통일 독일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등장했다.

셋째 단계는 1871년부터 1890년까지의 **독일 중심의 동맹 체제**이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독일이 늘 다수 편에 서도록 삼제동맹, 독오동맹, 삼국동맹, 재보장조약을 맺었다. 세력균형은 회의보다 동맹 조약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그 동맹망은 비스마르크의 조정 아래 유연했다.

넷째 단계는 1890년부터 1914년까지의 **양 진영으로의 경직화**이다. 재보장조약이 갱신되지 않자 러시아와 프랑스가 1894년 동맹을 맺었고, 독일의 해군 증강과 세계정책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고립을 버리고 1902년 일본, 1904년 프랑스, 1907년 러시아와 협상을 맺었다. 그 결과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의 삼국동맹과 영국·프랑스·러시아의 삼국협상이 대립하는 구도가 굳어졌다. 모로코 위기와 발칸 위기가 반복되면서 동맹은 더 결속했고, 유연한 다극 균형은 위기가 곧 전면전으로 번지는 경직된 양 진영 구조로 바뀌었다.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협력의 두 사례와 그 이유

첫째 사례는 **국제연맹 이사회와 로카르노 조약**이다. 국제연맹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을 상임 이사국으로 하는 이사회를 두어 강대국이 평화 유지의 핵심 책임을 지게 했다. 1925년 로카르노 조약으로 독일은 서부 국경을 인정하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를 보장했으며, 독일은 1926년 국제연맹에 가입해 상임 이사국이 되었다. 패전국 독일을 강대국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1818년 프랑스의 편입과 닮았다. 그 이유는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독일의 불만을 협의로 흡수해 수정주의를 완화하고, 강대국의 공동 보장으로 국경 분쟁을 막으려는 데 있었다.

둘째 사례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체제**이다. 1945년 국제연합 헌장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를 상임이사국으로 하고 이들에게 거부권을 부여했다. 그 이유는 첫째, 국제연맹이 강대국의 이탈과 불참으로 침략을 막지 못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평화 유지의 실질적 능력을 가진 강대국에 특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둘째, 거부권은 강대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결정에 구속되지 않게 함으로써 강대국이 기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다. 셋째, 전시 연합국의 협력을 전후 질서 관리로 이어 가려는 의도였다.

이후 냉전기의 유럽안보협력회의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강대국 및 주요국의 협조로 질서를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강대국 간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질서의 안정은 결국 강대국들이 공동의 규칙을 수용하고 책임을 분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30점 · 1)은 네 단계의 시기 구분을 먼저 제시하고, 2)는 사례마다 '내용 → 이유'를 짚지어 쓴다.

2016 제2문

러일전쟁 — 세력균형, 러일 화해, 동아시아

총 30점 · 소문 3개 (10 · 10 · 10)

제2문. 러일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국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러일전쟁의 원인을 세력균형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0점)
- 2) 포츠머스 강화조약(Treaty of Portsmouth) 체결 후, 러시아와 일본이 화해를 모색하게 된 이유를 삼국 협상과 삼국동맹 간 경쟁의 맥락에서 설명하시오. (10점)
- 3) 러시아와 일본 간 화해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동아시아 사건(러일전쟁)을 유럽의 동맹 경쟁과 연결해 보는 ‘세계적 세력균형’의 시각을 요구한다.

연결 개념 삼국간섭, 만주 문제, 영일동맹, 러불동맹, 영러협상, 러일협약, 세력권 분할, 한국 병합, 미국의 만주 철도 중립화안.

함정 2)의 핵심은 러시아가 패전 후 **발칸·유럽으로 관심을 돌리고**, 영국·프랑스가 러시아와 일본의 화해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3)은 한국과 중국(만주)에 대한 영향, 미국과의 관계를 함께 쓴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사실	분량
1)	러시아의 만주·한반도 팽창 → 일본의 위협 인식, 영국의 대러 견제(영일동맹) → 외적 균형의 결과로서 전쟁	1895, 1898, 1900, 1902	약 600자
2)	러시아: 패전·혁명 → 유럽·발칸으로 / 영국: 독일 견제 위해 영러협상 → 동맹국 일본과 러시아의 화해 필요 / 프랑스의 중개 / 일본: 전후 재정난과 만주 경영의 안정	1907 영러협상·러일협약	약 600자
3)	만주 세력권 분할, 한국 병합의 국제적 조건, 미국의 문호개방과의 마찰, 동아시아의 협상 체제로의 편입	1907~1916 러일협약	약 600자

예시답안 — 2016 제2문

러일전쟁은 동아시아의 국지전이었지만, 그 원인과 결과는 유럽 강대국의 동맹 경쟁과 긴밀히 연결되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관계를 재편했다.

1) 세력균형론으로 본 러일전쟁의 원인

세력균형론은 한 국가가 지배적 힘을 갖게 되면 위협을 느낀 국가들이 군비 증강이나 동맹으로 균형을 이룬다고 본다.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는 1895년 독일, 프랑스와 함께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얻은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게 했고, 1898년 뤼순과 다롄을 조차했다.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만주에 군대를 진주시킨 뒤 철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반도에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러시아의 팽창은 한반도를 자국 안보의 핵심으로 본 일본과,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 러시아와 경쟁하던 영국에게 위협이 되었다. 이에 영국과 일본은 1902년 영일동맹을 맺어 러시아에 대한 외적 균형을 이루었다. 동맹으로 제3국의 개입 위험이

줄어든 일본은 협상이 실패하자 1904년 전쟁에 나섰다. 즉 러일전쟁은 러시아의 지역 패권 추구와 이에 대한 영일의 균형화가 충돌한 결과였다.

2) 포츠머스 조약 이후 러일 화해의 이유

1905년 미국의 중재로 맺은 포츠머스 조약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빠르게 화해했다. 그 이유는 유럽의 동맹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패전과 1905년 혁명으로 약해진 러시아는 극동에서의 팽창을 접고 관심을 유럽과 발칸으로 돌렸다. 극동에서 일본과의 대립을 끝내야 서쪽에 힘을 집중할 수 있었다. 둘째, 독일의 해군 증강과 세계정책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1904년 프랑스와 협상을 맺은 데 이어 러시아와의 화해를 추진했다. 영국에게는 동맹국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영리 화해를 방해하는 요인이었으므로, 러일 화해를 지지했다. 셋째, 러시아의 동맹국 프랑스도 러시아가 극동에서 소모되지 않고 독일 견제에 집중하기를 원해 러일 접근을 도왔다. 넷째, 일본은 전쟁으로 재정이 고갈되어 전후 만주와 한국에서 얻은 이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러시아와의 타협이 필요했다. 그 결과 1907년 영러협상으로 삼국협상이 완성되던 해에 러시아와 일본도 제1차 러일협약을 맺었다. 러일 화해는 삼국동맹, 특히 독일에 맞서는 삼국협상 진영의 형성 과정의 일부였다.

3) 러일 화해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끼친 영향

첫째, 러시아와 일본은 1907년 협약의 비밀 조항으로 만주를 북부의 러시아 세력권과 남부의 일본 세력권으로 나누었고, 이후 1910년, 1912년, 1916년의 협약으로 협력을 강화해 사실상 동맹 관계로 나아갔다. 중국의 영토 보전은 형식으로만 남고 만주와 몽골은 세력권으로 분할되었다. 둘째,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영일동맹 개정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이어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1910년 병합하는 데 국제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가 변했다. 러일이 만주의 이권을 공동으로 지키자, 문호개방을 내세워 만주 진출을 모색하던 미국의 만주 철도 중립화 제안은 러일의 공동 반대로 좌절되었고, 미일 간 경쟁의 씨앗이 뿌려졌다. 넷째, 동아시아 질서가 유럽의 삼국협상 체제와 연결되면서 일본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의 협상망 속에서 지위를 굳혔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 편에 서는 배경이 되었다.

30점 · 소문당 10점이므로 세 단락을 비슷한 분량으로 쓴다. 조약과 협약의 연도를 정확히.

2020 제3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 한국 무장독립운동

총 30점 · 소문 2개 (20 · 10)

제3문.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소련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비판하며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전선에서 이탈했다. 이 조약에 따라 ‘체코 군단’(체코와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오스트리아군으로 징집되었지만,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 후 명목상 프랑스군 지휘 아래 오스트리아군과 전투를 벌였던 무장단체)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조약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과정과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20점)
- 2)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이 3·1 운동 직후 한국 무장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을 논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1918년 러시아의 이탈이 전쟁의 경과와 연합국의 간섭 전쟁을 낳고, 그 간섭이 시베리아·연해주를 거쳐 한국 독립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친 연쇄를 묻는다.

연결 개념 단독 강화, 동부전선 소멸, 1918년 독일 춘계 공세, 체코 군단, 시베리아 출병, 반볼셰비키 세력 지원, 연해주·만주의 독립군.

함정 2)는 사실관계가 세밀한 문항이다. 확실한 것(일본군의 시베리아 주둔과 연해주 한인 사회 탄압, 체코 군단의 무기가 독립군에 유입된 점,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 1921년 자유시 사건)을 중심으로 쓰고, 불확실한 수치는 쓰지 않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사실	분량
1)	전개: 동부전선 소멸 → 독일의 서부전선 집중과 춘계 공세 → 미국 병력 도착과 실패, 동부 점령지의 부담 / 연합국: 동부전선 재건 시도 → 체코 군단 봉기 → 간섭(무르만스크·아르한겔스크·블라디보스토크) → 반볼셰비키 지원·불승인	1918	약 1,200자
2)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 → 연해주·만주 한인 사회 탄압 / 체코 군단 무기 유입 → 무장 독립군 강화 / 소비에트의 반제국주의 연대와 그 한계 (자유시 사건)	1919~1921	약 600자

예시답안 — 2020 제3문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볼셰비키 정부가 독일과 맺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해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연합국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적대를 낳았고, 그 파장은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거쳐 한국 독립운동에까지 미쳤다.

1)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의 영향

볼셰비키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즉각적 강화를 추구했다. 1918년 3월 독일 등 동맹국과 맺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탈하고, 폴란드와 발트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우크라이나와 핀란드의 독립을 인정하는 등 서부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이 조약은 첫째, 동부전선을 사실상 소멸시켰다. 두 전선에서 싸우던 독일은 동부의 병력을 서부전선으로 이동시켜 1918년 봄 대규모 공세를 펼쳤다. 연합국은 큰 위기를 맞았지만, 미국의 병력이 본격적으로 도착하면서 독일의 공세는 결정적 돌파에 실패했다. 둘째, 독일은 동부 점령지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상당한 병력을 남겨 두어야 했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등 자원 확보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셋째, 1918년 11월 휴전 협정으로 이 조약은 무효화되었지만, 동유럽에 독립국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연합국은 러시아의 단독 강화를 배신으로 보았고, 동부전선을 다시 세우고 러시아에 남은 연합국의 군수 물자가 독일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18년 러시아 북부의 무르만스크와 아르한겔스크,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군대를 보냈다. 둘째, 문제지의 체코 군단은 조약 이후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서부전선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1918년 5월 볼셰비키 정부와 충돌해 시베리아 철도 연선을 장악했다. 연합국은 체코 군단의 구출을 명분으로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시베리아에 출병했다. 셋째,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연합국은 볼셰비키 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반볼셰비키 세력을 지원하며 내전에 간섭했고, 파리 강화회의에서도 소비에트 러시아를 배제했다. 이로써 연합국과 소비에트 러시아 사이에는 깊은 상호 불신이 형성되었다. 일본은 다른 연합국이 철수한 뒤에도 1922년까지 시베리아에 군대를 남겨 영향력 확대를 꾀했다.

2)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이 한국 무장독립운동에 끼친 영향

첫째, 시베리아 출병으로 일본군이 연해주와 동만주 일대에 진출하면서 그 지역 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기지가 직접적인 탄압을 받았다. 1920년 4월 일본군은 연해주의 한인 사회를 공격했고, 같은 해 10월 이후 간도 지역에서도 독립군 토벌을 명분으로 한인 사회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둘째, 역설적으로 연합국의 정책은 독립군의 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시베리아를 거쳐 철수하던 체코 군단의 무기가 한인 독립군에 유입되어,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연합국의 간섭에 맞서던 소비에트 정부는 일본의 시베리아 주둔에 대항하기 위해 반제국주의 연대를 내세워 한인 무장 세력과 협력했고, 3·1 운동 직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 호소가 외면당한 상황에서 일부 독립운동 세력은 소비에트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지원은 자국의 이해에 종속되었고, 1921년 자유시 사건에서 한인 무장 부대가 무장 해제를 강요받는 과정에서 큰 희생이 발생하면서 무장독립운동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은 한국 무장독립운동에 탄압과 기회, 그리고 강대국 정치의 한계를 함께 안겨 주었다.

30점 · 1)은 '전쟁의 전개'와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을 나누어 쓰고, 2)는 영향의 경로를 셋으로 정리한다. 확실한 사실만 썼다.

2021 제3문

20세기 전반 미일관계 — 문호개방에서 삼국동맹까지

총 30점 · 소문 2개 (10 · 20)

제3문.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는 미일관계가 대체로 협력적이었다. 반면, 1930년대부터는 양국관계가 악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다. 20세기 전반 미일관계의 변화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2차 중일전쟁 발발 이후 미일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 2) 2차 중일전쟁 발발 이후 미일갈등이 일본의 남방침략, 일소중립조약 체결, 일본의 삼국동맹 가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미국의 문호개방 원칙과 일본의 '동아 신질서'가 충돌하는 과정, 그리고 미일 갈등과 일본의 남방 진출·대소 관계·추축국 동맹이 서로를 강화한 과정을 묻는다.

연결 개념 문호개방, 워싱턴 체제, 스티븐슨 독트린, 동아 신질서, 통상항해조약 폐기, 금수, 남진론과 북진론, 삼국동맹, 일소중립조약.

합정 2)는 문제가 나열한 순서(남방침략 → 일소중립조약 → 삼국동맹)와 실제 연대(북부 인도차이나 진주·삼국동맹 1940년 9월 → 일소중립조약 1941년 4월 → 남부 인도차이나 진주 1941년 7월)가 다르다. 실제 순서로 쓰여 세 사건의 **상호 연결**을 보여 준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사실	분량
1)	문호개방과 워싱턴 체제 → 1937년 전쟁 확대가 문호개방을 위협 → 격리 연설·동아 신질서 → 1939년 통상조약 폐기 통고 → 경제 압박	1899~1939	약 600자
2)	유럽 전황(1940) → 남진과 북부 인도차이나 → 미국의 금수 확대 → 삼국동맹(미국 견제) → 일소중립조약(북방 안정) → 독소전 후 남부 인도차이나 → 자산 동결·석유 금수 → 개전	1940~1941	약 1,200자

예시답안 — 2021 제3문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과 일본은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워싱턴 체제 속에서 협력했다. 그러나 1930년대 일본의 대륙 팽창은 미국이 내세운 문호개방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양국 관계는 결국 전쟁으로 치달았다.

1) 문호개방정책과 중일전쟁 이후 미일관계의 악화

미국은 1899년과 1900년 헤이 국무장관의 통첩으로 중국에서 모든 국가에게 통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중국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자는 문호개방 원칙을 내세웠다. 이 원칙은 1922년 워싱턴 회의의 9개국 조약으로 국제적으로 확인되었고, 일본도 이에 서명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미국은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스티븐슨 독트린으로 대응했지만, 경제 제재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전면화되자 일본의 군사 행동은 중국 본토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미국의 통상 이익과 문호개방 원칙을 직접 위협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7년 10월 침략국을 격리해야 한다는 연설로 경고했다. 1938년 11월 일본의 고노에 내각은 일본, 만주, 중국을 묶는 ‘동아 신질서’를 선언해, 문호개방과 9개국 조약 체제를 사실상 부정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국민정부에 대한 차관 등 지원을 시작했으며, 1939년 7월 미일통상항해조약의 폐기를 통고해 대일 경제 제재의 법적 장애를 없앴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원칙의 대립에서 경제적 압박의 단계로 악화되었다.

2) 미일갈등이 남방 진출, 삼국동맹, 일소중립조약으로 이어진 과정

첫째, 1940년 봄 독일이 서유럽을 석권하고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패배하자, 동남아시아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는 힘의 공백 지대가 되었다. 미국의 경제 압박으로 석유와 고무 등 전략 자원 확보에 위기를 느낀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남방으로 진출하려 했다. 일본은 중국 국민정부로 가는 지원 통로를 끊는다는 명분도 내세워 1940년 9월 북부 인도차이나에 진주했고, 미국은 이에 대응해 고철 수출 금지 등 제재를 확대했다.

둘째, 같은 1940년 9월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은 유럽 전쟁과 중일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가 체약국을 공격하면 서로 원조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일본은 독일과의 동맹으로 미국이 아시아에 개입하는 것을 억지하고, 남방 진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본이 추축국 진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대일 경계를 더욱 강화했다.

셋째, 남방 진출과 미국과의 대립에 대비하려면 북쪽의 소련과의 충돌을 피해야 했다. 일본은 독일·이탈리아·소련과 함께 미국에 맞서는 구상 아래 1941년 4월 소련과 일소중립조약을 맺어 북방의 안전을 확보했다. 소련도 독일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극동의 안정을 원했다.

넷째,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일본은 북진과 남진 사이에서 고민했으나 남진을 택했고, 7월 남부 인도차이나에 진주했다. 미국은 일본의 자산을 동결하고 8월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 석유 공급이 끊긴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 철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남아 자원 지대 장악과 대미 개전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은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다. 미국의 경제 압박은 일본의 남방 진출을 재촉했고, 일본의 남방 진출과 동맹 외교는 미국의 압박을 강화했다. 삼국동맹과 일소중립조약은 일본이 미국을 억지하고 남진을 가능하게 하려는 수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대일 강경론을 굳혀 충돌을 앞당겼다.

30점 · 2)는 문제의 나열 순서가 아니라 실제 연대 순서로 쓰되, 세 사건이 서로를 부른 연결 고리를 강조한다.

2023 제3문

뮌헨협정 이후와 중국의 대만 정책

총 30점 · 소문 2개 (10 · 20)

제3문. 1938년 3월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그해 9월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텐(Sudeten) 지방의 할양을 요구했다. 이에 9월 29일 뮌헨회담이 열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유화정책 차원에서 주데텐 지방의 독일 할양에 찬성하는 뮌헨협정에 합의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30점)

- 1) 뮌헨협정 이후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독일, 영국, 프랑스, 소련의 역사적 행보를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서술하십시오. (10점)
- 2) 최근 중국의 대만 정책이 동아시아 안보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뮌헨협정 사례를 통해 논하십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1)은 뮌헨에서 개전까지 네 강대국의 행보를 사실 중심으로, 2)는 뮌헨 유추를 오늘의 대만 문제에 적용하되 그 한계까지 논하게 한다.

연결 개념 유화정책, 보장, 독소 불가침조약, 비밀 의정서, 억지의 신뢰성, 수정주의 목표의 크기, 역사적 유추의 오용, 전략적 모호성.

합정 2)에서 ‘중국 = 나치 독일’로 단정하면 논증이 약해진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짚고, 동아시아 안보(한국 포함)에 대한 함의로 마무리한다. 2023년 이후의 사건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사실	분량
1)	독일: 1939년 3월 프라하·메멜, 폴란드 요구 / 영국·프랑스: 폴란드 보장, 재무장, 소련과의 협상 실패 / 소련: 집단안보에서 독소 불가침조약으로 / 9월 개전	연표 2	약 600자
2)	시사점: 제han적 양보의 위험, 억지 신뢰성, 동맹 결속 / 함의: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와 한국의 연루·방기 / 유추의 한계: 핵·상호의존·목표의 차이, 안보 딜레마	Khong 1992, 억지론	약 1,200자

예시답안 — 2023 제3문

1938년 9월 뮌헨협정은 유화정책의 상징이 되었고, 그 이후 1년 만에 유럽은 전쟁에 빠졌다. 아래에서는 뮌헨협정 이후 개전까지 독일, 영국, 프랑스, 소련의 행보를 정리하고, 이 사례가 중국의 대만 정책과 동아시아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논한다.

1) 뮌헨협정 이후 개전까지 네 강대국의 행보

독일은 뮌헨협정을 지키지 않았다.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곧이어 리투아니아의 메멜을 병합했다. 이어 폴란드에 단치히 반환과 회랑 통과를 요구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목표가 독일계 주민의 통합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화정책을 포기했다. 영국은 1939년 3월 말 폴란드의 독립을 보장했고 프랑스도 이에 동참했으며, 루마니아와 그리스에도 보장을 확대하고 재무장을 서둘렀다. 두 나라는 동유럽에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협상했으나, 상호 불신과 소련군의 폴란드 통과를 폴란드가 거부한 문제로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뮌헨 회담에

서 배제되어 서방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소련은 집단안보 노선을 버리고 1939년 8월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었으며, 비밀 의정서로 동유럽의 세력권을 나누었다. 동부의 위협이 사라진 독일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소련도 9월 중순 폴란드 동부로 진군했다.

2) 뮌헨협정 사례가 중국의 대만 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보고 통일을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근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과 회색지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뮌헨의 경험은 이 상황에 다음 시사점을 준다.

첫째,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의 목표가 무제한적일 때, 제한적 양보는 평화를 사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 요구를 부른다. 주데텐 할양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로 이어졌듯, 무력 위협에 대한 양보는 위협이 효과적이라는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억지는 의지와 능력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히틀러는 이를 서방의 나약함으로 읽었다. 대만해협에서도 현상 변경의 비용이 크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강대국 간 거래는 정당성을 잃고 지속되지 못한다. 대만 문제도 대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해법은 안정적이지 않다. 넷째, 잠재적 균형 세력 간의 불신은 침략자에게 기회를 준다. 서방과 소련의 협상 실패가 독소 불가침조약을 낳았듯, 동아시아의 지역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결속이 약하면 억지가 무너질 수 있다.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대만해협의 현상이 무력으로 변경되면 동아시아의 해상 교통로와 지역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과 함께 동맹 내에서 연루의 위험에 직면한다. 한국에게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함께 문제가 되므로, 억지력 강화와 함께 연루를 관리할 동맹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뮌헨 유추에는 한계도 있다. 콩이 지적했듯 역사적 유추는 정책 결정자의 판단을 단순화하고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첫째, 오늘의 미중 관계는 핵 억지와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 속에 있어 1930년대와 전쟁의 비용 구조가 다르다. 둘째, 중국의 목표가 히틀러처럼 무제한적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며,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영토 팽창이 아니라 내전의 미완결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셋째, 뮌헨 유추에만 기대어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면 안보 딜레마를 자극해 오히려 충돌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뮌헨의 교훈은 양보와 대결의 이분법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억지와 위기 관리 대화를 함께 유지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막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0점 · 1)은 네 나라의 행보를 시간 순서로 엮고, 2)는 '시사점 → 함의 → 유추의 한계'로 균형을 잡는다. 2023년 출제 시점 이전의 사실만 썼다.

제9장

외교사 II — 냉전기 동아시아와 미·중·소 삼각관계

연결 기출: 2017 제1문 · 2018 제3문 · 2025 제2문 | 함께 볼 장: 1장(신현실주의·공격적 현실주의), 3장(동맹 안보 딜레마)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9-1 핵심 개념	99
9-2 기출 풀이	101
2017 제1문 한국전쟁 — 소련의 동의, 중국의 참전, 봉쇄정책	101
2018 제3문 닉슨 독트린과 방기·연루	103
2025 제2문 중소분쟁과 미중 화해 — 신현실주의와 동맹딜레마	105

9-1 핵심 개념

냉전기 동아시아 문항은 한국전쟁(1950), 중소분쟁과 미중 화해(1969~1972), 닉슨 독트린(1969)이라는 세 장면에 집중된다. 세 장면은 모두 **미·중·소 삼각관계**의 변화이며, 이론적으로는 **현실주의의 동맹·균형 논리**로 설명하게 한다.

■ 연표 냉전기 동아시아(1945~1975)

연도	사건
1946 · 1947	케년의 ‘긴 전보’ · 「X 논문」 과 트루먼 독트린 — 봉쇄정책의 형성
1949	북대서양조약 체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50	1월 애치슨 연설 / 2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 4월 NSC-68 보고 / 6월 25일 전쟁 발발, 미 제7함대 대만해협 파견 / 10월 유엔군 38선 북진, 중국군 참전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앤저스(ANZUS) 조약
1953	7월 정전협정,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1954 · 1955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 바르샤바조약기구
1956 · 1958~1960	흐루쇼프의 스탈린 비판 · 중소 이념 분쟁 심화, 1960년 소련 기술자 철수
1968	1월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 8월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브레즈네프 독트린)
1969	3월 전바오다오(다만스키섬) 충돌 / 7월 닉슨의 괌 기자회견(닉슨 독트린) / 11월 닉슨-사토 공동성명(한국 조항)
1971	주한미군 제7사단 철수 / 7월 키신저 비밀 방중 / 8월 달러의 금 태환 정지 / 10월 중국의 유엔 대표권 획득
1972	2월 닉슨 방중과 상하이 공동성명 / 7·4 남북공동성명 / 10월 유신 체제

책임전가와 피흘리게하기

미어샤이머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위협에 직면한 강대국의 전략으로 균형화와 **책임전가(buck-passing)**를 구분했다. 책임전가는 위협에 직접 맞서는 비용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방관하는 전략이다. 또 경쟁국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경쟁국들이 서로 싸우게 부추기는 **미끼와 출혈(bait and bleed)**과, 경쟁국이 이미 관여한 분쟁을 길고 소모적으로 만드는 **피흘리게하기(bloodletting)**를 제시했다.

쓰이는 기출 2017 제1문 1)

답안 속 문장

“스탈린의 동의는 미국과의 직접 대결이라는 비용을 북한과 중국에 넘기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힘을 소모하게 만드는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고전현실주의

로즈(Gideon Rose)가 1998년 논문에서 이름 붙인 접근이다.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제체제에서의 **상대적 힘**이라는 체제 수준 변수에 의해 큰 방향이 정해지지만, 그 압력은 **단위 수준의 매개 변수**를 거쳐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매개 변수로는 지도자의 인식과 오인, 국가가 사회로부터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 국내 정

치 구조와 정당성, 전략 문화 등이 쓰인다. 신현실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개별 국가의 ‘그때 그 결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다.

대립 구도

체제 압력만으로 설명(신현실주의) ↔ 체제 압력 + 국내 매개 변수(신고전현실주의)

쓰이는 기출 2017 제1문 2)

답안 속 문장

“신고전현실주의로 보면 중국의 참전은 미군의 북진이라는 체제적 위협이, 마오쩌둥의 위협 인식과 신생 정권의 정당성 확보 필요라는 국내적 필터를 거쳐 나타난 결정이다.”

봉쇄정책의 군사화와 세계화

케넌(George Kennan)이 1946년 ‘긴 전보’와 1947년 「X 논문」으로 제시한 봉쇄는 소련의 팽창을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장기간 견제한다는 구상이었다. 1950년 4월 보고된 국가안보회의 문서 NSC-68은 대규모 군비 증강을 통한 군사적 봉쇄를 제안했는데, 한국전쟁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한국전쟁은 봉쇄를 **군사화**하고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적 범위**로 넓혔다.

쓰이는 기출 2017 제1문 3)

답안 속 문장

“한국전쟁은 NSC-68을 문서에서 예산으로 바꾸었다. 봉쇄는 그때부터 군사동맹과 해외 주둔의 체계가 되었다.”

닉슨 독트린과 데탕트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궐에서, 이어 같은 해 11월 연설에서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밝혔다. ① 미국은 조약상의 공약을 지킨다. ② 동맹국이나 미국 안보에 중요한 국가가 핵보유국의 위협을 받으면 방패를 제공한다. ③ 그 밖의 침략에 대해서는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되, 직접 위협받는 국가가 자국 방위를 위한 병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기를 기대한다. 이 원칙은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 그리고 소련과의 데탕트·중국과의 화해로 이어지는 대외전략 재편의 일부였다.

쓰이는 기출 2018 제3문, 2025 제2문 2), 2022 제1문 2)

답안 속 문장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아시아를 떠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시아의 지상전을 아시아 국가에 맡기고 미국은 핵우산과 원조로 물러서겠다는 선언이었다.”

9-2 기출 풀이

2017 제1문

한국전쟁 — 소련의 동의, 중국의 참전, 봉쇄정책

총 50점 · 소문 3개 (15 · 20 · 15)

제1문. 1950년 소련은 북한의 남침 제안에 대해 중국의 개입을 조건으로 동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지도부는 소련이 중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미군이 38선을 넘는 경우 소련이 공중전 지원을 한다면, 중국이 참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에서 미군이 38선을 넘은 후, 소련은 공중전 지원을 철회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 1) 책임전가(buck passing)는 공통으로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가 공동 대책을 모색하기보다는 타국에게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피흘리게하기(bloodletting)는 상대국이 다른 분쟁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두 개념에 기초하여 북한의 남침 계획에 동의한 소련의 결정을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 2)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지도부의 결정을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로 설명하시오. (20점)
- 3) 6·25전쟁이 미국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전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한 전쟁을 세 행위자(소련·중국·미국)와 세 이론(공격적 현실주의의 전략 개념, 신고전현실주의, 봉쇄론)으로 나누어 묻는다. 문제지의 사실(중국 개입을 조건으로 한 소련의 동의, 중국의 조건부 참전 약속, 소련의 공중 지원 철회)을 답안 곳곳에서 활용해야 한다.

연결 개념 책임전가, 피흘리게하기, 체제 압력과 국내 매개 변수, 위협 인식, 정권 정당성, NSC-68, 동맹망, 군사화.

합정 1)은 두 개념을 ‘각각’ 적용하라는 문제다. 2)에서는 체제 변수와 매개 변수를 분리해 서술해야 ‘신고전’현실주의 답안이 된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사실	분량
1)	책임전가: 미국과의 직접 대결 비용을 북한·중국에 이전, 개입 조건 / 피흘리게하기: 미중의 소모, 중국의 대소 의존 심화, 미중 접근 차단	Mearsheimer 2001	약 800자
2)	체제 변수: 미군 북진·대만해협·국경 위협 / 매개 변수: 마오의 위협 인식과 결의, 혁명 정권의 정당성과 동원, 동맹 의무와 대소 관계 / 소련 지원 철회에도 참전한 이유	Rose 1998, Christensen 1996	약 1,200자
3)	NSC-68의 실행·국방비 급증, 유럽의 군사화(통합 사령부·서독 재무장 논의), 아시아 동맹망과 중국 봉쇄, 인도차이나 지원	Kennan, NSC-68	약 900자

예시답안 — 2017 제1문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 결정, 소련의 동의, 중국의 참전, 미국의 대응이 얹힌 전쟁이었다. 문제지가 제시한 것처럼 소련은 중국의 개입을 조건으로 남침에 동의했고, 중국은 소련의 군사원조와 공중 지원을 조건

으로 참전을 약속했으나, 미군이 38선을 넘은 뒤 소련은 공중 지원을 철회했다. 아래에서는 이 과정을 세 이론적 시각에서 설명한다.

1) 책임전가와 피흘리게하기로 본 소련의 결정

책임전가는 공통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전략이다. 소련에게 미국은 냉전의 주적이었지만, 미국과 직접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핵을 독점한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컸다.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에 동의하면서 그 조건으로 중국의 개입을 요구했다. 전쟁이 북한에 불리해질 경우 미국과 싸우는 부담을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 지도록 한 것이다. 이후 미군이 38선을 넘었을 때 약속했던 공중 지원을 철회한 것도, 소련군이 미군과 직접 교전하는 상황을 피하고 지상전의 비용을 중국에 넘기려는 책임전가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피흘리게하기는 경쟁국이 다른 분쟁에 관여해 국력을 소모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소련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미국의 군사력과 자원을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 묶어 두고 소모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동시에 신생 중화인민공화국도 미국과의 전쟁에 휘말리면 국력이 소모되고 소련의 군사·경제 원조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독자 노선을 걷거나 미국에 접근할 가능성을 막고, 공산 진영 안에서 소련의 주도권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소련은 직접 비용을 최소화한 채 상대적 지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2) 신고전현실주의로 본 중국의 참전 결정

신고전현실주의는 대외정책의 큰 방향이 국제체제에서의 상대적 힘과 위협이라는 체제 변수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 압력이 지도자의 인식과 국내 정치라는 매개 변수를 거쳐 구체적 결정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먼저 체제 변수를 보면, 1950년 가을 중국이 마주한 위협은 분명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직후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보내 중국의 대만 통일을 막았고, 인천 상륙 이후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면서 압록강 국경에 미군이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은 산업 기반이 집중된 동북 지역의 국경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직접 마주하게 된다. 신현실주의의 시각에서도 이는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체제 변수만으로는 중국의 결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은 내전을 막 끝낸 신생 국가로 경제가 파탄났고, 공군과 해군이 사실상 없었으며, 문제지가 밝힌 대로 소련이 약속했던 공중 지원마저 철회되었다. 힘의 계산만 보면 참전은 지나치게 위험한 선택이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매개 변수이다. 첫째, 지도자의 인식이다. 마오쩌둥은 미국의 북진을 장기적으로 중국 혁명 자체를 위협하려는 의도로 인식했고, 미국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싸우는 것이 중국 영토에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지도부 내부에 신중론이 있었음에도 마오의 판단이 결정을 이끌었다. 둘째, 국내 정치와 정권의 정당성이다. 신생 공산 정권에게 외부 위협에 맞선 항전은 대중을 동원하고 국내의 반대 세력을 억누르며 혁명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는 계기였다. 크리스텐슨이 지적했듯 외부의 적은 국내 동원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셋째, 동맹 관계와 진영 내 지위이다. 중국은 1950년 2월 소련과 동맹조약을 맺었고,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 북한을 돕지 않으면 소련의 신뢰와 원조를 잃을 수 있었다. 참전은 소련에 대한 신뢰성을 보이고 원조를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결국 중국의 참전은 미군 북진이라는 체제적 위협에, 마오의 위협 인식과 혁명 정권의 동원 필요, 동맹 내 지위에 대한 고려가 결합한 결과였다. 소련의 공중 지원 철회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참전을 결정한 것은 체제 변수만이 아니라 이러한 국내 매개 변수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3) 한국전쟁이 미국의 봉쇄정책에 미친 영향

케넌이 구상한 봉쇄는 소련의 팽창을 주로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견제하는 것이었고, 전쟁 이전 미국의 방위선 구상에서 한반도는 우선순위가 낮았다. 한국전쟁은 이를 크게 바꾸었다. 첫째, 봉쇄가 군사화되었다. 1950년 4월 보고된 NSC-68은 대규모 군비 증강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실행이 불확실했

데, 전쟁이 일어나자 본격적으로 채택되어 미국의 국방비가 급증했다. 둘째, 유럽의 방위 체제가 강화되었다. 북대서양조약은 통합 군사 사령부를 갖춘 기구로 발전했고, 서독 재무장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유럽 주둔 병력을 늘렸다. 셋째, 봉쇄가 아시아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1951년 일본과 강화조약 및 안보조약을 맺고, 필리핀, 호주·뉴질랜드와 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1953년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대만해협에 대한 개입과 인도차이나의 프랑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넷째, 중국이 참전하면서 중국은 소련과 함께 봉쇄의 직접 대상이 되었고, 미중 간 적대는 이후 20년간 고착되었다. 요컨대 한국전쟁은 봉쇄를 유럽 중심의 정치·경제 전략에서 세계적 범위의 군사 동맹 체제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50점 · 문제지에 주어진 사실(소련의 조건부 동의, 중국의 조건부 참전 약속, 공중전 지원 철회)을 1)과 2)의 근거로 다시 쓴다.

2018 제3문

닉슨 독트린과 방기·연루

총 30점 · 소문 2개 (16 · 14)

제3문. 미국의 닉슨(Nixon) 대통령은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아시아정책을 발표했다. 독트린의 추진은 아시아지역의 냉전구조를 재편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닉슨 독트린’의 배경과 내용에 관해 설명하시오. (16점)
- 2) 닉슨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를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4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닉슨 독트린의 배경(국제·국내)과 내용을 정확히 쓰고, 같은 시기 한미관계를 스나이더의 동맹 안보 딜레마로 분석하게 한다.

연결 개념 베트남전의 수렁, 중소분쟁, 다극화, 데탕트, 미군 감축, 자주국방, 방기·연루, 1968년 위기, 미중 화해.

합정 2)에서 ‘방기’만 쓰고 ‘연루’를 빠뜨리기 쉽다. 연루는 한국의 베트남 파병(한국 측)과 1968년 위기 때 한국의 보복 요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미국 측) 양쪽에서 찾을 수 있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사실	분량
1)	배경: 베트남전·국내 반전 여론·재정과 달러 문제, 중소분쟁과 다극화 / 내용: 괌 기자회견, 세원칙, 베트남화와 주둔 축소	1969	약 950자
2)	한국의 방기 우려(미군 감축, 미중 화해, 협의 부재) → 자주국방·남북대화 / 연루: 한국의 베트남 파병, 미국의 대한 억제 → 비대칭 동맹의 딜레마	Snyder 1984, 1968~1972	약 800자

예시답안 — 2018 제3문

1969년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진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대외 전략을 재편하려는 선언이었다. 아래에서는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닉슨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를 동맹의 방기와 연루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1) 닉슨 독트린의 배경과 내용

국제적 배경으로 첫째, 베트남전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막대한 인명과 재정 손실을 입었고, 아시아 지상전에 대한 직접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둘째, 공산 진영이 단일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1950년대 말부터 이념 분쟁을 벌인 중국과 소련은 1969년 국경에서 무력 충돌했고, 이는 미국에게 중국을 소련 견제에 활용할 기회를 주었다. 셋째,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부흥으로 국제체제가 군사적으로는 양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다극화되었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 분담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문제가 심각해져 해외 군사 지출을 줄일 필요가 커졌다. 국내적 배경으로는 반전 여론의 확산과 개입에 대한 의회와 여론의 피로가 있었고, 베트남전 종결을 공약한 닉슨은 명예로운 철수의 방안을 찾아야 했다.

내용으로,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꾀 기자회견과 이어진 연설에서 다음 원칙을 밝혔다. 첫째, 미국은 모든 조약상의 공약을 지킨다. 둘째, 동맹국이나 미국 안보에 중요한 국가가 핵보유국의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방패를 제공한다. 셋째, 그 밖의 침략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되, 직접 위협 받는 국가가 자국 방위에 필요한 병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베트남전의 베트남화와 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으로 구체화되었고, 소련과의 대타트와 중국과의 화해로 이어지는 미국 대외 전략 전환의 출발점이 되었다.

2) 닉슨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와 방기·연루

스나이더에 따르면 동맹국은 동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인 방기와, 동맹국 때문에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들 위험인 연루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은 주로 방기를, 강대국은 주로 연루를 두려워한다.

이 시기 한국은 강한 방기 우려를 느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시도와 푸에블로호 나포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미국은 나포된 승무원 송환 협상에 집중하며 북한에 대한 보복을 자제했다. 닉슨 독트린에 따라 1971년 주한미군 1개 사단이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철수했고, 같은 해 키신저의 비밀 방중과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미국이 한국전쟁의 적국과 화해하자 한국의 불안은 커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받으려 하는 한편, 자주국방을 내세워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군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남북대화에 나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루의 측면도 있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미국의 전쟁에 깊이 참여했다. 이는 미국의 지원과 공약을 확보하려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동맹국의 전쟁에 연루된 것이기도 했다. 반대로 미국은 1968년 위기 때 한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자 한반도에서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들 것을 우려해 한국을 억제했다. 닉슨 독트린 자체도 아시아의 분쟁에 미국이 연루되는 것을 줄이려는 정책이었으므로, 미국의 연루 회피가 곧 한국의 방기 우려를 낳는 구조였다.

결국 닉슨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연루를 줄이려는 강대국과 방기를 두려워하는 약소국 사이의 전형적인 동맹 딜레마를 보여 준다. 이 경험은 한국이 자율성과 동맹 의존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30점 · 1)은 배경(국제·국내)과 내용을 나누고, 2)는 방기와 연루를 각각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쓴다.

2025 제2문

중소분쟁과 미중 화해 — 신현실주의와 동맹딜레마

총 30점 · 소문 2개 (10 · 20)

제2문. 1969년 중국과 舊소련은 우수리 강 전바오다오(珍寶島)/다만스키(Damansky) 섬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양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서방세계와 대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지만, 1950년대부터 이념분쟁을 겪다가 1960년대 말 무력분쟁까지 겪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1960년대 국제질서 아래서 중소관계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예측을 제시하고, 그 예측이 중소 무력충돌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 2) 미국이 중소분쟁 후 중국과 화해를 모색한 국내정치적 배경을 서술하고, 이러한 미국의 결정을 동맹딜레마(alliance dilemma)의 시각으로 분석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1)은 같은 진영의 두 사회주의 국가가 무력 충돌한 사실이 신현실주의 예측과 맞는지, 2)는 미국의 대중 화해를 국내정치와 동맹딜레마로 분석하게 한다.

연결 개념 양극 체제, 내적 균형, 위협균형, 이념의 부차성, 베트남전, 반전 여론, 삼각외교, 방기·연루, 적대 게임.

합정 1)은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측면에서 부합하고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지를** 쓴다. 2)의 동맹딜레마는 미국의 동맹국(대만·일본·한국)과의 관계에서 분석한다.

■ 답안 개요

소문	핵심 논점	쓸 이론·사실	분량
1)	양극 체제 → 초강대국의 동맹 의존 낮음, 동맹국은 이탈 가능, 근접한 강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 → 분열은 부합 / 무력 충돌의 시점·강도는 국내 정치·이념으로 보완	Waltz, Walt	약 600자
2)	국내 배경: 베트남전 수렁·반전 여론, 재정·국제수지 부담, 의회와 여론의 개입 피로, 닉슨의 정치적 계산 / 동맹딜레마: 미국은 연루를 줄이려 공약 축소 → 동맹국의 방기 우려(대만, 일본의 ‘닉슨 쇼크’, 한국) / 적대 게임의 유화가 동맹 게임을 흔들	Snyder 1984·1997	약 1,200자

예시답안 — 2025 제2문

1969년 우수리 강의 전바오다오(다만스키섬)에서 중국과 소련이 무력 충돌한 사건은 같은 사회주의 진영의 두 국가도 서로를 적으로 볼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미국이 중국과 화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중소관계에 대한 신현실주의의 예측과 무력충돌

신현실주의는 국가의 행동이 이념이 아니라 무정부 체제에서의 힘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1960년대 국제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였다. 월츠에 따르면 양극 체제에서 초강대국은 주로 자국의 능력에 의존하는 내적 균형으로 상대 초강대국에 맞서므로, 동맹국의 이탈이 체제의 균형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소련에게 중국은 필수적 동맹국이 아니었고, 중국도 소련의 통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동맹에 머물 이유가 줄어들었다. 또한 무정부 하의 국가는 자국의 생존과 자율성을 최우선하므로, 국경을 맞댄 강

대국의 힘의 증대는 그 국가가 같은 이념을 가졌더라도 위협이 된다. 월트의 위협균형론으로 보면 중국에게 소련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한 강대국이었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에도 무력을 쓸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신현실주의는 중소 동맹의 이완과 갈등을 예측하며, 이념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국경 분쟁이 무력 충돌로 이어진 것은 이 예측과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한계도 있다. 신현실주의는 동맹의 분열은 설명하지만, 왜 1969년이라는 시점에 왜 무력 충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문화대혁명기 중국의 국내 정치와 마오쩌둥의 정치적 동기, 중소 간 이념 논쟁의 격화는 충돌의 시점과 강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단위 수준의 변수이다.

2) 미국의 대중 화해의 국내정치적 배경과 동맹딜레마

국내정치적 배경으로 첫째, 베트남전이 장기화되면서 사상자가 늘고 반전 운동이 확산되어 미국 사회의 개입 지지가 무너졌다. 베트남전 종결을 공약해 당선된 닉슨은 명예로운 철수를 위해 북베트남의 후원국인 중국과 소련의 협조가 필요했다. 둘째, 전쟁 비용과 국제수지 적자로 미국의 재정과 달러의 지위가 압박을 받아 해외 군사 부담을 줄여야 했다. 셋째, 의회와 여론의 개입 피로 속에서 정부는 군사력보다 외교로 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넷째, 반공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가진 닉슨은 국내 보수층의 반발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중국과 화해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가졌고, 극적인 외교 성과는 재선에 유리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소분쟁은 중국을 소련 견제에 활용하는 삼각외교의 기회가 되었다.

이 결정을 스나이더의 동맹딜레마로 분석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의 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닉슨 독트린으로 아시아 동맹국의 지상 방위를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고, 주적이던 중국과 화해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상황 자체를 줄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연루를 줄이는 선택은 동맹국의 방기 우려를 키웠다. 대만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화해하면서 국제적 지위와 안보 공약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 일본은 사전 통보 없이 발표된 닉슨의 방중 계획에 충격을 받았고, 이는 이후 일본이 독자적으로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도 주한미군 감축과 미중 화해에 강한 방기 우려를 느껴 자주국방과 남북대화도 대응했다.

또한 스나이더가 말한 적대 게임과 동맹 게임의 상호작용도 나타났다. 미국이 적대국 중국에 유화적으로 접근하자 소련에 대해서는 협상력이 커졌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공약을 의심하게 되었다. 미국은 상하이 공동성명과 동맹국에 대한 공약 재확인으로 이 우려를 관리하려 했다. 결국 미국의 대중 화해는 연루 회피와 대소 견제라는 이익을 얻는 대신 동맹국의 방기 우려라는 비용을 감수한 선택이었다.

30점 · 1)은 예측 → 부합하는 점 → 한계의 순서, 2)는 국내정치적 배경 → 동맹딜레마 분석의 순서로 쓴다.

부록

참조 자료

A 연도별 문항 일람 · B 주제 색인 · C 이론가와 저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108
부록 B 주제 색인	109
부록 C 이론가와 저서	110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연도	문	주제	배점	수록 장
2026	1	카의 이익의 조화 비판 · 역외균형 · 지정학	40 (10·15·15)	7장
2026	2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출권거래제, 무역·기후 논란	30 (15·15)	5장
2026	3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전망이론 · 양면게임	30 (15·15)	4장
2025	1	무역정책: 요소·부문 모델 · 집단행동 · 선거제도	50 (20·15·15)	5장
2025	2	중소분쟁: 신현실주의 · 미중 화해와 동맹딜레마	30 (10·20)	9장
2025	3	AIIB: 신자유제도주의 · 신현실주의	20 (10·10)	5장
2024	1	아이켄베리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원칙과 도전	40 (12·14·14)	7장
2024	2	왈츠 합리적 억지론 · 조직과정모델의 반론	30 (14·16)	3장
2024	3	1815~1914 세력균형 변화 · 이후 강대국 협조	30 (14·16)	8장
2023	1	러-우 전쟁: 모겐소·월츠 · 제도주의 · 웨스트	40 (20·10·10)	1장
2023	2	인간안보 악순환·선순환 · 난민과 안보화	30 (16·14)	6장
2023	3	뮌헨협정 이후 · 중국의 대만 정책	30 (10·20)	8장
2022	1	냉전·탈냉전 동맹 비교 · 한미동맹 동맹 게임	40 (20·20)	3장
2022	2	패권안정이론 · 2008년 이후 패권 역할 축소	30 (20·10)	2장
2022	3	유럽협조체제 · 100년의 평화와 세 분석 수준	30 (10·20)	8장
2021	1	미중 불확실성 · 세력균형과 세력전이 · 이익균형	40 (10·20·10)	2장
2021	2	공격·방어 균형·구분 가능성 · 사이버 안보 딜레마	30 (10·20)	3장
2021	3	문화개방과 미일관계 악화 · 남진·삼국동맹·일소중립	30 (10·20)	8장
2020	1	독일·소련의 부상 · 신현실주의 · 동맹 신뢰성	40 (16·24)	2장
2020	2	양면게임 · 한미 FTA	30 (20·10)	4장
2020	3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 한국 무장독립운동	30 (20·10)	8장
2019	1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안정 · 세력전이론 비판	40 (20·20)	2장
2019	2	핵확산 낙관·비관론 · 안정-불안정 역설	30 (16·14)	3장
2019	3	모겐소 원조론 비판 · 빈곤 해소와 국익	30 (20·10)	6장
2018	1	월츠와 공격적 현실주의 · 오이 등의 협력론	40 (20·20)	1장
2018	2	삼위불일체 · 국제금융체제 안정 노력	30 (20·10)	5장
2018	3	닉슨 독트린 · 방기와 연루	30 (16·14)	9장
2017	1	한국전쟁: 책임전가·피흘리게하기 · 신고전현실주의 · 봉쇄	50 (15·20·15)	9장
2017	2	브레튼우즈 II의 특징과 지속가능성	30 (10·20)	5장
2017	3	글로벌 거버넌스: 힘·이익·정체성	20	6장
2016	1	금본위제: 영국의 패권 · 참정권 확대와 붕괴	50 (20·30)	5장
2016	2	러일전쟁 원인 · 러일 화해 · 동아시아 영향	30 (10·10·10)	8장
2016	3	집단사고의 문제점과 예방	20	4장

부록 B 주제 색인

개념에서 기출로 찾아가는 색인이다. 굵은 글씨는 그 개념이 직접 묻어진 문항,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다.

개념	기출 문항	개념 카드
고전적 현실주의(모겐소)	2023-1, 2019-3	1장
신현실주의(월츠)	2018-1, 2023-1, 2020-1, 2025-2, 2025-3	1장
공격적 현실주의 · 책임전가(미어샤이머)	2018-1, 2017-1 , 2026-1	1장 · 9장
신자유제도주의 · 무정부 하의 협력	2018-1, 2023-1, 2025-3	1장
구성주의(웬트)	2023-1, 2017-3	1장
세력균형론 · 위협균형론	2016-2, 2021-1 , 2020-1, 2024-3	2장
세력전이론	2019-1, 2021-1	2장
패권안정론	2016-1, 2019-1, 2022-2 , 2025-3	2장
이익균형론(슈웰러)	2021-1	2장
극성과 동맹 신뢰성 · 긴 평화	2020-1	2장
안보 딜레마 · 공격·방어 이론	2021-2 , 2021-3	3장
동맹 안보 딜레마(방기·연루)	2018-3, 2022-1, 2025-2 , 2023-3	3장
핵확산 낙관론·비관론	2019-2, 2024-2	3장
안정-불안정 역설	2019-2	3장
집단사고	2016-3	4장
양면게임 · 윈셋	2020-2, 2026-3	4장
전망이론	2026-3	4장
앨리슨의 세 모델	2024-2	4장
삼위불일체(트릴레마)	2018-2 , 2016-1, 2017-2	5장
금본위제 · 브레튼우즈 I·II	2016-1, 2017-2	5장
무역정책의 국내정치	2025-1	5장
탄소국경조정제도	2026-2	5장
글로벌 거버넌스	2017-3 , 2022-2	6장
대외원조	2019-3	6장
인간안보 · 안보화	2023-2	6장
자유주의 국제질서(아이켄베리)	2024-1 , 2026-1	7장
카의 이익의 조화 비판	2026-1	7장
역외균형 · 지정학	2026-1	7장
유럽협조체제 · 100년의 평화	2022-3, 2024-3	8장
러일전쟁 · 삼국협상	2016-2	8장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 시베리아 간섭	2020-3	8장
문화개방 · 미일관계	2021-3	8장
유화정책 · 뮌헨 유추	2023-3	8장
한국전쟁 · 봉쇄정책 · 신고전현실주의	2017-1	9장
닉슨 독트린 · 미중 화해	2018-3, 2025-2	9장

부록 C 이론가와 저서

답안에서 학자 이름을 쓸 때는 **저서와 핵심 명제를 짝지어** 쓴다. 아래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대표 문헌이다(연도는 초판 기준).

이론가	대표 문헌	핵심 명제
카(E. H. Carr)	『20년의 위기, 1919-1939』 (1939)	이익의 조화는 가진 국가의 이데올로기, 유토피아와 현실의 결합
모겐소(H. Morgenthau)	『국가 간의 정치』 (1948), 「대외원조의 정치이론」 (1962)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원조는 정치적 수단
월츠(K. Waltz)	『인간, 국가, 전쟁』 (1959), 『국제정치이론』 (1979), 「핵무기의 확산: 더 많을수록 더 나을 수 있다」 (1981)	세 이미지, 무정부·자조·극성, 양극 안정, 핵확산 낙관론
미어샤이머(J.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2001)	권력 극대화, 지역 패권, 책임전가·피흘리게하기
미어샤이머·월트	「역외균형론」 (2016)	지역 패권 저지에 한정된 선택적 개입
월트(S. Walt)	『동맹의 기원』 (1987)	위협균형론
오겐스키(A. F. K. Organski)·쿠글러	『세계정치』 (1958), 『전쟁 원장』 (1980)	세력전이: 불만족한 도전국과 세력 균등
킨들버거(C. Kindleberger)	『대공황의 세계, 1929-1939』 (1973)	안정자의 부재, 패권국의 공공재
길핀(R. Gilpin)	『세계정치의 전쟁과 변화』 (1981)	패권의 흥망과 패권전쟁
코헤인(R. Keohane)	『패권 이후』 (1984)	제도는 패권 이후에도 협력을 유지
엑셀로드(R. Axelrod)	『협력의 진화』 (1984)	반복 게임과 맞대응 전략
오이(K. Oye) 편	『무정부 하의 협력』 (1986)	보수 구조·미래의 그림자·행위자 수
그리코(J. Grieco)	「무정부와 협력의 한계」 (1988)	상대적 이득의 문제
웬트(A. Wendt)	「무정부는 국가가 만들기 나름이다」 (1992), 『국제정치의 사회이론』 (1999)	정체성과 이익의 사회적 구성, 무정부의 세 문화
슈웰러(R. Schweller)	「이익을 위한 편승」 (1994)	이익균형론, 사자·양·자칼·늑대
저비스(R. Jervis)	「안보 딜레마 하의 협력」 (1978)	공격-방어 균형과 구분 가능성
G. 스나이더(Glenn Snyder)	「세력균형과 공포의 균형」 (1965), 「동맹 정치의 안보 딜레마」 (1984), 『동맹 정치』 (1997)	안정-불안정 역설, 방기와 연루
크리스텐슨·J. 스나이더	「연쇄 결속과 책임전가」 (1990)	다극 체제의 동맹 행태와 공격-방어 인식
세이건(S. Sagan)	『안전의 한계』 (1993), 『핵무기의 확산: 논쟁』 (월츠와 공저, 1995)	조직이론에 기초한 핵확산 비관론
앨리슨(G. Allison)	『결정의 본질』 (1971)	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의 세 모델
재니스(I. Janis)	『집단사고의 희생자들』 (1972)	응집 집단의 만장일치 압력
퍼트남(R. Putnam)	「외교와 국내정치: 양면게임의 논리」 (1988)	수준 I·II, 원셋
카너먼·트버스키	「전망이론」 (1979)	준거점, 손실 회피, 손실 영역의 위험 추구
로즈(G. Rose)	「신교전현실주의와 대외정책 이론」 (1998)	체제 압력 + 국내 매개 변수

이론가	대표 문헌	핵심 명제
아이켄베리(G. J. Ikenberry)	『승리 이후』 (2001), 『자유주의 리바이어던』 (2011)	자유주의 국제질서, 헌정적 거래
러기(J. Ruggie)	1982년 논문	내장된 자유주의
폴라니(K. Polanyi)	『거대한 전환』 (1944)	100년의 평화의 네 제도, 자기조정적 시장 비판
아이켄그린(B. Eichengreen)	『황금 족쇄』 (1992)	금본위 신뢰성의 정치적 조건
먼델·플레밍	1960년대 초 개방 거시 모형	삼위불일체
둘리·폴커츠-란다우·가버	「부활한 브레튼우즈 체제에 관한 소론」 (2003)	브레튼우즈 II
로고스키(R. Rogowski)	『통상과 연합』 (1989)	요소 부존과 무역의 정치 균열
올슨(M. Olson)	『집단행동의 논리』 (1965)	소집단·집중 이익의 조직 우위
부잔·웨버·드 와일드	『안보: 분석의 새 틀』 (1998)	안보화, 화행, 비상 조치
매킨더 · 머헨 · 스파이크먼	「역사의 지리적 회전축」 (1904) ·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 (1890) · 『세계정치 속의 미국 전략』 (1942)	심장지대 · 해양력 · 주변지대
개디스(J. L. Gaddis)	『긴 평화』 (1987)	냉전 평화의 구조적·행태적 원인

AI 논술 첨삭 서비스

써봄

writegrow.net

직접 쓴 답안, 이제 바로 첨삭받으세요.

Google Gemini 3.1 Pro를 활용한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고칠 곳을 짚어 줍니다

논리구조

단락의 배치와 흐름이 논지를 따르는가

근거타당성

이론·조문·자료가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가

주장명확성

입장과 결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가

언어표현

문장이 정확하고 간결한가

영역별 점수와 함께 **강점 · 개선점 · 구체적 제언**을 담은 상세 피드백을 제공하고, 첨삭 결과는 PDF 리포트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DF·DOCX·TXT 파일을 올릴 수 있고, 여러 편을 한 번에 올리는 일괄 첨삭(최대 10편)도 지원합니다.

이 책과 함께 쓰는 법

- 1 기출 문항을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씁니다**
예시답안을 보기 전에 답안 개요를 세우고 끝까지 씁니다.
- 2 답안을 써봄에 올려 첨삭을 받습니다**
손글씨 답안은 옮겨 적어 TXT·DOCX로 올리면 됩니다. 영역별 점수와 고칠 곳이 바로 나옵니다.
- 3 책의 출제 포인트·예시답안과 비교해 다시 씁니다**
첨삭에서 약하게 나온 영역을 중심으로 같은 문항을 한 번 더 씁니다.

회원가입하면 3회 무료 분석

요금제	월 이용료
개인 — 수험생	9,900원
교사 — 교사·학원	29,900원

요금과 제공 내용은 2026년 9월 writegrow.net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writegrow.net

QR 코드로 바로 접속